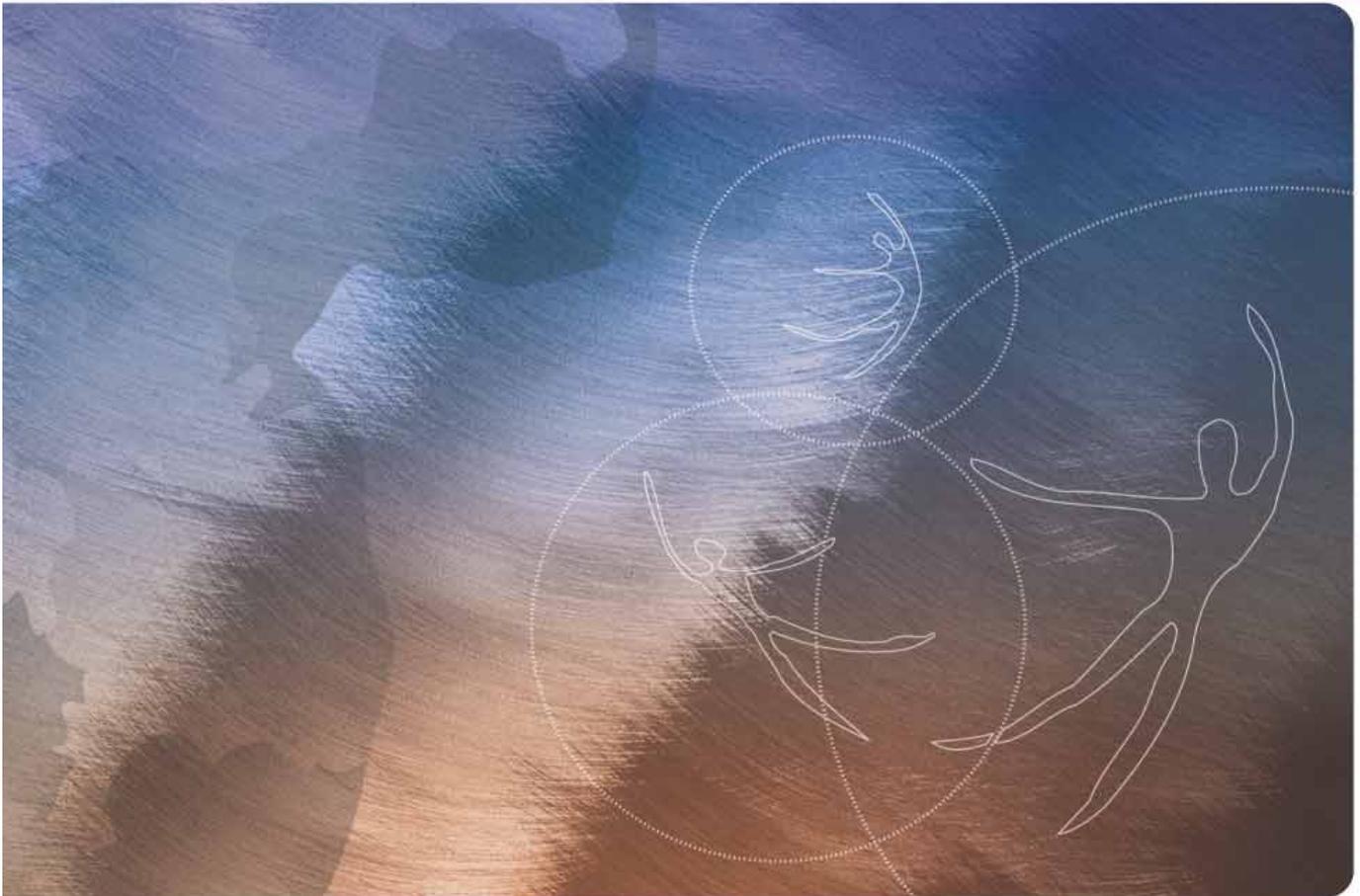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1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연미수순
수정상인
이황안김



한국여성개발원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2006. 12

연구책임자 : 이 수 연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황 정 미 (본원 연구위원)

안 상 수 (본원 연구위원)

김 인 수 (본원 전문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특별연구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원장	권 희 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연구실 교수
위 원	김 동 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 준 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수 연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한 건 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함 인 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06-02-01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6-02-02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파트너십 구축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6-02-03	한국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한국사회학회
2006-02-04	이념갈등과 사회통합: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2006-02-05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02-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통일연구원
2006-02-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여성개발원	이수연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황정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안상수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인순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발 간 사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변화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전 지구적 현상인 세계화, 안으로는 민주화와 다원화의 영향으로 제도적 구조와 함께 사회의 기본 전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성원들이 사회에 진입하면서 사회 전체의 양상이 변하고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간의 역학관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 사이의 분열로 치달을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인정을 통해 좀 더 통합된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본원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방향, 원칙 및 비전을 제시하여 조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로 3년째 협동연구인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외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 및 학회들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을 통해 명실상부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연구에 전심을 쏟아주신 원외 여러 연구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고서에 이름이 오르지 않는 않았으나 자료 수집에서부터 교정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연구지원을 해주신 연구조원들과 행정조원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협동연구를 이루어내기 위해 연구기획과 연구수행 외에도 연구자 교섭과 워크숍 진행 등 수많은 과제관련 업무에 협동과제를 중심으로 한 해를 보낸 올해 총괄과제연구진 및 2004년과 2005년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06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 장 서 명 선

연구요약

I. 서 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 추세는 우리 사회의 경제, 제도적 구조와 함께 기본적 전제를 바꿔놓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 간의 의견과 태도의 차이가 격렬한 대립양상을 몰고 와 예기치 않은 사회분열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국면은 오랜 동안의 권위주의적 사회 운용방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 사회로 가는 징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분법적 토론방식과 격렬한 표출방식은 양 극단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적절한 국민통합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국민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통합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통합의 방법을 시스템의 차원에서보다는 의식 및 문화의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국민통합을 위한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3년 동안 수행되었다. 1차 연도인 2004년에는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연구’를, 2차 연도인 2005년에는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3차 연도에는 1, 2차 연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통합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현실분석을 하며 이를 통한 국민통합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차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민통합의 개념 : 국민통합의 사회적 배경 변화, 현실분석을 위한 사회통합의 개념적 틀 정립, 국민통합의 방향 및 원칙에 대한 논의를 정리
- 나. 국민 통합을 위한 한국사회의 현실 분석 :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차별 현상에서 관찰되는 문제점들을 사회통합의 개념틀에 입각하여 총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
- 다.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의 제시 : 평등사회에 근접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의 공존, 관용성의 증대 등을 강조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

3.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 2) 전문가 워크샵 : 국내 전문가를 초빙하는 전문가 워크샵을 개최
- 3) 연구자 워크샵 : 총괄 과제 및 하부 과제 전체 연구진 간의 토론을 통해 협동과제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 4) 국제세미나 :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회통합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
- 5)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사회학회, 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학술대회를 개최.
- 6) 하부과제 기획 및 평가, 관리 (6개 하부과제)
- 7) 하부 과제 분석 및 통합 : 1, 2차 연도 과제를 포함한 하부 과제들을 통합한 분석

4. 연구의 한계

이 과제는 국민통합을 위한 현실분석에서 의식 및 문화의 차원을 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함. 또한 이 과제는 다년도 협동연구인데 1,2차 연도의 하부과제에서 다룬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

적이어서 모두 올해 연구의 틀에 포함하지 못함.

II. 개념적 논의

1. 국민통합의 개념

국민통합은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의식과 신뢰의 확립, 평화로운 질서유지를 위해 당위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내용과 원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다. 다시 말해 국민통합이란 다양한 주체들 간의 다층적 교섭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경계와 범위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재해석에 노출되어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회적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논리적이고 개념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국민통합을 논의되어야 한다.

2. 국민통합의 배경

대내적 환경 변화 역시 매우 복잡적이지만 크게 보아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냉전체계의 산물로서 분단국가에 머물러 있는 근대사적 배경과 아직도 남아있는 통일의 과제이다. 둘째, 이른바 ‘압축적 근대화’가 빚어낸 부작용으로서의 우리 사회 곳곳에 생성된 균열들(계층간, 지역 간 갈등 등)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갈등의 진원지로 자리잡고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 사이의 내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가. 세계화와 이주의 증대

(1)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위상 변화

세계화는 일차적으로 국민국가의 위상에 변화를 초래하는데, 국민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초국적 주체들, 즉 초국적 기업이나 국제기구 및 국제

법, 국제연대에 기반한 비정부기구(NGO) 들의 감시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재화와 자본의 이동은 물론, 노동 이주의 확대와 같은 인적 이동은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이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보편적인 추세로 인해 국경을 경계로 하는 사회통합은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 늘 불안정해지기 쉬우며 결국 세계화로 인해 국민통합의 범위는 국민국가의 국경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통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행위자들 뿐 아니라 초국가적인 행위자들 및 국제적 연대체들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구적인 공치(global governance)의 등장으로 요약된다.

(2) 이주의 증대

이주노동자들의 사회통합 문제는 단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국제결혼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가 증대하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사회가 보다 포괄적인 사회통합의 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라는 보편적인 전체 사회의 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주의 증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화적 쟁점들을 제기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인구 중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표성을 갖기도 어려운 소수민족 소집단(ethnic minorities)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수민족 공동체(ethnic communities)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공동체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주목할 현상은 바로 '이주의 여성화' 문제이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생계유지를 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의 측면에서 노동이주와 유사하지만, 또한 인권유린이나 결혼 알선기관의 횡포 등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사회 안에서도 전통적 가부장제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농촌사회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새롭고 낮은 가치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이주자의 증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주

목할 필요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 정체성을 수용하고 이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 민주화와 다원화

(1) 민주화와 사회갈등의 분출

민주화는 한국사회를 한층 성숙시키는 중요한 계기였으나 다른 한편 권위주의 하에서 억압되었던 다양한 갈등들을 일시에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민주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가 표출되었지만 ‘차이’들을 포용하는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갈등의 성격은 누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갈등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갈등이 일어나는 차원을 보면 제도적 차원과 문화 및 의식의 차원, 그리고 갈등의 원인 측면을 보면 물질적 이익의 충돌과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갈등의 해결은 제도적 차원과 의식의 차원 양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와 의식 수준에서 잠재되어 있는 갈등의 실태들을 드러내고 구성원들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통합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2) 압축적 성장이 가져온 급격한 사회변화

20세기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압축적 성장’ 또는 압축적 근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빠른 변화의 속도는 사회통합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우선 문제를 진단하고 대처할 방안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졸속 대응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비판이 난무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놓고 분열된 입장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세대별로 성장환경이나 경험이 다르다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확대될 것이며 이는 다시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3) 성 역할 분화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의 증대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 일각에서는 성평등 신장에 대한 반대 정서가 나타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여성 정책은 여성만을 지원함으로써 결국 남성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호주제 폐지나 군가산점제 폐지 등을 둘러싸고 여성과 남성 간의 성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성평등 정책이 추구하는 여성의 차별 해소와 권리신장은 지금까지 남성들이 당연시 해왔던 남성중심적 관행의 변화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법과 제도에서 성평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관행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젠더파트너십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 통일을 향한 환경 조성

(1) 분단과 민족관념의 왜소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민통합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한국의 분단 상황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21세기까지 물려준 셈이다. 분단 이후의 체제 경쟁과 이념대립 과정 안에서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민’이라는 틀이 만들어 졌으며 한반도에서 민족은 ‘피를 나눈’ 형제, 혈연공동체라는 측면만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혈연공동체라는 전통적인 민족개념 만으로는 통일 이후의 통합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상이한 정체성, 상이한 계층, 상이한 지역을 포괄하는 민족 개념을 형성해갈 필요가 있다.

(2) 민족공동체 전망의 확대

최근 통일과 관련된 환경 변화에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은 생존을 위해 북한의 국경을 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터민들이 겪고 있는 정

체성의 혼란은 남북한의 동질성 확대나 통일 이후의 민족정체성 확립의 방향에서 고민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미리 드러내준다. 시야를 좀 더 넓혀 본다면 통일 이후의 민족 정체성은 한반도의 범위를 뛰어 넘는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함께 수반하는 것이다.

3. 국민통합의 방향

가. 21세기적 국민국가와 시민권 개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화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점 중의 하나는 국민국가 위상변화에 관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국가들 간의 국제관계로 확립되어 왔던 베스트팔렌 체제가 서서히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자간, 양자간 협정이나 조약들은 국가 간 관계 뿐 아니라 국가 내부의 세력 관계에도 상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 인권과 시민권의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국민국가 내부의 소수집단의 권리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과 개입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역 통합을 형성한 EU에서는 시민권의 개념도 국민국가의 영토를 넘어 확장되어 오늘날 EU 개별 회원국의 모든 시민은 EU 내 어느 나라든 여행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거주국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물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상황은 EU와 매우 다르지만 그러나 전지구적 이주 및 지역 내 이주가 점차 늘어남으로써 국민국가의 범위 안에 소수자 내지 이주자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민족주의 관념은 반주변부(semi-periphery)의 위치에서 비롯되는 이중성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강대국에 위협 앞에서 민족자결권을 주장하고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식의 강한 발전주의적 동기가 존재한다.(독도 문제에 대한 분노, 월드컵 열광)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한국으로 유입해 들어온 외국인이나 소수자를 배제하고 주변화시키는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가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시민권’ 모델에 대한 성찰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의 시민권 모델은 배타적인 민족적 통합(ethnic integration)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족적 통합을 시민적 통합(civic

integration)의 틀과 융합시켜나가는 이중적이면서 포괄적인, 보다 보편주의적인 통합의 틀을 지향해야 하며, 다문화주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지상목표로 삼아온 발전주의 국가체제와 결합되어 있는 민족주의의 한계에 대한 성찰이 동반되어야 한다.

나. 사회통합과 평등사회의 구현

국민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는 첫째, 사회 내부에서 증대하고 있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둘째 사회통합의 원리를 어떻게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양성과 이질성을 용인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체계통합은 사회가 하나의 수미일관한 체계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재화의 분배체계와 이를 관리하는 행정적 체계의 기능적 통합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은 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련되는 것으로 “구성원들이 서로의 특징이나 개성을 상호주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배워나가는 것”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와 상징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체계통합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회통합의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회통합은 구성원을 포괄(inclusion)하는 것이며 이는 합의된 경계 안에서 나와 타인의 차이를 타협하는 과정이다. 사회통합을 훼손하는 차별이나 소외, 그리고 갈등의 문제는 체계 자체의 정비와 더불어 차이와 차별받은 집단, 소외된 사람의 입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문화, 의식적 차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통합적 가치의 형성에서 ‘평등’은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불평등에 기초한 사회통합은 전통 신분사회에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평등한 사회의 실질적 실현에 대한 신뢰 여부는 사회통합의 결속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경향은 이러한 다양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더 이상 동질적 구성원만을 전제로 하는 평등 즉 '같은데 기초한 평등'은 사회통합의 원리로 작동하기 어려우며, '다름에 기초한 평등'이 새로운 통합의 원리로 수렴되어야 한다.

4. 국민통합의 원칙

가. 정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분배로서의 정의와 인정으로서의 정의를 구분해볼 수 있다. 분배적 정의는 자원의 분배를 중요시하고 취업, 교육, 생산, 소비 등 좀 더 물질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은 개인의 건강한 정체성의 형성을 위해 타인과의 동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단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인정도 언급한다.

프레이저(N. Fraser)는 정의가 분배 혹은 인정 중의 하나의 원인에 기인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안티테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분배와 인정은 상호배제적인 분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흔히 정체성 인정의 문제라고 간주되는 여성, 성적 소수자, 소수 민족 등의 문제도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정의를 진단하는 시각을 경제주의(economism)와 문화주의(culturalism)로 구분하고 양자의 연관성을 이중적 관점(perspectival dualism)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전망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동시에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적 개념을 필요로 하며 프레이저는 이를 위해 인정의 지위 모델(status model)을 제안한다. 프레이저는 배분과 인정이 모두 참여적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레이저의 이원적 정의론에 비해 호네쓰(A. Honneth)의 정의론은 일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정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호네쓰는 자신의 인정의 개념이 프레이저의 분배 개념에 선행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회에서 정의 혹은 그 반대로 불의의 경험은 인정 혹은 인정의 결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분배에 있어 정의의 부재도 실제로는 인정의 결여에 기인한다. 그는 인정의 세 영역을 사랑, 법, 그리고 성취로 구분한다. 결혼(사랑)과 아동기의 제도화는 '사랑과 돌봄'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정의 영역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로 법의 영역은 모든 구성원에게 법에 의한 평등성을 보장해주는 계기가 된다. 가장 마지막으로 대두되는 인정의 영역은 성취, 즉 능력의 인정이다. 성취로서의 인정 영역은 자원의 분배에 대한 합법적인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헤게모니적, 일방적인 성취의 가치관은 현 부르주아 사회가 규범적인 동의를 통해 자본을 분배하는 원칙을 제공하는 제도적 틀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네쓰의 다차원적인 인정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정의를 개념을 조작화하고자 한다. 첫째 정의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정의는 사회구성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때만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의는 심리적, 제도적, 그리고 물질적인 차원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정의는 단지 심리적이거나 단지 물질적인 차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 프레이저와 호네쓰의 공통된 주장이다. 셋째, 정의는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적 영역은 오랫동안 사회적 정의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영역을 정의의 적용에서 제외한 것이 여성차별을 존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넷째, 정의에 대한 규정은 합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 논의를 통해 얻어야 한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최대한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 관용성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 안의 비동질성 증대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그러나 차이의 관용이라는 것이 실행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미덕이다. 어떤 차이에 대해 관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그 차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차이가 싫지 않다면 이를 관용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관용의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도 결혼과 직장을 위해 해외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듯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외에 세대간 차이, 이념의 차이도 이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가 되고 있다. 이념 갈등의 문제는 실제 국민들 사이의 이념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되지도 않은 채 때로는 언론에 의해 실제보다 더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인들의 정치전략을 위해 왜곡되기도 한다.

셀리그만(A. Seligman)은 현대 사회에서의 관용성이 언제나 집단 혹은 집단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고 따라서 현대사회는 차이에 대한 관용의 미덕을 실천한다기보다는 집단 사이 경계를 소멸해왔다고 주장한다. 관용은 집단 정체성이 강한 사회에, 다시 말해 집단 사이의 경계가 뚜렷한 사회에서 더 필요한데 현대 사회는 경계를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경계를 흐리게 해서 관용의 필요성 자체를 축소시켜왔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이러한 추세를 다시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 각 곳에서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초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부상하고 있고 다시금 집단에 근거한 관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복잡한 양상을 볼 때 어디까지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어느 정도 관용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영역의 분석을 통해 합의를 이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 안에서의 차이는 점차 늘어갈 것이고 이러한 차이를 관용하고 나아가 선용하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해,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 신뢰

관용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불가능한 명제를 가

지고 있다면, 신뢰는 확신을 할 수 없고 동시에 위험성을 수반하는 상황을 선택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의 명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작동원리로서 신뢰의 개념은 점차 주목을 받고 있으나 다른 한편 신뢰는 필연적으로 위험성을 수반하는 개념이다. 즉, 불확실하고 복잡적이고 개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원만한 사회의 운영을 위해 신뢰는 꼭 필요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 개인들이 이를 자신들의 상호작용의 원칙으로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된다. 신뢰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은 교육제도 혹은 정책들이 개인들 사이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도에 스스로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데 이는 결국 이해관계의 충돌로 나타난다. 교육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키우고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오늘날 교육갈등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처럼 많은 경우 문제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에 대한 불신이 오늘날 많은 갈등의 중심에 있다. 근본적인 사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담론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려면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많은 부정부패가 존재하고 이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경우가 많다. 이는 앞에서 말한 시장에서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믿을 수 있는 원칙과 이에 따른 일관적인 시행, 그리고 위반에 대한 확실한 제재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공적영역에서도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되 여기에 대해 모든 이들이 책임감과 보상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III. 통합을 위한 현실 분석

1. 차이의 부상

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문화 차이

세계적으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성이주자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55,408명에 이르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 국적도 다양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문화적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언어와 이에 관련한 문화수행의 차이, 일상생활양식의 차이, 그리고 가족구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어 습득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배경에는 한국어에 내재된 위계질서적 표현과 수행이 큰 몫을 한다. 또한 가족 구조와 이와 연계된 젠더 구조의 차이는 이들이 늦게 발견하지만 가장 수용하기 힘들다. 가족의 구성, 자기 본가와 남편 본가와 관계, 가족 내에서 남녀의 역할 구분과 권한의 차이, 시부모와 다른 시집식구와의 위계 질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전통적 공계(cognatic) 혹은 양변적(bilateral) 가족구조 출신의 동남아 여성들은 부계에만 초점을 맞춘 한국의 가족제도의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주여성들은 부부 간의 관계나 가사, 자녀 양육 등을 자신의 소관이며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 영역으로 간주한다. 결혼한 여성을 완전히 시집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집만을 섬기도록 하고 특히 여성의 본가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금하는 한국 시어머니의 태도는 이들이 한국으로 결혼해 올 때 전혀 예기치 못하던 일이다. 이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은 자연스럽게 가치 있는 일이며 또 이를 통해 친정에 경제적 보조를 함으로써 자신의 딸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바깥일을 못하게 하고 바깥일을 하는 것을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 좋지 않으며 “돈만 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이들의 시집식구들 또한 이런 며느리가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과 이주 여성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주여성들이 불만인 가운데서도 한국문화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반해 가족들은 이들 문화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남편들의 경우는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에 비해 부인의 배경문화에 대해 다소 관심이 높지만 시간의 제약과 자료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관심을 실행에 옮기는 기회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부인이 빨리 한국말을 터득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나. 새터민과 문화 차이

(1) 언어

남북이 공통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전제는 새터민들로 하여금 언어와 관련하여 오히려 더 갈등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면이 있다. 북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북한 사투리는 이들이 남한에 적응하기 위해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이다. 반면에 남한 사투리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으며 특히 고령자, 저학력자, 생산직과 단순 노무자의 경우 영어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2) 가족 및 젠더 구조

새터민 남성들은 남성우월의식과 남존여비관에 익숙하여 새로운 젠더구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극단적으로는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강한 새터민 남성의 경우 이쪽에 와서 의식의 변화를 겪은 부인이 남편의 권위의식에 저항할 경우 가정폭력으로까지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고 한다. 반면에 남한의 젠더 구조와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지 않다. 새터민 여성 중에도 새로운 젠더 역할 구조에 불편함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새터민 여성들은 남한의 남녀평등관과 여권의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의식변화를 경험하며 일부는 남편에게도 의식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이러한 태도를 “못된 것부터 배운다”로 간주하고 이것을 새터민 부부간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한다.

(3) 직업 윤리 및 가치관

직업세계는 무엇보다 새터민과 다른 국민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새터민의 입장에서 직업세계에서의 첫 장벽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업적 능력과 경험이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터민들이 한국의 직장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는 장벽은 남북한 간 노동 강도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북한의 ‘그럭저럭 시간 때우기’와 한국의 ‘죽기 살기로 일하기’의 대조로 표현될 수 있다. 노동 강도는 근무태도,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노동규율로 연결된다. 새터민들은 한국의 노동 강도나 근무태도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진다. 한편으로 일의 양과 질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에 거부감도 있고 특히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근무량 때문에 일을 그만 두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책임감을 인정하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력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4) 개인주의와 경쟁체제

한국 근로자의 열성적 근무방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직장에 서나 다른 분야에서의 개인주의적 태도와 지나친 경쟁체제에 대해서는 새터민들은 부정적이다. 새터민들은 남한의 직장문화가 “동료들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주의적이며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생각한다. 직장동료를 맘 편히 믿고 대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에게만 가두어놓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새터민의 눈에 보이는 한국의 직장문화이다.

이처럼 새터민과 나머지 국민들과의 차이는 없는듯하면서 있고, 좁은듯하면서 넓다. 이 차이의 해결은 주로 새터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해소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남한 주민의 차원에서도 차이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

다. 청소년과 부모의 문화 차이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문화적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접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와 정보기기의 이용이다. 이 외에 텔레비전 시청이나 음악 감상에 있어서도 청소년과 성인의 취향은 많은 차이가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문화 자체를 더 즐기고 또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성인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문화자본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에게는 문화가 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취향에 대한 차이일 뿐 아니라 소비나 경제개념에 대한 차이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요즘 청소년들은 소비를 즐기는 소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영역이 과연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 가장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되는 바는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 사이의 가치관의 유사성이다. 학업에 대한 가치관은 그 중의 하나이고 가족, 결혼, 직업 등에 관한 가치관에서도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사고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관의 유사성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 가치관이라 함은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의 행동은 성인의 그것과 적지 않게 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과 그 부모 세대 사이의 차이는 원칙적, 선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전략적, 행동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적 차원에서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공동의 생활영역을 만들어 가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청소년과 부모의 문화적 차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가정에서 문화적 활동의 기여는 특히 남성들의 낮은 문화적 관심 때문임을 선행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를 통해 자녀들과 가까워지려는 부모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라. 이념 차이

이념의 차이에 따른 갈등은 한국 사회가 처음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념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념의 차이는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정치이념과 사회경제이념을 통합한 객관적 이념지수를 보면 중도가 54.8%이고 보수는 25.6%, 진보는 19.6%이다. 평균적인 응답경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수에 더 가까운데 흥미로운 것은 정치 이념에 있어 보수성(5점 척도에서 2.16)이 높고 사회경제이념에 있어 진보성(3.45)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경제 이념에서의 진보성과 정치 이념에서의 보수성은 대부분의 측정항목을 통해서 재연되어 우리 사회의 이념 성향이 구조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념적 태도에서 소득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이념갈등에 계급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념갈등은 허위적이거나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념갈등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념갈등이 계급적 균열구조에 의해 매개되거나 아니면 계급적 기반을 가진 집단과 조직만이 이념갈등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념 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 학력, 성별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과 학력은 통합이념지수와 분야별(정치, 사회경제) 지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대체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보수적인 경향이 높아진다. 반대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진보적인 경향이 높아지는데 단 30대가 20대보다 진보의 경향이 더 높아 예외적이다. 학력 변수는 대졸의 효과로 나타나는데 즉, 대졸 집단에서 진보의 비율이 가장 높다. 여성은 사회경제적 이념에 있어 남성에 비해 약간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이념 차이는 경제 구조에 기인한 계급적 차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즉, 문화적 취향이나 선호처럼 세대나 학력, 그리고 성별의 변수의 영향을 더 받으며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가 최근의 이념갈등이 사회에 대한 순기능적 결과보다 역기능적 결과를 더 많이 가져온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이념갈등이 국민 내부의 이념의 분포나 차이에 기인하는 바에 비해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매개되고 동원되어진 바가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념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언론과 정치권이 이념적 매개와 동원을 자제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해의 충돌

가. 계층갈등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일관되게 심화되고 있으며, 임금소득자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산소득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부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계층별 양극화가 심각할 뿐 아니라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의 대립도 매우 격화되어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배·복지강화 논리와 시장·성장중심 논리의 대립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서구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보수당과 노동당(혹은 사회민주당)의 양당간 대립구도를 통해 오랜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민주적 정치제도 확립과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모두 성공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분배논리와 성장논리의 흑백론적 대립보다는 양자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타협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장·성장 중심논리와 분배·복지 중심논리는 흑백론으로 대립하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맞게 조합되고 조정됨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한국 사회 역시 21세기적 상황에 적절한 조정안을 만들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경쟁 위주의 합리적 시장질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없이는 국민적 동의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책 현실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에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둘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가 중요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려면 조세개혁이나 사회보험의

정비 및 확장이 필수적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면 국민들은 자신의 복지를 국가에게 맡기기 보다는 스스로의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나. 교육갈등

교육갈등도 1990년대 이후 드러난 사회갈등인데 이 또한 민주화 이후 사회구성원 및 집단의 참여의식 강화와 이로 인한 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첨예화에 따른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교육갈등 안에는 이념적인 요소도 있으나 교육갈등이 실제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논의보다는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평준화제도의 도입에 대한 갈등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이 외에도 평준화 정책 외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원평가, 사립학교법 제정, 그리고 대학입시제도에 있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권익대립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인 논리와 당위성 다툼 이면에 떠오르지 않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과 교육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주도권을 유지 혹은 새로 잡으려는 전교조, 교직원단체, 그리고 교장과 교사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갈등은 각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논리가 결합되어 이념 논쟁으로 진행되는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부상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의 확대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보와 사회분위기의 조성, 그리고 교육행정이나 정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각 집단의 이해를 추구하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때때로 격렬하고 과격해지는 것이 여러 교육갈등의 공통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지역갈등

여기서의 지역갈등은 그동안 영호남의 갈등으로 나타난 지역주의 혹은 지역차별과는 다른 맥락, 즉 혐오시설 회피나 선호시설 유치 등 보다 가시적인 이해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지역갈등은 민선 지방자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더구나 참여 정치를 내세운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 혹은 집단 이기주의가 분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의 진전과정을 보면 주민들이 행정결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도 없이 단편적인 과학성도에 근거하여 무조건 거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런 주민 권리의식과 이해관계에 대한 침예한 추구는 앞날의 끊임없는 갈등을 예고한다.

3. 구조 변화

가. 성별 역할 구조 변화

성별 역할을 나누는 기준이나 각 성역할의 내용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는 성별 역할에 대한 태도, 성별역할에 따른 사회적 분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젠더파트너십 조사를 통해 한국인들이 성별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한 인식에 성별 격차는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의식을 척도로 측정해 보면 남녀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연령집단 중에서는 20대 남녀 간의 양성평등 의식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다. 둘째, 직장인 의식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남성들은 성별 갈등이 여성들의 (안일한) 의식이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들은 기회의 불균등과 불공정한 분배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남성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낮다. 지금까지 여성들의 생활이 변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남성들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래 지향적인 젠더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질적이고 경직된 남성성이 아닌 다양하고 유연한 남성성 모델이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과 가족, 직장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넓은 시각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러한 역할 분담은 공정한 것인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바꾸어갈 것인가 등에 대해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토론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나. 생애주기 변화와 세대 분화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로 인해 세대간 경험의 격차는 매우 선명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세대 갈등이 오래 전부터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갈등이 현실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는 진단도 있다. 특히 연령효과, 코호트(cohort) 효과, 그리고 기간 효과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세대 차이가 과대평가된다는 지적을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세대 차이나 세대 갈등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한 세대간 경험의 차이, 특히 특정한 정치적 격변을 겪거나 사회운동에 참여한 코호트들의 특성과 상이한 코호트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대를 논하는 보다 큰 환경의 틀이 바뀌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령혁명(age revolution)이라고 불리우는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이며, 이는 생애주기와 가족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부터 예상되는 갈등 쟁점은, 첫째 늘어나는 노년층의 은퇴기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으므로 노인들의 취업과 생산활동 기회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세대간 갈등이 점차 부상할 것이다. 셋째, 교육이나 학업의 성취를 둘러싼 부모자녀 세대간 갈등, 취업난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IV. 정책 방안

1. 신뢰 구축

가. 거시적 차원

1) 법제도의 신뢰도 제고

가) 정치에서 법치주의 확보

나)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다)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2) 미디어의 순기능 제고

가) 미디어 감시의 제도화 : 미디어 모니터링에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기사 및 내용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와 미디어의 주도적 참여

나) 미디어의 공론장 제공 기능 강화 : 방송 토론 프로그램, 신문에서 독자기고란, 온라인 토론 활성화

나. 미시적 차원

- 1) 지역사회 공동체 경험의 강화 : 지역사회내의 시설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지속적 프로그램에의 주민참여 증대,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동체 경험 확대, 유아들의 플레이 그룹 등 다각적 프로그램 활성화.
- 2) 신뢰 교육 : 윤리적 능력 형성, 사회적 능력 형성, 민주적 시민이 되기 위한 기술(skill)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

2. 차이의 소통

가. 차이에 대한 이해 증진

- 첫째, 새터민을 지원하는 접촉자(신변보호관, 도우미 등 자원봉사자) 들에게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확대, 외국인 이주자를 지원하는 전문담당관이나 자원봉사자 확충 및 이들에게 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둘째, 국제결혼 여성들의 가족(남편, 시부모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확대.
- 셋째, 아시아 각 지역과의 문화예술 교류 증진 및 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한 지역축제를 정례화

- 넷째,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장점에 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 사회 교육 양 차원에서 모두 확대.
- 다섯째, 새터민이나 이주자를 지원의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이들이 남한 주민과 함께 참여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문화적 프로그램 확충.

나. 차이를 통한 발전

- 이주민들의 능력, 특히 외국어 능력이나 출신 사회에서 이전에 종사했던 직업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외국어 교사 등)
- 새터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북한에서 자신들이 종사했던 직업이나 경력을 인정받도록 지원, 안정적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 지원.
- 이주민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 정책 마련 : 다문화 가족의 혼혈 자녀,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진로 교육 및 상담.

3. 갈등해결의 제도화

가. 갈등관리 및 차별해소를 위한 법과 기구의 정비

-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갈등관리법은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정부 사업이 민간의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서 분쟁을 낳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간의 이견과 분쟁 등 주로 정부의 행정행위와 관련된 부문, 즉 공공갈등을 다룸. 갈등의 사전 예방 시스템과 갈등의 사후 조정 및 관리 시스템을 포함.
- 각 부처의 고위관료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공공갈등 관리기구 구성: 갈등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 실행에 옮기는 시스템 구축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인 실행력 강화.

나. ADR의 적극적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

-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확대 및 홍보강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법지원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제휴.
- ADR 기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민간 전문가의 양성 :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제휴하여 새로운 자격증을 창설하거나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양성기관의 운영 등을 검토.

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민간 인프라 구축

- 민간 단체나 NGO의 역할 강화 : 전문분야별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한 중재의 기준을 제시,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필요한 사회적 정책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
- 갈등 예방을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갈등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방안
- 다양한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 전문가 양성과 배출을 위한 구체적이며 사회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

4. 파트너십 형성

가. 젠더파트너십과 구축방안

1) 의식 차원

-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 일회적, 단편적인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의 기획
- 미디어의 양성평등성 제고의 새로운 전략 : 다큐멘터리, 퀴즈쇼,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젠더파트너십의 정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 교육 콘텐츠 모니터링 제

더파트너십 향상을 교육과정에 반영, 젠더파트너십 향상을 교육과정에 반영(학교장 재량교육, 논술교육 등), 교사 양성평등 교육,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젠더파트너십 교육 반영

- 남성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확대 : 남성의 학부모 모임 참여를 위한 저녁 휴일 모임 확대, 평생교육기관이나 문화교육기관에 남성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

나) 조직문화 차원

- 성과 평가에 여성 참여 확대 : 인사평가에 성인지적 접근 도입, 취업 면접 등에 여성임원(면접관) 참여, 인사평가자 중 어느 한 성이 일정 비율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등의 도입.
- CEO 및 임원진의 성평등 의식 교육기회 확대 : 정부 및 경제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인 교육이나 세미나에 성평등 의식 교육프로그램 도입, 산학협력과정이나 경영대학원 등의 CEO 과정에 필수교육과정으로 권장.
- 노조와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노사위원회 및 노동조합에 여성참여 증대, 성평등 문제를 노사협력의 중요한 이슈로 채택하도록 권장.
-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의 다양화 및 활용성 제고 : 직장인 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도입,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제공(스트레스, 정서문제, 결혼 및 가족문제, 노인보호,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 학업정보지원, 스트레스이완훈련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회사가 지원)
- 성희롱 방지교육의 젠더 파트너십교육으로의 전환 및 오프라인교육 활성화

다) 정책 차원

-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법적 정비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자체적으로 젠더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포괄적 법률의 제정(일-가족 양립지원법 혹은 가

촉진화기업 지원법 등),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현황 진단과 계획 수립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의사결정직 대상의 교육과 워크숍 체계화 : 고위 공직자, 법률이나 조례의 제·개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대상의 젠더파트너십 교육 실시.

나. 기타 파트너십에의 시사점

젠더파트너십 외에도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지역과 지역 간의 파트너십, 기업과 시민 간의 파트너십, 교사와 학생 간 파트너십, 부모와 자식 간 파트너십, 세대 간 파트너십, 그리고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파트너십 등 셀 수 없는 영역에서 파트너십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적절한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목 차

요약문	i
I. 서 장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8
4. 기대 효과	11
5. 연구의 한계	12
II. 개념적 논의	13
1. 국민통합의 개념	15
2. 국민통합의 배경	18
가. 세계화와 이주의 증대	19
나. 민주화와 다원화	23
다. 통일의 환경 변화	26
3. 국민통합의 방향	28
가. 21세기적 국민국가와 시민권 개념	28
나. 사회통합과 평등사회의 구현	33
4. 국민통합의 원칙	39
가. 정의	41
나. 관용성	51
다. 신뢰	57

III. 통합을 위한 현실 분석	65
1. 차이의 부상	67
가. 여성 결혼이주자와 문화 차이	67
나. 새터민과 문화 차이	74
다. 청소년과 부모의 문화 차이	79
라. 이념 차이	84
마. 소결	92
2. 이해의 충돌	93
가. 계층갈등	94
나. 교육갈등	104
다. 지역갈등	109
라. 소결	112
3. 구조 변화	114
가. 성별 역할 구조의 변화	114
나. 생애주기 변화와 세대 분화	123
다. 소결	126
4. 현실 분석의 개념도	127
IV. 정책 방안	129
1. 신뢰 구축	133
가. 거시적 차원	134
나. 미시적 차원	137
2. 차이의 소통	139
가. 차이에 대한 이해 증진	139
나. 차이를 통한 발전	143
3. 갈등해소의 제도화	146
가. 갈등관리 및 차별해소를 위한 법과 기구의 정비	146

나. ADR의 적극적 활용과 전문 인력 양성	148
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민간 인프라 구축	149
4. 파트너십 형성	150
가. 젠더파트너십과 구축방안	151
나. 기타 파트너십에의 시사점	162
참고문헌	165
부 록 : 하부과제 요약	179
I.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 파트너십 구축 방안	181
II. 한국의 이념 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199
III. 이념 갈등과 사회통합 :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207
IV. 청소년과 부모세대 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 방안	213
V.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223
VI.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231

표 차례

<표 1> 근로자의 임금소득 분배추이	91
<표 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	97
<표 3> 전 가구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OECD 국가 비교)	104
<표 4> 연령별 양성평등 의식의 성별 차이	118
<표 5> 조직문화 및 직장관행에 관한 남녀의 응답률	120

그림 차례

<그림 1> 3년 전체 연구 조직도	6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7
<그림 3> 다양한 갈등의 유형	24
<그림 4> 탈물질주의 가치	87
<그림 5> 통합을 위한 현실분석	128

I

서 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8
4. 기대 효과	11
5. 연구의 한계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 추세는 우리 사회의 경제, 제도적 구조와 함께 기본적 전제를 바꿔놓았다. 이는 때로는 일상적인 기대와 상식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여 이 사회를 사는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사회적응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 간의 의견과 태도의 차이가 격렬한 대립양상을 몰고 와 예기치 않은 사회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토론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종전에는 다수가 침묵하던 많은 이슈들에 대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논리를 제시하거나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시민들 사이의 의견 차이와 대립은 곧잘 시위의 형태로 표출되어 더욱 가시화되며 때로는 필요이상으로 과장되고 있는 경향도 있다. 맥아더 동상 사건, 미군 차량에 의한 의정부 여학생 사망 사건 등 대미 관련 이슈들, 강정구 교수 사건 등 대북 관련 이슈들, 그리고 황우석 교수 사건 같이 국가적 중요 안전이라고 간주되는 이슈들이 부각될 때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한 쪽은 시청 앞에서 다른 한 쪽은 광화문 앞에서 대단히 가시적인 의견표출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이슈들은 한국전 이후 한 동안 공개적 토론이 금기시되었고 수면 아래서 머무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한 이념논쟁은 월드컵을 계기로 대단히 가시적이고 격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국면은 오랜 동안의 권위주의적 사회 운용방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 사회로 가는 징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분법적 토론방식과 격렬한 표출방식은 양 극단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극단화는 표출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사고

4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방식이나 가치관에서 모두 느낄 수 있는 문제이다. 이념 문제를 위시해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젠더 문제 등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가 부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세계화로 인한 시장의 개방, 외부 인구와 다양한 문화의 유입과 공존 등은 모든 이슈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적절한 국민통합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정책과제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국민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통합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국민통합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통합의 방법을 시스템의 차원에서보다는 의식 및 문화의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물론 세제, 복지, 외교, 무역 정책 등이 시민의 상호관계 및 전체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고 따라서 국민통합을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각각 대단히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거시적인 차원을 가져서 여기서 동시에 논의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이러한 분야들이 야기하는 갈등이나 차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각이나 합의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국민통합을 위한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3년 동안 수행되었다. 1차 연도인 2004년에는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 방안 연구’를, 2차 연도인 2005년에는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국민통합에 차별이 장애가 된다는 전제하에 차별의 개념을 규정하고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차별 실태(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인 차별, 외국인노동자 차

별, 학력·학벌 차별, 지역차별 등)와 차별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해외 차별 시정기구 사례와 한국에 적용방안을 연구하였다. 2차 연도에는 한국사회의 갈등 사례(지역갈등, 환경갈등, 교육갈등, 가족·성별갈등)를 분석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제 및 인프라, 그리고 대안적인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3차 연도에는 1, 2차 연도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통합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현실분석을 하며 이를 통한 국민통합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국민통합의 개념

- 1) 국민통합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 검토 : 대외적, 대내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통합의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아울러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서 도출되는 통합의 과제들을 파악한다.
- 2)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관계 및 개념적 정립 :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현실분석을 위한 사회통합의 개념적 틀을 정립한다.
- 3) 국민통합의 방향: 국민통합이 어떤 범주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 4) 국민통합의 원칙: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원칙이 합의 되고 동의되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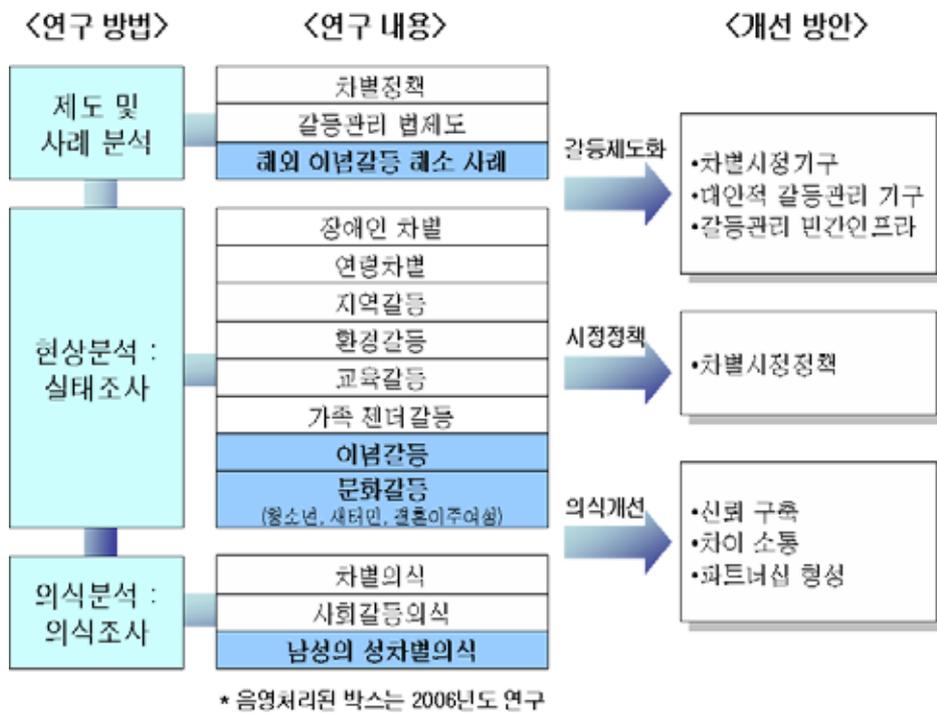
나. 국민 통합을 위한 한국사회의 현실 분석

한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차별 현상에서 관찰되는 문제점들을 사회통합의 개념들에 입각하여 총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하위 과제를 설정하였다.

6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 1)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파트너십 구축방안
- 2) 한국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 3) 이념갈등과 사회통합: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4)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 간 문화소통 방안
- 5)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 6) 여성 결혼이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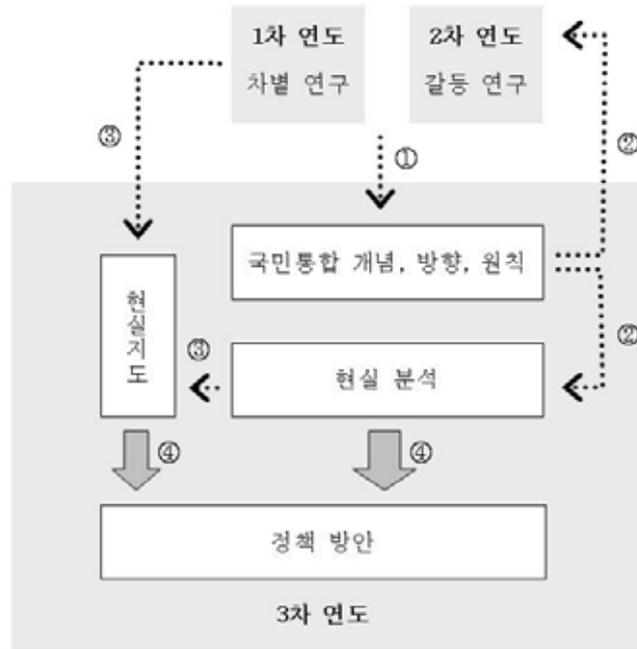
이 과제들은 1, 2차 연도 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1, 2차 연구들이 의식과 담론 분석과 함께 차별시정이나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 연구를 수행한 반면 3차 연도에는 의식 및 문화의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차별이나 갈등을 포괄하는 현실의 지도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 하부과제들과 전체 연구와의 관계는 다음 그림에 나타나있다.



<그림 1> 3년 전체 연구 조직도

다.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의 제시

사안별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결국 갈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인식과 관행, 제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되는 문제점의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평등사회에 근접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방향, 즉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의 공존, 관용성의 증대 등을 강조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개념, 세계화 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통합의 배경과 변화, 각 국의 사회통합 관련 쟁점과 해소 방안 등에 관한 문헌들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나. 전문가 워크숍

협동연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를 분석하는 연구과제들 사이의 분석틀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를 초빙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사회통합의 개념에 대한 토론, 서유럽 강소국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의 사회통합의 진로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안재홍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성장-복지-사회통합의 모델과 합의 정치 : 서유럽 강소국의 경험과 한국의 진로”
- 박명규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국민통합과 사회통합 - 개념적 검토”.

다. 연구자 워크숍

총괄 과제 및 하부 과제들의 전체 연구진이 모여 연구의 진행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협동과제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연구자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 일정 및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다.

- 1차 워크숍 (3월 27일) :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수정 보완 요구, 전체 연구일정 점검
- 2차 워크숍 (5월 19일) : 조사 설계 및 방법에 관한 종합 토론, 설문 문항에

대한 점검.

- 3차 워크숍 (7월 19일) : 연구 결과의 중간 발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과제별 토론 및 전체 연구의 체계에 대한 총괄적 토론 진행.

라. 국제세미나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회통합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재외 한국인 여성들과 민족 정체성 문제”(발표: 정영혜 교수)에 대해서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점증하는 이주의 동향과 이주자들의 민족 정체성에서 나타나는 갈등, 민족적 통합과 시민적 통합의 관계, ‘경계’에 위치하는 이주자들의 사회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다인종·다국적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의 사례 등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였다. 또한 “사회 이론, 사회의 도전과 의례의 잠재력”(발표 : 아담 셀리그만 교수)에 관해서는 사회통합의 개념적 정의 및 근대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동질적 사회통합 전망의 한계,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용성과 관련된 의례(ritual)의 잠재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International Workshop on Social Integration (2006. 7. 10~11)
 - Prof. Jung Young Hye (Otsuma Women’s University), “Korean Women in Diaspora and Ethnicity Trouble”
 - Prof. Adam Seligman (Boston University), “Social Theory, The Challenge of Society and The Potential of Ritual”

마. 공동 학술대회 개최

사회학회, 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이틀로 나뉘어 첫날은 “이념 및 문화갈등과 국민통합,” 다음날은 “사회갈등과 정치통합”이라는 하부 주제를 가지고

10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진행되었다. 이 학술대회의 발제와 토론 내용을 연구에 통합시켰다.

▶ 일시: 2006년 10월 19일, 20일

▶ 내용

○ 19일: 이념 및 문화갈등과 국민통합

- 기조강연 : “세계화시대의 사회통합”

<제1주제> 이념갈등의 현황과 국민통합의 과제

- 발표 :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현황과 구조”

“이념 갈등과 통합 : 영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제2주제> 성평등과 세대간 문화갈등

- 발표 :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갈등 실태 및 해결방안”

“조직문화와 젠더 파트너십 : 직무만족 및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제3주제> 이주민과 문화관용성

- 발표 : “여성 결혼이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을 통해 본 문화 간 소통의 현실”

“새터민의 직장 내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 20일: 사회갈등과 정치통합

기조강연 : “개혁, 정치참여와 한국 민주주의”

<제1주제> 보혁갈등과 정치통합

- 발표 : “한국 보·혁 갈등의 본질에 관한 일 고찰 : 포스트 민주화 패러다임의 부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의 혁신’, ‘보수의 혁신’”

<제2주제> 세대갈등과 국민통합

- 발표 : “세대간 정치적 갈등의 이해”

“세대 분화 및 세대 충돌의 현주소”

<제3주제> 양극화와 중산층 민주주의

- 발표 : “양극화 시대의 한국 민주주의”

“한국사회의 양극화 진단과 전망”

바. 하부과제 기획, 평가 및 관리

전술한 대로 6개 하부 과제를 기획하여 연구회 산하 기관과 학회에 위탁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연구의 진전을 점검하고 차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전체 과제의 통합성과 완결성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

사. 하부 과제 분석 및 통합

1, 2차 연도 과제를 포함한 하부 과제들을 앞에서 언급한 통합의 개념들에 근거하여 포괄함으로써 국민통합에 도전, 혹은 장애가 되는 현상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4. 기대 효과

가.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의 합의 도출

국민통합이란 현대 국가의 이상이지만 실현은 대단히 어렵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의 형성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의 필요성, 정당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시하여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나. 현실분석을 통한 통합의 복합적 원인에 대한 이해

현대 국가 내외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따라서 통합에 장애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실현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통합을 이루는데 무엇이, 왜 장애가 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 정책방안의 기조 마련

국민통합이란 대단히 광범위한 주제이고 그 실현에는 시간이 걸린다. 정책 방안도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안에는 일관된 철학적, 논리적 방향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이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5. 연구의 한계

이 과제는 국민통합을 위해 먼저 현실의 문제와 장애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분석의 범위에 있어 의식이나 문화의 차원에 한정되는 한계를 가진다. 즉, 세금, 복지, 임금 제도 등 경제적인 시스템과 정책이 국민통합을 위해 미치는 효과도 크지만 이 분야는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이는 첫째 이런 연구들이 각각 대단히 전문적이고 정교한 작업을 요하여 본 연구의 틀 안에 넣기는 예산과 기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도 산술적이고 기계적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이고 정서적인 국민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후자에 집중하였다.

또한 이 과제는 다년도 협동연구인데 1,2차 연도의 모든 하부과제가 올해 연구의 틀에 포함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적으로 올해 연구는 그 동안의 연구를 한 틀로서 제시해야 하지만 연도별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고 다수의 하부과제가 있어서 이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구의 함의를 연구들과 시각에 포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II

개념적 논의

1. 국민통합의 개념	15
2. 국민통합의 배경	18
3. 국민통합의 방향	28
4. 국민통합의 원칙	39

1. 국민통합의 개념

‘국민통합’은 흔히 쓰이는 표현이지만 그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의 담론에서 국민적인 통합은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것 인양 표현되지만, 실제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으로 국민통합의 논리를 개념화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 주체를 의미하며 ‘통합’은 주체들 간의 관계의 원리를 표현하는 용어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첫째, 국민통합의 주체와 객체는 누구인가?

둘째, 국민통합의 범위와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국민통합의 가능한, 그리고 정당한 전략과 절차는 어떤 것인가?

넷째, 국민통합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동학(dynamics)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누구를 통합하는 것인가’라는 매우 본질적인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이라는 표현은 주권(sovereignty)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근대 민주주의 원칙에서 주권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통합의 주체와 객체는 별개로 분리되기 어려우며 국민에 의한 국민의 통합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민통합이 마치 시장 시스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정한 사회적 절차와 중요한 행위자(agency)들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

근대적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은 국가(정부)에 주권을 위임하고 있으며, 국민국가(nation-state)의 주권은 영토라는 공간적 범위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질문, 즉 국민통합의 범위와 경계는 국민통합 그 자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통합의 범위를 인적으로는 법적 규정에 의해 ‘국민’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주권이 미치는 국민국가의 ‘영토’ 내부로 명확하게 획정할 수도 있

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서는 인간의 이동,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는 문화와 물자의 활발한 교류로 경제적 생산과 문화적 가치관에는 더 이상 국적이 존재하지 않는 21세기에, 법률에만 의존하는 인위적인 경계는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 누구까지를 통합하는가의 '경계'는 매우 유동적이며 그 자체가 국민통합의 의미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세 번째는 국민통합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통합의 절차와 전략, 정책적 수단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인 통합, 법적인 통합, 문화적인 통합 등 상이한 측면에서 통합의 절차와 정책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사회 전반의 다양성이 확대되면 될수록 경제, 법, 문화 중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국민통합은 그 의미가 약화된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는 국민통합의 동학, 즉 통합이 형성되고 강화 또는 약화되는 통시적, 역사적 과정에 관련된다. 어떤 극적인 사건에 의해 국민들의 집합적 연대의식이 급속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 통합은 일정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과거, 전통과 의례 등은 '우리 의식'의 기초이다. 때로는 역사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정의하고 강조하는, 이른바 '기억의 정치'를 동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은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의식과 신뢰의 확립, 평화로운 질서유지를 위해 당위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내용과 원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다. 다시 말해 국민통합이란 다양한 주체들 간의 다층적 교섭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경계와 범위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재해석에 노출되어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회적 과정이다.

근대 국가는 흔히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nation-state)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근대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새로운 계급 및 사회집단들의 등장, 그리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한데 얽혀있는 복합적 현상이므로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달리 내려질 수 있다. 기든스에 따르면 네이션 스테이트(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와 내셔널리즘(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은 분석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네이션 스테이트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명확한

경계를 가진 영토에 대한 행정적 독점, 국내외의 폭력을 직접 통제할 수단을 갖춘 통치의 제도적 복합체이다. 이와 달리 내셔널리즘은 엘리트 집단이 전파하고 또 인구의 지역적, 인종적, 언어적 구성원들 다수가 수용하며 그들 사이의 공동체적 일치(communality)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과 신념의 복합체이다(Giddens, 1981: 189~191).

달리 표현하면 근대국가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심리적 신념의 공유를 모두 필요로 하지만 양자의 경계나 내용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통합은 크게 보면 제도적 인프라의 측면, 그리고 국가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양자를 모두 내포하지만, 그러나 국가를 형성하는 제도적 인프라의 다양한 측면들은 모두 포괄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합의 형성과 갈등 조정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를 부분적으로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역사적 경험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국민국가와 민족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유럽의 역사적 경험만을 기준으로 삼아 개념을 논하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논리적이고 개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 안에서 국민통합을 논의해야 하며 근대적 국민국가의 다양한 형성경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버마스는 근대 국가의 형성에 이르는 네 가지 경로를 구분하여 설명한다(Habermas, 1996/2000: 135~138).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영토국가 안에서 국민국가가 형성된 고전적 경로를 보여준다(국가로부터 국민으로의 길). 이탈리아와 독일, 중동부 유럽은 민족의식과 민족문화를 강조하고 고취함으로써 국민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민족으로부터 국가로의 길). 이와는 상이한 20세기 이후, 즉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탈식민화 과정에서 수립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국가들은 국민국가의 제3세대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배의 유제로 물려받은 인위적 국가기구들이 먼저 성립되었고 이후에 뒤늦게 성장하고 통합된 국민들로 나중에 채워졌다고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련의 와해 이후 동유럽과 남동유럽에서는 다소간 폭력적인 분리를 거치면서 국민국가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분류가 한국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외형상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아시아 국가로서 세 번째 유형에 속하지만, 그러나 35년에 불과한 일본의 식민지배 이전에 이미 수 백 년의 통일된 왕조국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간과될 수 없다. 일제의 강점 하에서는 빼앗긴 국가를 다시 찾고자 하는 ‘국가 없는 국민’들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표출되었고, 2차 대전 종전 이후 남과 북에서 성립된 분단국가는 공히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정부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통일된 국민국가 형성을 완수하지 못한 분단의 상태로 인해 한국 국민국가의 성격은 더욱 복잡적이다.

이러한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21세기의 전지구적 환경 변화는 국민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시장을 형성한 자본주의 발달은 일국 단위의 경제질서를 무력화시키며 세계화와 연동되어 있는 사회 양극화, 빈곤의 심화, 사회적 배제 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빈국으로부터의 노동 유입으로 한국사회에는 다민족, 다인종 거주자들이 늘어났고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국민통합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회적 배경을 먼저 고찰해야 하며, 이는 다시 대내적 환경과 대외적 환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2. 국민통합의 배경

대외적 환경 중 가장 큰 흐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세계화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현상이며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 사회관계에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분명한 것이다.

대내적 환경 변화 역시 매우 복잡적이다. 우선 냉전체계의 산물로서 분단 국가에 머물러 있는 근대사적 배경과 아직도 남아있는 통일의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압축적 근대화’가 빚어낸 부작용으로서의 우리 사회 곳곳에 생성된 균열들(계층 간, 지역 간 갈등 등)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갈등

의 진원지로 자리 잡고 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 사이의 내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예를 들면, 성별 갈등, 세대 간 갈등, 생태 보존과 개발의 대립).

지구적 수준의 변화가 발달된 통신과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각 지역으로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는 오늘날,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환경의 변화는 점차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통합의 비전을 모색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배경적 요인을 세계화와 이주의 증대, 민주화와 다원화,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인 통일의 환경 변화라는 세 가지 추세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가. 세계화와 이주의 증대

(1)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위상 변화

세계화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며 세계화의 원인과 동학, 세계화의 효과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지구적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의 등장에 따른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영역에서의 탈영토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화는 일차적으로 국민국가의 위상에 변화를 초래하는데, 국민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초국적 주체들, 즉 초국적 기업이나 국제기구 및 국제법, 국제연대에 기반한 비정부기구(NGO) 들의 감시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경을 넘어서는 다양한 교류를 확대시켰으며 국가 간 물리적 경계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재화와 자본의 이동은 물론, 노동 이주의 확대와 같은 인적 이동이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확산 정도나 속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처음부터 이주민들로 국가를 형성한 미국인들, 지역공동체인 EU의 성립으로 국경을 빈번하게 넘나드는 유럽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다른 인종이

나 민족의 이주는 상대적으로 낯선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보편적인 추세로 인해 국경을 경계로 하는 사회통합은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 늘 불안정해지기 쉬우며 재정립을 요구받게 된다. 한편으로는 국가 정책의 실행을 제약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현실적 변화, 특히 경제 영역에서의 전지구적 규모의 자본주의 영향, 자본과 노동의 이동 등이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단위 주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규범체계가 등장하는데,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국가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세계화로 인해 국민통합의 범위는 국민국가의 국경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통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행위자들 뿐 아니라 초국가적인 행위자들 및 국제적 연대체들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구적인 공치(global governance)의 등장으로 요약된다.

(2) 이주의 증대

이주의 증대는 보다 역사적·통합적 시각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들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세계화에 따른 노동이주의 증대는 지역경제 혹은 국제관계를 고려하는 보다 큰 틀 안에 놓여있다. 아울러 한국인들 역시 여러 가지 동기로 외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사회통합 문제는 단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국제결혼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가 증대하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사회가 보다 포괄적인 사회통합의 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라는 보편적인 전체 사회의 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20세기를 통해 식민지배와 전쟁, 빈곤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한국인 동포들이 자의 혹은 타의로 외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과정에서도 광부나 간호사, 건설노동인력 등의 취업이민은 인구

정책 차원에서도 정부가 권장하였던 바이다. 이처럼 20세기 중반까지 인력의 송출국이었던 한국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 노동 유입국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주변 아시아 빈국으로부터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노동력이 증대하였다.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은 한편으로 부족한 생산직 인력을 메워 주는 순기능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 하락을 유도하며 또 문화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의 역기능도 잠재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입장(고용허가제)을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지구적 범위의 이주가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주권에 미치는 함의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 첫째, 비합법적·미등록 이주 흐름은 대다수의 국민국가들이 자국의 국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국경의 감시를 확대하더라도 각국은 비합법적 이주 흐름을 막지 못했다. 셋째, 이주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을 통제 조정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증가한 것은, 국가자율성과 주권의 성격변화, 그리고 이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보여준다. 넷째, 이주로 인해 경제 문화 정책영역에서 선진국들의 국내 정치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다섯째 이주는 국가가 구사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종류, 그리고 그러한 정책선택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바꾸어 놓았다(D. Held et. al., 2002: 505).

이주의 문제는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차적으로 주변국의 값싼 노동력이 노동시장의 하위층으로 스며들어오는 노동이주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노동력 수급이라는 체계적 요인에서 시작된 이주 문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화적 쟁점들을 제기하게 된다. 즉, 이주민들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가족의 동반이주 문제,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민 2세들의 국적과 교육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이주민의 정착과 영주권, 시민권 요

구 등은 아직 표출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인구 중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표성을 갖기도 어려운 소수민족 소집단(ethnic minorities)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수민족 공동체(ethnic communities)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공동체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여기에서 또한 주목할 현상은 바로 ‘이주의 여성화’문제이다. 노동이주자들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들어 여성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산업구조 변화, 서비스 산업의 팽창으로 저숙련 여성인력들을 흡수할 만한 일자리가 증대하고 있다. 일례로 조선족 여성들이 가사서비스 및 케어 서비스, 소규모 자영업체의 서비스 노동자로 많이 취업하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은 2000년 7,304명에서 2005년에는 31,180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약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¹⁾ 여성 결혼이주자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동기의 측면에서 보면 빈곤에서 벗어나 생계유지를 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강하고 결혼이 해소된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취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동이주와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인권유린과 인신매매의 위험성이 높는데, 결혼 알선기관의 횡포나 ‘신부매매’의 측면, 낮은 환경에서 고립된 채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성 등이 잠재되어 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사회 안에서도 전통적 가부장제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농촌사회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새롭고 낮은 가치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국제결혼이 농촌공동체나 한국사회의 ‘통합’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이주의 긍정적 효과를 사고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가령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모두 익숙한 새로운 장점(크레올 문화)을 가질 수 있다(정영혜, 2006). 문제는 이러한 다문화 정체성을 수용하고 이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 통계청, <2005 혼인 이혼 통계결과>, 2006. 3.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나. 민주화와 다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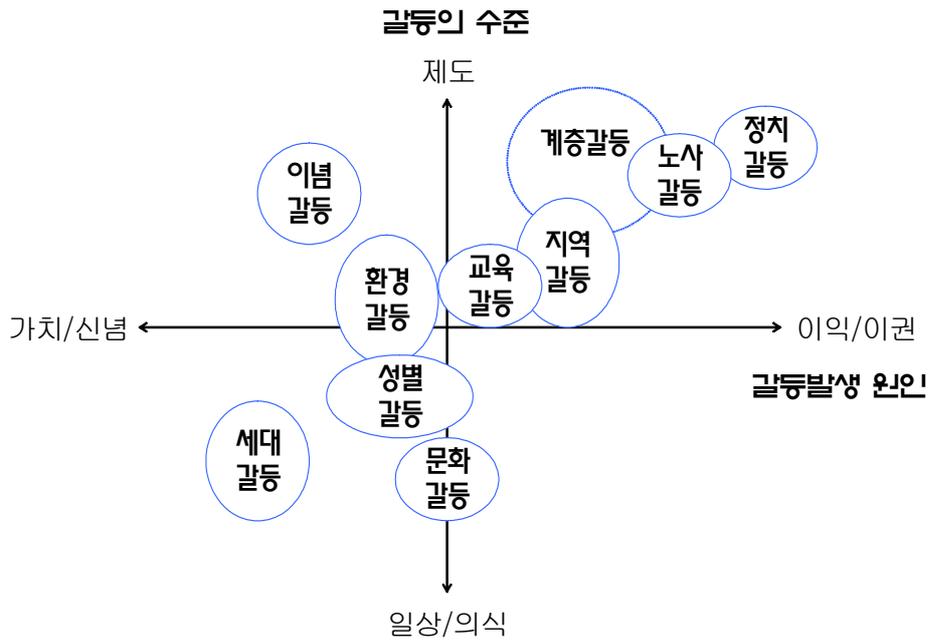
(1) 민주화와 사회갈등의 분출

한국의 사회통합 전망에서 민주화의 경험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1980년대 후반 노동자 계층을 배제하는 분배체제와 정치체제에 저항하는 노동운동, 비합리적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중간계층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되었다.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신세대 문화와 소비문화의 확대로 새로운 가치들의 등장하였고, 민주화는 경제적 배분과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서 문화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으로 그 외연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민주화는 한국사회를 한층 성숙시키는 중요한 계기였으나 다른 한편 권위주의 하에서 억압되었던 다양한 갈등들을 일시에 폭발적으로 분출시켰다. 계층별, 지역별, 이익집단별로 각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권리의식이 보편화되어 사회적 합의의 형성은 더욱 어려운 과정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2차 년도에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갈등, 환경갈등, 노사갈등, 교육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정치갈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이 50%를 상회하였다. 이처럼 민주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가 표출되었지만 ‘차이’들을 포용하는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갈등의 성격은 누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갈등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갈등이 일어나는 차원을 보면 제도적 차원과 문화 및 의식의 차원, 그리고 갈등의 원인 측면을 보면 물질적 이익의 충돌과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령 노사갈등이나 지역갈등은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여 갈등의 주체가 뚜렷한데 이념갈등이나 세대갈등 등은 구체적인 물질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신념체계나 가치관의 충돌이면서 그 주체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경계에 의해 나누어지지 않는 갈등도 있는데 특히 성별갈등과 환경갈등은 제도와 일상, 가치와 이익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갈등은 현실적으로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명확하게 범주화·분류하기는 어려우나, 갈등의 성격이 구분되는 특성을 위치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 다양한 갈등의 유형

이처럼 다양한 갈등의 해결은 제도적 차원과 의식의 차원 양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차원은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갈등해결법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해결방안이 실제로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의식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와 의식 수준에서 잠재되어 있는 갈등의 실태들을 드러내고 구성원들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통합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2) 압축적 성장이 가져온 급격한 사회변화

20세기 한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압축적 성장’ 또는 압축적 근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사회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산업화나 도시화의 속도가 빨랐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도 다른 국가보다 훨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변화의 속도는 사회통합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우선 문제를 진단하고 대처할 방안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졸속 대응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비판이 난무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놓고 분열된 입장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마다의 입장에서 상황에 적응하여 생존하기에 급급하다보니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세력이 등장하기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수많은 정당들이 단명하고 또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압축적 변화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세대별로 성장환경이나 경험이 다르다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확대될 것이며 이는 다시 세대 갈등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 현상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많은 갈등이 세대 갈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정치적 차원의 보수적 지향과 진보적 지향, 조직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개인적 가치관에서의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등 여러 측면에서 세대 간 대립이 부각되고 있다.

(3) 성 역할 분화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의 증대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고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정책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성장과 여성정책의 체계화는 한국 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 분업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일각에서는 성평등 신장에 대한 반대 정서가 나타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여성 정책은 여성만을 지원함으로써 결국 남성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호주제 폐지나 국가산점제 폐지 등을 둘러싸고 여성과 남성 간의 성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협동연구총서, 05-02-09). 또한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가 IMF 및 경제위기로 인해 남성들이 취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점과 일치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남성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역차별’의 정서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이 남성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어려움을 타자,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타자에게 전가하는 남성중심주의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성평등 정책이 추구하는 여성의 차별 해소와 권리신장은 지금까지 남성들이 당연시 해왔던 남성중심적 관행의 변화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의 평등의식과 평등지향적 라이프스타일과, 남성의 평등의식 수준 및 가부장적 라이프스타일 간의 괴리가 커질수록 성별 갈등은 확대될 것이며, 법과 제도에서 성평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관행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젠더파트너십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 통일의 환경 변화

(1) 분단경험과 민족관념의 왜소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민통합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서구사회의 역사와 상당히 다르다. 일제 식민지배의 경험, 그 후 해방과 더불어 열강들의 개입과 국제정세에 의해 남한과 북한에서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는 분단을 경험하였다. 분단 상황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21세기까지 물려준 셈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근대적 국민국가가 성립된 이후 분단이 이루어

어진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의 체제 경쟁과 이념대립 과정 안에서 별도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민’이라는 틀이 만들어 졌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민족’ 관념은 남한과 북한에서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었고, 따라서 민족은 통일을 염두에 둔 담론인 동시에 ‘이질화된 민족 내부의 타자’로써 휴전선 반대편의 민족을 배제하는 과정이었다(이호영, 2004: 234). 서구에서의 민족 개념이 자연발생적 민족 그리고 민주주의와 결합된 시민적 연대라는 이중적 차원을 함께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한반도에서 민족은 ‘피를 나눈’ 형제, 혈연공동체라는 측면만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혈연공동체라는 전통적인 민족개념 만으로는 통일 이후의 통합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상이한 정체성, 상이한 계층, 상이한 지역을 포괄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형성하고, 또한 공평한 자원의 재분배 과정에 대한 합의와 협상의 과정이 형성될 때 비로소 통일 이후의 민족 개념을 기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은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가정 대신 남북한 공히 자신과 상대방의 보존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그 차이들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조한혜정 · 이우영, 2000).

(2) 민족공동체 전망의 확대

최근 통일과 관련된 환경 변화에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은 생존을 위해 북한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남한에서 살아가야 하는 새터민들의 증가는 새로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에게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아울러 그들이 성장해온 사회와 완전히 다른 남한 사회에서 부닥치게 되는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새터민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은 남북한의 동질성 확대나 통일 이후의 민족정체성 확립의 방향에서 고민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미리 드러내주

기 때문이다.

시야를 좀 더 넓혀 본다면 통일 이후의 민족 정체성은 한반도의 범위를 뛰어 넘는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함께 수반하는 것이다. 식민지배에서 분단 정부의 성립에 이르는 근대사의 격동의 와중에서 한국을 떠나게 된 재외동포와 ‘이산’(Korean diaspora)의 문제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전 세계의 흩어져 있는 한민족과 이산 문제는 결국 좁은 의미에서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국민 내부의 연대를 구축하는 문제가 되지만, 재외동포들의 시민권 문제(거주국가에서의 시민권 획득, 그리고 모국에서의 시민권 행사)는 다시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민권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인적 이동과 이주 문제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3. 국민통합의 방향

가. 21세기적 국민국가와 시민권 개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화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점 중의 하나는 국민국가 위상변화에 관한 것이다. 국민국가가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그 세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에서부터,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의 정책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국민국가들 간의 국제관계로 확립되어 왔던 베스트팔렌 체제²⁾가 서서히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2) 베스트팔렌 모델은 유럽에서 30년 전쟁 이후 체결된 1648년 Westfalen 평화조약으로부터 이름을 따온 것으로써, 1648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되었던 국제법과 국제규정의 시대를 포괄한다. 베스트팔렌 모델은 국가 외의 다른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영토국가, 주권국가로 이루어진 세계질서의 발전을 보여준다. 또한 이른바 실효성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 즉 국익우선은 정당하다는 원칙에 결국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것이라는 논리를 인정한다(Held, 2002: 71~2).

베스트팔렌 체제는 한마디로 국민국가의 절대적으로 분리불가능한 주권을 인정하는데 기초한다. 즉, 국민국가 내에서는 민주주의를 시행하지만 국가 사이의 관계는 비민주적이고, 국가 경계 안에서는 구성원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만 그러한 경계 밖에서는 국익을 추구한다. 또한 내부자로 간주된 사람에게는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국경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부정한다.

그러나 국민국가의 선택과 대응을 제한하는 다양한 초국적 주체들이 등장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위상은 변화를 겪게 된다. 다자 간, 양자 간 협정이나 조약들은 국가 간 관계 뿐 아니라 국가 내부의 세력관계에도 상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 또한 초국적 규칙이나 초국적 권위체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조직과 압력집단(다국적 기업, 초국적 사회운동 간의 연대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나 건강보험제도 조항이 미국과의 FTA 협상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한국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실상이 국제 인권기구나 미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발표됨으로써 정부 정책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인권과 시민권의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국민국가 내부의 소수집단 권리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과 개입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2년 유엔총회는 민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국가가 “소수집단의 존재 및 민족·문화·종교·언어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문화·종교·사회·공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국가가 요구하는 공용 언어나 공교육 체제의 획일적 기준에 대해 소수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방어할 권리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다.

지역 통합을 형성한 EU에서는 시민권의 개념도 국민국가의 영토를 넘어 확장되어 왔다. 1991년 마스트리히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에 따르면, 오늘날 EU 개별 회원국의 모든 시민은 EU의 시민이므로 EU 내 어느 나라든 여행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거주국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물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상황은 EU와 매우 다르지만, 그러나 전지구적 이주 및 지역 내 이주가 점차 늘어남으로써 국민국가의 범위 안에 소수자 내지 이주자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와 이주의 세계화를 초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정치공동체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변화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D. Held et. al., 2002 : 132~134).

- ① 국가정부만을 더 이상 실질적인 정치권력의 활동 중심으로 볼 수 없다.
- ② 정치적 운명공동체(자결권을 가진 집합체) 사상을 더 이상 단일한 국민국가 경계 내에만 위치시킬 수 없다.
- ③ 국가주권이 완전히 무력해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제한·불가분·배타적 공권력으로서의 절대적 주권개념을 부인하는 것이다.
- ④ 20세기 후반부는 ‘경계의 문제’라는 새로운 특징을 나타낸다. 초국적 행위주체와 여러 세력이 국가공동체의 경계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넘나드는 세계 속에서, 누가, 어떤 근거에서, 누구에게 책무를 져야하는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 ⑤ 국내와 국외, 내부정치와 외부 쟁점, 국민국가의 주권에 관련된 사안과 국제적 문제는 더 이상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국가를 넘어선 인간의 이동과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의 필요성, ‘경계의 문제’에 대한 성찰에 한국사회는 그다지 익숙하지 못하다. 그것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 과정에서 한국의 민족주의가 무엇보다도 ‘저항적 민족주의’ 내지 ‘민족 자결권’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따라서 외부의 위협이나 억압에 대응하는 내부적 단결과 자강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의 체제 경쟁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민족은 여전히 매우 폐쇄적인 자결의 단위로 인식되었다. 단일민족, 단일혈통을 중시하는 공동체로서의 한국적 민족관념은 이처럼 한국의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배태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데모스(Demos)와 에트노스(Ethnos)의 차이와 통합에 관

한 하버마스(하버마스, 1996: 160~163)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트노스는 친족관계로 조직된 전(前) 정치적 혈통공동체, 데모스는 자유평등한 권리주체들의 정치적 결사체를 의미한다. 한국인들의 민족관념은 에트노스에 치중되어 있으며 데모스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피를 나누는 가족과 친족의 연장선상에서 상상될 수 있는 가장 큰 공동체가 바로 민족이며, 한국인들의 상상력 안에서 민족은 정치에 선행하는 보다 근본적인 연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혈연이나 지연으로 구속된 특수주의적 결속을 극복할 때 성립가능하다. 가족이나 친족, 지역 공동체의 특수 이익을 넘어서는 보다 보편적 연대를 형성할 때 비로소 민족주의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동포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애국심 역시 특수주의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에 대한 희망과 결합될 때에만 발휘될 수 있다.

한국인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권위주의로부터의 민주화 과정을 경험하여 왔지만 민족주의에 있어서는 여전히 혈연중심적인 폐쇄적 민족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포용과 양립할 수 없는 민족주의는 파시즘과 같은 매우 부정적인 가치를 수반할 위험이 있다. 민족 자결권은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인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민주적 자기결정과정을 내포하는 것이어야 하며, 민주적 자결은 모든 시민들을 동등하게 포함하는 자율성의 포용적 의미를 담고 있다. 포용(inclusion)은 이러한 정치질서가 차별받는 사람들, 주변화된 사람들을 민족공동체의 동질성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자리매김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열려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민족주의 관념은 반주변부(semi-periphery)의 위치에서 비롯되는 이중성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강대국에 위협 앞에서 민족자결권을 주장하고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식의 강한 발전주의적 동기가 존재한다. 독도문제에 대한 분노, 월드컵과 같은 국가 간 스포츠 경쟁에서의 성공에 대한 국민적 열광은 그 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한국으로

유입해 들어온 외국인이나 소수자를 배제하고 주변화시키는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외국인의 유입은 한국의 경제발전의 결과이며 이는 국제 사회 및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 한류의 전파 등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국의 경제가 성공하고 문화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국을 동경하면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늘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기를 희망하면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상호 모순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시민권' 모델에 대한 성찰이 요구될 것이다. 서구 사회의 시민권 모델은 시민권과 민족정체성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관련된 공공정책(이민정책, 귀화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에서 어떤 입장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Castle & Miller, 1998).

- ① 비실체적 모델: 이주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정책이며 의도적인 비결정(non-decision)이다. 정치적 침묵의 외피아래 국지적 인종주의가 성행하도록 방치한다.
- ② 배타적 모델 : 혈통, 언어적 지위가 시민권의 토대를 제공하는 인종적 민족주의 모델이다. 이주자들은 주로 철저하게 규제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된다. 이주자의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만 이민 유입국의 시민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귀화와 시민권 취득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주자와 유입국 사회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문화교류는 불평등하고 소원한 관계에 있다.
- ③ 공화적-제국적 모델 : 시민 지위를 인종이 아닌 거주지와 연관시키는 속지주의 모델로서 이주자에서 시민지위로 이전하기는 배타적 모델보다는 좀 더 쉽다. 주로 구 식민지로부터 식민모국으로 이주해온 시민들, 유입국에서 태어난 이주 2세대 등에게 특히 해당된다. 민족정체성에 대해 덜 배타적이며 식민모국과 식민지 간의 상호 작용을 인정하긴 하지만 여전히

식민모국의 문화가 지배적인 모델이다.

- ④ 다문화적 모델 : 통상적으로 이주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권 취득이 보장되는 모델이다. 이것의 이상적 형태는 정체성이 다원적이고 다국계이며, 먼저 도착한 이주문화가 뒤따라온 이주물결에 비추어 스스로를 재규정하는 시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에 기초한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에서도 백인 주류문화와 다른 집단 간의 권력의 비대칭성을 존재한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이 이러한 모델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본다.

한국의 시민권 모델은 배타적인 민족적 통합(ethnic integration)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족적 통합을 시민적 통합(civic integration)의 틀과 융합시켜나가는 이중적이면서 포괄적인, 보다 보편주의적인 통합의 틀을 지향해야 하며, 다문화주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지상목표로 삼아온 발전주의 국가체제와 결합되어 있는 민족주의의 한계에 대한 성찰이 동반되어야 한다.

나. 사회통합과 평등사회의 구현

국민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는 첫째, 사회 내부에서 증대하고 있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둘째 사회통합의 원리를 어떻게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대사회가 기초하고 있는 산업사회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 분화된 사회 각 부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한다. 뒤르케임(E. Durkheim)의 설명에 따르면 전통사회에서 동질성에 기초했던 ‘기계적 연대(mechanic solidarity)’는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기반을 상실하게 되며, 사회 분화(differentiation)로 내부 구성요소 간의 이질성이 증폭된 현대사회에서는 이질성에 기초한 새로운 연대로서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가 요청된다. 그러나 이질성으로부터 어떻게 연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이 과정에서 무규범 상태, 곧 아노미(anomie)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1세기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도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경을 넘는 교류의 증대, 새로운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청으로 인해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더 나아가 사회 내부의 점증하는 이질적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어 적대적 관계에 놓임으로써 분절화 내지 양극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사회통합의 장애물로 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질성 회복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견해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동질적 사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잠재력을 갖기 어렵다.

다양성과 이질성을 용인하면서도 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를 내부적(internalist) 관점에서 보거나, 외부적(externalist) 관점에서 보거나에 따라 사회체계는 달리 이해된다. 외부적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하위체계들이 기능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전체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기재생산과 자기유지를 지속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는 하나의 독자적인 유기체이자 전체적인 구조로써 간주된다. 이와 달리 내부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과 행위자들에게 사회가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가, 즉 구성원들이 언어와 의미를 공유하고 상호소통함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세계(life world)'를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버마스는 이처럼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ife world)의 두 측면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며, 비교적 단순한 부족사회나 전통사회에서는 체계와 생활세계가 중첩되어 있었으나 복잡성이 확대되는 현대사회에 이르면 양자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본다(Habermas, 1987: 153~155). 분리의 계기는 규범이나 도덕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경제시스템의 발생이다. 생활세계에서의 소통은 언어와 의미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유된 규범을 따름으로서 사회통합이 유지된다. 그러나 언어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새로운 매체, 즉 화폐와 권력이

교환되는 체계 안에서는 생활세계와의 규범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도가 발생한다. 화폐와 권력의 교환 시스템은 마치 제2의 자연처럼 독자적 원리에 따라 (이윤추구 혹은 권력의 극대화 등)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원적 인식을 수용한다면, 체계통합은 사회가 하나의 수미일관한 체계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재화의 분배체계와 이를 관리하는 행정적 체계의 기능적 통합을 의미한다.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과 재화의 유통체계, 조세체계와 행정의 전달망을 유지하는 것 등을 체계통합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사회통합은 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련되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특징이나 개성을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배워나가는 것(Honneth, 249)”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와 상징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식’ — 그것이 배타적·폐쇄적인 집단 의식이건, 혹은 보다 개방적·확산적인 태도이건 간에 — 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한국 사회 내부에서 표출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차원의 원인진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해결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³⁾ 산업화 초기의 경제개발을 국가가 위로부터 주도하였던 역사적 경험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한 체계의 성공적 유지, 그리고 위로부터의 질서 확립이 최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과연 체계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는 별도의 문제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위로부터의 통제와 규제를 통해 사회통합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체계통합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회통합의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관계는 상호배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은 상이한 원리를 갖고 있으나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3) 각 영역별 갈등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사례연구,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정책 수단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1, 2차년도 보고서 참조.

다. 의미와 상징의 차원으로서의 사회통합은 경제구조나 법질서 같은 체계의 영향을 받고 이는 다시 언어나 미디어 같은 표현체계, 즉 사회통합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결국 구조(체계)와 개인(행위)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거시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따라 개인을 구속함으로써 효율성과 질서를 확립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를 소통하는 개인들의 행위가 누적됨으로써 통합된 사회체계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마치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는 물음과 마찬가지로 선후를 가리기 어렵다.

기든스는 구조와 개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구조는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며 행위는 또한 사회구조 속에 유형화되어 있는 규칙을 따른다고 주장한다(Giddens, 1979; 1984). 기든스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추론적 의식으로서 이는 자신의 행동과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의식적인 이성이다. 두 번째는 관행적 의식으로, 사람들이 상황 속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위를 해석하는데 사용되지만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신념과 지식이다. 세 번째는 말로 표현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동기화되지 않는 무의식이다. 세 가지 중에서 관행적 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사회의 재생산은 주로 관행적 활동에 기반한다고 기든스는 말한다. 합리적으로 입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당연시하는 관행적 의식은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생활 속에서 자신이 시간적 공간적 이동을 가로질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론적 안전감'을 유지하여 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정리해 본다면, 먼저 경제체계의 유지와 행정체계의 재생산과 같은 '체계통합' 만으로 포괄적인 사회통합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행위의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형성하는 사회통합은 체제통합을 아우르는 더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세계화 시대의 사회 통합은 다양한 가치와 다원적 목소리에 대한 경청, 차이의 인정, 특히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 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통합은 상호 인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인정체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회통합은 구성원

을 포괄(inclusion)하는 것이며 이는 합의된 경계 안에서 나와 타인의 차이를 타협하는 과정이다. 사회통합을 훼손하는 차별이나 소외, 그리고 갈등의 문제는 체계 자체의 정비와 더불어 차이와 차별받은 집단, 소외된 사람의 입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문화, 의식적 차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통합적 가치의 형성에서 ‘평등’은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불평등에 기초한 사회통합은 전통적 신분사회에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평등 사회의 실질적 실현에 대한 신뢰 여부는 사회통합의 결속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경향은 이러한 다양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즉, 더 이상 동질적 구성원만을 전제로 하는 평등, 달리 표현해 ‘같음에 기초한 평등’은 사회통합의 원리로 작동하기 어렵다. ‘다름에 기초한 평등’이 새로운 통합의 원리로 수렴되어야 할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다양성의 관용, 이질성의 포용은 한편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 기든스가 지적하였듯이 기존의 사회질서를 은연중에 재생산하고 있는 관행적 의식에 대한 성찰과 변화 없이는 성취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복합적인 개방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통합의 원리는 단일민족의 동질성을 전제하는 좁은 의미의 ‘국민’개념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앞서서도 고찰하였듯이 21세기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보다 개방적인 시민권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민족의 통합을 보다 보편적인 시민적 통합의 원리와 결합시켜 이질성과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된 국민국가의 비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국민통합의 방향은 크게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대외적인 것은 한국 혹은 한국인이라는 경계를 정하는 문제로 국민을 통합의 대상으로 하며 비국민을 배제한다. 여기서 한국인 혹

은 우리에게 대한 최소한의, 그리고 미래지향적 정의가 요구된다. 냉전적 사고나 개발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며 지속되어온 혈연중심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요소를 내포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적 가치관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민권을 정립하는 전향적인 국민국가의 노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는 완전히 민족 개념에만 근거할 수는 없으나 반대로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는다. 단지 민족을 한국인을 판정하는 유일한 요소로 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결혼이나 귀화에 의해 법적인 한국인을 자칭하는 사람은 우리의 범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 국민통합은 영토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한 조건인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국사회의 생산을 담당하는 일원이고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을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국민통합 이슈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대내적인 통합의 문제이다. 사실상 한국인에게 있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한국인과 비한국인의 경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한국인 혹은 비한국적인 것과의 만남에서 의식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월드컵처럼 국제적인 행사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의식은 가장 높아지며 외부의 적을 전제로 할 때 통합의 의식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통합의 실질적인 문제는 한국인 내부에서의 통합이다. 전술했듯이 한국 사회는 경제, 정치, 교육 등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이념적,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때로 격렬하고 소모적인 대립으로 발전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다수가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불만보다는 상대적 박탈감, 차별이나 불의의 경험에 따른 사회와 타인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단순한 평등의 원리는 이러한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대안이 되기 어렵다. 한국 시민들은 민주화 경험을 통해 평등의 중요성을 체감한 바 있다. 이러한 민주적 평등의 원리는 한국사회가 일구어 온 민주화의 성과에 근거하되, 더욱 확대

된 다양성과 이질성, 더 나아가 다문화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원리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민통합이라는 표현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주 애용되었던 것이며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미래지향적 국민통합 개념은 이처럼 위로부터의 획일적 통합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 좁은 의미의 ‘국민’ 범위에 국한되지 말고 아래로부터 형성되면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사회통합에 대한 상상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을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은 질서의 붕괴 내지 혼란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정은 또한 민주적 법치와 결합될 수 있으며, 법치국가의 원칙 또한 위로부터 부과되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민주성과 형평성을 통해 구축되어 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소수자들의 세력화를 통한 평등권의 확보는 다수자와 기득권층의 불합리한 관행 및 고정관념의 변화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는 민주화 과정에서 재분배에 대한 갈등과 더불어 ‘문화적 인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표출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민주화’ 과정을 보다 심화 확대시켜 ‘차이를 인정하는’ 민주주의로 지평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민통합의 원칙

국민통합은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필요성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국가 혹은 사회의 발전이 국민 개인의 발전과 정비례의 관계를 가진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며 따라서 하나의 국가정체성 아래서 그 구성원 각각이 행복과 안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실제의 사회는 대부분 구성원들을 사이의 차별, 갈등과 반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대로 현대 사회의 역사적 상황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 추구하는 권리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고 또한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한 사람의 권익이 곧 다른 사람에게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여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한 사람이 최대한의 복지를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 몫의 복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국민이 국민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각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의 운영을 위한 대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이 원칙은 첫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이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유용한 개념이어야 한다.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과거에 유용했던 개념이 더 이상 쓸모없어 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원칙이 필요하다. 셋째, 상생적이어야 한다. 전술했듯이 현대사회에서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큰 만큼 권리 요구의 충돌도 잦다. 국민통합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상생적 원칙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가 구현되고 관용이 이루어지며 신뢰가 조성되는 것이 국민통합의 전제조건이라고 전제한다. 정의와 신뢰, 관용은 현대 사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여러 학자들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고 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중요한 논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다음에서는 이들 개념에 대한 배경 및 논의의 발전과정, 그리고 본 연구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가. 정의

정의란 도덕적 정당성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 운영 원칙으로서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정의의 사전적 정의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이 받은 대우에 대해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제안이 실현가능성이 없음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한 사람이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우와 남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 받아야 할 대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가 한 사회의 도덕적 원칙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랜 동안 정의의 개념에 대해 논의해 왔다.

지금까지 행해진 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맥락은 분배로서의 정의와 인정으로서의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외에 절차로서의 정의의 논의도 있다.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영미 중심의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유래되었으며 7-80년대에 롤즈(John Rawls)이나 드워킨(Ronald Dworkin)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확장되었다(Fraser and Honneth, 10). 이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평등사상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로서(Ibid., 10) 평등의 개념을 동원한 정의 규정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평등의 개념 또한 일원적인 것이 아니어서 분배적 정의의 개념도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단, 이 개념의 범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는 분배적 정의가 자원의 분배를 중요시하고 취업, 교육, 생산, 소비 등 좀 더 물질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인정으로서의 정의 논의는 좀 더 정신적 혹은 심리학적 차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정은 헤겔의 의식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consciousness) 철학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개인의 건강한 정체성의 형성을 위해 타인과의 동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 인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은 테일러(Charles Taylor)나 호네스(Axel Honneth)에 의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외에 Will Kymlicka도 문화적 인정이 정의의 필수요건임을 주장하는데, 그의 논의는 헤겔의 인정개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도덕적, 정치적 이론의 틀 안에서 집단에 근거한 시민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Benhabib, 2002. 59). 벤하비브(Benhabib)는 문화적 정체성에 근거한 인정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화가 바로 분배의 문제임을 지적함으로써 인정과 배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프레이저의 논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영(Young)은 인정의 큰 부분이 절차에 참여시킴에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의 인정 옹호자라고 할 수 있다(2000).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등에 대한 논의를 일고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시 차별, 차이, 경계 등의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먼저 평등은 상대적 가치이다. 평등은 오늘날에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이지만 이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근대 이후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봉건주의의 약화와 상업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등장하여 군주제에 대한 도전과 경제적 자유의 추구로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평등은 도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자유주의에서는 평등을 합리성을 가진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으로 보았고 다른 형태의 지배-종속 관계와 공존할 수 있는 원칙이었다.

그 후로 평등의 개념은 확장되었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평등에 대한 논리 개발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평등은 현대사회에서 사회 권력이나 부를 재배분하는 원칙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원칙으로서 평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법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평등의 원칙으로는 1) 본체적 혹은 기본적 평등, 2) 형식적 혹은 일관성으로서의 평등, 3) 결과의 평등, 4) 기회의 평등이 있다. 본체적 평등은 가장 도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모든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하다는 종교적 전통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인간을 보편적 개체로 보는 맑스주의 사회철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기본적 평등은 상대

주의적 관점이 발달한 오늘날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지만(터너, 1986, 435) “모든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드워킨의 주장에서 우리는 이 기본적 평등에 대한 옹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다. 나머지 세 유형의 평등이 자원이나 권력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론적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이 평등 원칙은 인간 혹은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원칙, 즉 정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배분으로서의 정의나 인정으로서의 정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평등이 실제로 어떻게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며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앞에서 소개한대로 분배적 정의 패러다임과 인정으로서의 정의 패러다임은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맥락이다. 이 두 논의는 다른 모든 학문적 논의처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자체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제안된 것이 프레이저의 이차원적 정의의 개념이며 관점의 이원론(perspectival dualism)이다. 프레이저는 이를 분배와 인정을 대립시키는 잘못된 이분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한다. 이에 비해 호네스는 두 논의를 인정의 패러다임을 확장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이들의 이론 중 어떤 이론이 정의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있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두 학자가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들의 이론을 소개하고 이 논의가 우리의 국민통합 논의에 시사 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

프레이저는 분배와 인정으로 나누는 기존의 정의 논의에 대해 몇 가지 문제의식을 보인다. 첫째 정의(혹은 불의)가 분배 혹은 인정 중의 하나의 원인에 기인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안티테제를 설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분배와 인정은 상호배제적인 분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실의 불평등 현상들을 보면 분배 혹은 인정 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와 인정, 양자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히 분배에 있어서의 불의를 계급 구조에, 인정에 있어서의 불의를 정체성 정치(politics of identity)에 연결시키는데 계급 구조도 반드시 분배의 문제만이 아닌 정체성 인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흔히 정체성 인정의 문제라고 간주되는 여성, 성적 소수자, 소수 민족 등의

문제도 경제적 불평등을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배와 인정을 대립시키는 논의는 정의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의 문제는 분배와 인정 각각의 패러다임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각각이 분배와 인정의 차원을 가진 이차원적 범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이차원적 정의의 개념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분배와 인정이 한 현상 안에 공존한다는 주장이 현상을 보는 시각으로서의 분배와 인정 논의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프레이저는 분배적 정의(redistributive justice)와 인정으로서의 정의 논의의 방식을 다시 경제주의(economism)와 문화주의(culturalism)로 구분하고 이 두 시각을 정의와 관련한 문제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두 시각으로 보며 이를 ‘관점의 이원론(perspectival dualism)’이라고 명한다. 경제주의란 정의의 부재가 경제 영역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그 해결책도 경제 영역에서 찾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는 바로 경제적 구조조정을 말하는 것인데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노동 분업의 재조정, 소유 구조의 변화, 투자 결정 과정의 민주화, 그리고 다른 기초적 경제구조를 전환(Fraser & Honneth, 13)하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인정 논의는 불의의 해결이 문화적 혹은 상징적 변화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재현, 해석, 소통의 사회적 패턴을 모든 사람의 사회정체성을 전환시키는 정도로 전체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Ibid). 프레이저는 이 두 시각이 정의의 문제를 각각 다른 영역에서 보고 있고, 이 둘을 함께 적용함으로써만이 정의의 올바른 진단과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을 통합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동시에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적 개념을 필요로 한다. 프레이저는 이를 위해 인정의 지위 모델(status model)을 제안한다(Fraser & Honneth, 25). 인정의 지위모델은 인정을 문화적 가치관이 제도적으로 구축되는 패턴이라고 보며 따라서 개인적 자기실현 차원의 가치가 아니라 “상호적 인정과 지위의 평등성”을 추구하는 도덕적 차원의 가치로 본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것은 각 구성원이 서로를 동료(peer)로 보게 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불인정(misrecognition)은 특정 구성원을 열등하게 보게 하고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혼제도, 복지정책, 인종정책과 같은 제도적 패턴이 문화적 가치와 결합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 협동연구 1차 연도에 실시한 차별연구(협동연구총서 2004-01)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이 남녀유별의 유교적 논리나 생물학적 차이의 논리에 의해 정당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유교에서는 남녀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고 보완적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존재가치는 빛이 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현재까지도 남녀가 다른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보완된다는 역할구분론이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차이론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본질적인 차이에 따른 남녀 간의 권리, 책임, 보상의 이원론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 배제의 논리로 연결된다. 이 외에 연령차별, 장애인 차별, 외국인 노동자 차별, 학력차별 등도 모두 이와 같이 이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인정의 지위모델은 결국 프레이저에게 참여적 평등(participatory parity)이라는 궁극적 가치가 실현되는 두 차원이다. 프레이저의 참여적 평등이란 보편적인 가치로서 모든 인간의 도덕적 가치의 평등성을 전제로 하고 모든 (성인) 구성원을 상호작용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배분과 인정이 모두 참여적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프레이저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인정이 단순히 “왜곡되지 않고 완전한 주체성을 가지게 하는 필요조건(Fraser & Honneth, 28)”으로서의 심리적 자기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의 평등성을 결정짓는 도덕적 정의의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이저의 이원적 정의론에 비해 호네쓰의 정의론은 일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정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호네쓰에 있어서의 인정은 프레이저에 있어서보다 훨씬 근원적인 인간의 욕구와, 동시에 그러한 욕구를 일으키는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호네쓰는 자신의 인정의 개념이 프레이저의 분배 개념에 선행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프레이저가 현대사회의 주요한 변동을 분배의 정치에서 인정의 정치로의 전환으로 보

는 반면 호네쓰는 인간 사회가 역사를 통해 언제나 인정의 정치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정의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옳은 방법은 프레이저처럼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불의나 멸시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현상학적인 방법론이다. 그에게 상호주체적(intersubjective) 인정이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ibid., 138). 그는 프레이저가 정의의 개념을 경제주의(분배)와 문화주의(인정)의 시각으로 나누는 것을 단지 작위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기존의 정의의 논의 혹은 기준은 이미 제도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의 (정의 혹은 불의의) 경험을 반영한 정의의 개념을 만드는 것은 엄격한 이론적 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의 개념이 그 정의를 규정하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제도의 역사적 분석을 통해 그 사회적 제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호네쓰에 따르면 모든 사회에서 정의 혹은 그 반대로 불의의 경험은 인정 혹은 인정의 결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분배에 있어 정의의 부재도 실제로는 인정의 결여에 기인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이는 어떤 능력을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사회적 가치 체계가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맑스의 고전적 경제이론에까지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맑스는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적 관계를 주장하지만 그러한 불의의 관계를 야기하는 문화적 가치관 즉, 상부구조(superstructure)를 부차적인 것으로 가볍게 던져버린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다. 호네쓰에게 있어서 노동운동과 계급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물질적 배분의 불균형이 아니라 특정 구성원의 정체성, 능력, 삶의 방식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의의 경험이다. 특히 페미니즘 운동은 이러한 인정의 결여에 따르는 불의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헤겔의 기본의지로서의 인정 개념, 그리고 인정의 영역 구분--가족, 시민 사회, 국가--을 발전시켜 인정의 세 영역을 사랑, 법, 그리고 성취로 구

분한다. 이는 부르주아-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생겨난 역사적인 인정의 개념으로서 앞으로 네 번째, 혹은 그 이상의 인정의 영역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의 전개에 맡기고자 한다. 사랑은 부르주아-산업 사회의 공사 영역 구분과 결혼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성립에 따라 형성된 영역으로 성장하는 개인이 자신의 육체적 욕구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의미로서의 인정이며 아동기가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생애 과정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139). 결혼(사랑)과 아동기의 제도화는 ‘사랑과 돌봄’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정의 영역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로 법의 영역은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놓아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구성원에게 법에 의한 평등성을 보장해주는 계기가 된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법적인 인정은 자신의 출신, 연령, 혹은 기능 등의 이유에 따라 누리는 사회적 평가, 따라서 신분적 질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적인 인정은 계층적 가치 질서와 분리되어 모든 개인이 나머지 사람들과 같은 법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범적 구조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법적인 존재로 존중 받게 되는 것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대두되는 인정의 영역은 성취, 즉 능력의 인정이다. 이는 임금 노동에 대한 종교적 인정에 영향을 받아 부상한 문화적 가치로서 산업적으로 조직적 노동 분업의 구조 안에서 개인적 성취를 인정하게 됨을 말한다. 호네스는 여기서 이러한 능력주의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음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즉, 무엇이 성취인가 하는 규정은 중산층 남성 부르주아의 경제활동을 참고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취로서의 인정 영역은 자원의 분배에 대한 합법적인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헤게모니적, 일방적인 성취의 가치관은 현 부르주아 사회가 규범적인 동의를 통해 자본을 분배하는 원칙을 제공하는 제도적 틀이라는 것이다(Ibid., 141).

정의의 규정에 대한 프레이저와 호네스의 논쟁은 정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

의 폭을 넓히는데 확실히 기여하고 있으나 주장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소모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의 논쟁은 정의의 대상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기보다는 정의 혹은 불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 프레이저와 호네쓰 모두 정의의 실현에 있어 심리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레이저의 분배의 정의는 바로 자원과 권력 등의 배분을 통해 공평한 물질적 복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프레이저의 분배의 정의와 인정의 정의를 물질적인 정의와 정신적인 정의로 양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 프레이저는 분배의 투쟁 안에서 인정을 위한 투쟁이, 인정의 투쟁 안에서 분배를 위한 투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분배와 인정의 구분은 정의 투쟁의 장의 구분이 아니라 어떤 정의의 문제를 분석하고 점검하는 시각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물질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분배의 정의는 일단 물질적인 복지에서의 정의를 보장하지만 이는 결국 심리적인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거꾸로 심리적인 정의 또한 분배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레이저와 호네쓰의 논쟁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호네쓰의 논점이다. 프레이저는 호네쓰의 정의 이론을 심리적 정의 모델이라고 부르며 호네쓰의 인정개념이 정의보다는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목적으로 한다고 비판한다. 자기실현이란 윤리(ethics)의 차원이자 도덕(morality)의 차원이 아니며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네쓰는 인정을 더 넓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호네쓰에 있어서 인정은 정의가 구현되는 영역인 동시에 정의가 구현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그는 인정의 세 영역(spheres)을 사랑, 법, 성취로 구분한다. 사랑은 감정적인 영역에서, 법은 제도의 영역에서, 그리고 성취는 물질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인정을 말하며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이 이루어져야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호네쓰는 정의를 심리적, 제도적, 물질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네쓰의 다차원적인 인정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정의를 개념을 조작화하고자 한다. 첫째 정의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정의는 사회구성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때만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프레이저의 “참여적 평등(participatory parity)”의 개념이나 호네쓰의 “(불의) 경험의 현상학” 개념은 모두 포괄성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적 평등은 바로 정의가 참여의 포괄성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호네쓰의 경험의 현상학 또한 정의의 구현이 모든 구성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전술했듯이 호네쓰는 학문적 담론에서 차별 혹은 불의의 규정이 드러나는 몇몇 소수 집단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불의의 담론화가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소수집단의 경험을 포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소수집단의 규정은 가변적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정된 소수집단은 경제적 빈곤층, 여성, 장애인 등이다. (물론 여성을 소수집단으로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최근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담론이 부상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이 외에 노인층이나 청소년도 경제나 문화의 소외라는 차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호네쓰가 주장했듯이 스스로 소수집단이라고 느끼는 집단이 자신들의 소수성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을 인정해주는 것도 정의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길이다.

둘째 정의는 심리적, 제도적, 그리고 물질적인 차원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정의는 단지 심리적이거나 단지 물질적인 차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 프레이저와 호네쓰의 공통된 주장이다. 정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이며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정의는 전술했듯이 근대에 들어서 평등사상과 함께 대두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는 정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심리적 인정 차원에서의 정의는 문화적 다원성 문제의 제기와 함께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심리적 차원의 정의가 앞의 차원의 정의와 별도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심리적 차원과 다른 차원이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때로 심리적 차원의 인정이 그 자체로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이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심리적 차원의 인정은 물질적, 제도적 차원의 인정과 연결되어 있고 이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이해의 충돌이 있을 경우 근본적으로는 물질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것이지만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심리적 인정의 결여가 원인이 되는 수가 많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의는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적 영역은 오랫동안 사회적 정의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에서 제외되어 왔다. 즉, 사회적 정의란 공적인 영역에만 적용되면 되고 가정 같은 사적영역은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영역을 정의의 적용에서 제외한 것이 여성차별을 존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프레이저는 가정 폭력이 “개인적” 혹은 “가정적”인 문제로 명명되면 이는 광범위한 논의나 논쟁에서 제외됨으로써 특정한 담론 영역—가족법, 사회복지, 비정상성에 대한 심리학 등—으로 돌려지고 성적 지배층의 이익에 따라 작동하므로 성에 따른 지배나 종속을 재생산하게 된다고 말한다(Fraser, 1997, 88). 여성 문제에 있어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고 전자는 후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가정에서의 성별 분업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남녀평등, 혹은 성별 정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으로 논의의 대상을 확장하여야 한다.

넷째, 정의에 대한 규정은 합의를 필요로 하며 이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 논의를 통해 얻어야 한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최대한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논의방식에서도 포괄성이 필요하다. 영(Young, 2000, 52-80)은 서로 위치가 다르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정치적 논의에서 배제시키지 않기 위해 세 가지 의사소통 기제를 도입한다. 이는 인사(greeting) 혹은 공공적 인정, 수사학, 그리고 이야기(narrative)이다. 인사 혹은 공공적 인정은 한 주체가 타인의 주체성(subjectivity)을 직접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

을 말한다. 수사(rhetoric)는 정치적 주장과 논의가 표현되는 방법으로 요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화자와 청자를 상호적 관계에 위치시킴으로써 포괄적이고 설득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한다.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집단이 공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세력화시키고, 다른 이들과 전체를 공유할 수 없는 정도로 다른 경험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등 배제적 경향과 다툼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념갈등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피상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집단들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딪치며 상호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구성원들 사이의 과열된 대립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정의를 구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와 언론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언론과 정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정의의 광범위한 구현을 위해서는 위의 네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정의의 특수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관용성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 안의 비동질성이다. 이는 국민의 민족 구성이나 생활양식 등에 있어서 나타난다. 더 이상 단일민족의 신화가 유지되지 않으며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배경 때문에 다른 체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살기 시작했고 문화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대별 혹은 취향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도 커졌다. 세계화는 사회 사이의 노동과 결혼 등에 따른 인구의 유동성을 야기하고 있고 정보화, 문화화(culturalization), 소비화(consumerization) 등의 현대사회의 추세는 사회 안에서 끊임없는 인구의 분화(계층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령, 소비 수준, 학력 수준, 취향의 차이 등에 따라서 문화의 향수나 정보의 교

환, 소비의 패턴 등에서 구분되며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분화를 촉진한다. 정보, 문화, 소비 등 영역의 중요성의 증가는 이 영역에서의 차이가 사회역학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구성원들 사이에 차이의 증가는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처럼 전통적으로 동질성을 강조해온 경우에 차이는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 특히 인종의 차이는 우리 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의 신화를 신봉하고 있어 민족적 동일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유교가 도입된 이후에는 중국을 우러러보고 다른 민족은 업신여기는 등 위계적인 인종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전통에서 볼 때 가난한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 가능한 일이다. 인종적 차이는 반드시 차별만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한국인들은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존경내지는 부러움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도 차이에 대한 부적응이라는 면에서는 차별과 같은 맥락에서 극복해야 할 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인종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차이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근원적으로 생각해볼 때 인종이 우리 사회의 유일한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균질한 사회였다기보다는 균질성을 장려하는 사회였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은 타자와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래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차이가 사회통합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한국적 보편적 평등관과 타협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통사회에서 차이의 인정은 위계적 질서에 근거한 것이었고 새로운 민주적 질서는 바로 위계적 차이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아담 셸리그만은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대 사회가 해

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한다(Seligman, 2003, 1647). 현대사회에서는 차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고전적 자유민주주의 전통의 관용(tolerance)과 다원주의(pluralism) 모델은 차이를 관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차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차이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차이의 부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차이의 미학화(aesthetization)이다. 이는 “차이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이며 그리고 취향에 대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차이에 대한 관용은 요구되지 않으며 모든 이가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른 형태는 차이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차이 혹은 차이의 영역이 관용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태도는 사실상 차이의 관용이라는 것이 실행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미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차이에 대해 관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그 차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차이가 싫지 않다면 이를 관용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관용은 불가능한 미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관용의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유입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물론 어느 정도 수의 외국인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국내 시장의 노동력 부족과 농촌남성들의 혼인대상 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유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상 노동과 결혼을 목적으로 인구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유럽을 위시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결혼 이주만 해도 북한 여성은 연변으로, 연변 여성은 한국으로, 그리고 일부 한국 여성은 일본으로 결혼을 위해 움직이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으며 이는 조금

더 유복하고 조금 덜 가부장적으로 보이는 사회에 대한 동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정영혜, 2006).

한국인도 결혼과 직장을 위해 해외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정영혜는 한국 사회에 있는 조선족에 대해 한국인들은 같은 동포로서 동질감을 기대함과 동시에 ‘한국보다 후진적이며 가난한 사회의 사람들’이라고 깔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정영혜, 4). 이에 대해 조선족 동포는 스스로를 한국인보다는 중국인과 동일시하고 ‘근친증오’의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족에 대한 태도이지만 실제로 한국에 있는 전반적인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차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차이에 대한 우월함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 다기보다는 차이에 대한 합법성(legitimacy)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반드시 지위가 낮은 외국인에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다른 외국인에서의 차이도 그 자체로 인정하기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외에 다른 문화적 차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대로 구성원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커지고 있고 문화적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적 차이가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세대 간이다.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감각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 수단이 신세대에게 의미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다. 컴퓨터 통신,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은 신세대의 중요한 문화 활동일 뿐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 유지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들의 컴퓨터에 대한 몰입은 개인적으로도 때로 건전한 일상생활을 해치는 수가 있지만 특히 세대 간에는 대화와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컴퓨터에 할애하는 지나친 시간도 그렇고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또한 세대

간 소통을 어렵게 한다. 컴퓨터 외에도 가치관, 소비활동 등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는 구분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해 신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충분한 관심을 두지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두 세대는 모두 다른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불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이런 면에서 세대 간에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 즉, 문화적 관용성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념의 차이도 이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가 되고 있다. 이념은 한국전 이후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금기 시 되다시피 한 단어이었던 80년대 이후 다시 등장하여 근래, 특히 2002년 월드컵 이후로는 과열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념은 보편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번역되지만 현재의 갈등의 양상으로 문제가 되는 이념은 좀더 정치적인 믿음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이념 갈등은 계급문제 혹은 경제적 분배의 문제와 관련해 좌파와 우파로 나누지만 권위와 자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환경, 인종, 핵문제 등 탈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믿음의 차이로도 나뉜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과 관련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통일과 대북 문제에 관련한 의견들의 차이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남남갈등의 핵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외교적, 군사적 관계설정을 넘어(강원택, 2004. 64) 가치관의 문제에까지 연결되고 있어 국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념갈등은 몇 번의 촛불집회나 시청 앞 광장 시위 등에서 격렬하게 표현되었고 이념이 다른 집단들 사이에 적대적인 감정이 형성되는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힘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념 갈등의 문제는 실제 국민들 사이의 이념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되지도 않은 채 때로는 언론에 의해 실제보다 더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인들의 정치전략을 위해 왜곡되기도 한다. 이념적 차이는 대화를 통해서 관용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이며 이에 앞서 실제 이념적 차이가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는 이념적 차이에 대한 궁극적 관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셀리그만은 현대 사회에서의 관용성은 언제나 집단 혹은 집단정체성에 관한 것이었고 따라서 현대사회는 차이에 대한 관용의 미덕을 실천한다기보다는 집단 사이 경계를 소멸해왔다고 주장한다. 관용은 집단 정체성이 강한 사회에, 다시 말해 집단 사이의 경계가 뚜렷한 사회에서 더 필요한데 현대 사회는 경계를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경계를 흐리게 해서 관용의 필요성 자체를 축소시켜왔다는 것이다(Seligman, 1965).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고 아래서 이것은 민족국가의 과제였다. 민족국가는 그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가의 이름 아래서 다양한 집단의 존재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시민권, 사회권, 인권 등 권리의 담보자로서 상호작용한다. 이 때 이러한 권리의 인정은 차이에 대한 관용을 대체하게 된다. 이렇게 관용은 집단중심적 행위에서 개인의 심리적 속성이나 개성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게 된다. 세계화는 이러한 추세를 다시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 각 곳에서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초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부상하고 있고 다시금 집단에 근거한 관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관용성의 문제는 이제 집단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에 모두 관련이 된다. 전술했듯이 우리 사회처럼 동질성을 믿고 강조하던 사회에서는 경계를 인정하는 것은 확실히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한다. 외국인의 경우 출신 국가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집단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특히 사적인 차원에서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결혼 이주의 경우 필리핀 여성이건 몽골 여성이건 내 집안의 아내 혹은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 그 집안의 급선무는 인종적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여기서 차이는 집안의 권력관계에 따라 때로 강조되고 때로는 부인된다. 즉, 내 집안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이를 부정해야 하지만 남편 혹은 시어머니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여성이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문화적 차이도 이러한 공과 사적 공간의 경계에 따라 때로는 강조되고 때로는 부인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복잡한 양상을

불 때 어디까지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어느 정도 관용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영역의 분석을 통해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 안에서의 차이는 점차 늘어갈 것이고 이러한 차이를 관용하고 나아가 선용하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해,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다. 신뢰

전 장에서는 관용성이 실제로 실현하기 어려운 미덕임을 설명하였다. 이 장에서 다룬 신뢰(trust) 역시 실행하기 쉽지 않은 대단히 이상적인 가치임에 틀림없다. 관용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불가능한 명제를 가지고 있다면, 신뢰는 확신을 할 수 없고 동시에 위험성을 수반하는 상황을 선택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의 명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뢰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데 특히 상대방이나 상황에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다(Seligman, 2001, 620). 셀리그만은 신뢰를 확신(confidence)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아는 상황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신뢰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뢰는 관용보다 한 걸음 더 적극적인 행위인데 관용성이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려는 노력까지를 의미한다면 신뢰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와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는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현대사회 그리고 현재의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가치이다.

셀리그만에 의하면 신뢰 또한 근대적 개념이다(Ibid., 619). 확신은 상대방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상대방이 그 제재의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근거로 하는데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원적 정체성, 즉 제도적 역할(institutional role)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Ibid., 626). 이에 반해 근대사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전통사회가 구성원 사이의 친숙함, 그리고 위반에 대한 처벌의 조합으로 서로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였다면 근대사회는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근거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근대사회는 더 이상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근대사회에서 개인은 스스로 도덕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능체(agent)이다. 근대사회는 한 개인에게 동시에 여러 개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러한 역할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호작용이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근거하게 되고 따라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뢰에 유사한 무엇에 근거하지 않고는 사회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대사회가 부여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형성하는 정체성이 제도적 역할에서 독립적이고 여러 역할 사이의 협상을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은 현대사회의 작동원리로서 신뢰의 개념을 대두시키지만 동시에 이를 필연적으로 위험성을 수반하는 개념으로 만든다. 즉, 신뢰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이다. 불확실하고 복잡적이고 개인성을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에서 원만한 사회의 운영을 위해 신뢰는 꼭 필요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 개인들이 이를 자신들의 상호작용의 원칙으로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된다. 신뢰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사회를 결합하는 원칙으로서의 신뢰를 사회적 자본과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보기도 한다(Paxton, 1999; Zucker, 1986; Fukuyama, 1995).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다양한 현안, 예를 들면 민주주의, 경제적 성장, 교육, 복지, 지역 활성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변수(이재열, 1998. 65)”로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물질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대비되는 형태로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한 것으로 정의한다(콜만, 이재열 1998, 67에서 재인용). 이런 면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불균등하게 배분된 사회로 규정된다. 사회적 자본에는 개인적 혹은 사적인 차원과 제도적 혹은 공적인 차원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전

형적으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뢰는 높고 공적인 제도와 사회적 규칙에 대한 신뢰는 낮은 사회라는 것이다.

신뢰가 사회적으로 형성, 유통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시장화의 개념이 있다. 시장화란 개인들이 선택을 통해 다른 개인들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대사회는 익명의 개인들 사이의 공동체이어서 언제나 위험성을 수반한다. 여기에 울리히 백(1992)은 외부효과와 내부화라는 외부성의 개념을 통해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외부성이라 함은 “한 행위주체의 행위의 효과가 자신에게만 아니라 타행위자(들)에게도 의도하지 않게 미치게 되어 있을 때 이러한 부가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고려 없이 행위를 하는 경우 나타나게 된다(이재혁 1998, 99).” 이러한 외부성은 개념 자체가 행위당사자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볼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계산가능성(calculability)과 사회적 책임성(accountability)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부정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보상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술적 불확실성 외에 ‘전략적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분업이 증가하고 행위주체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감에 따라 사회 내의 불확실성 또한 증대한다(ibid., 102)”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불확실성은 “위험과 동시에 행위자에게는 경제적 이윤의 기회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는 “자본주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윤의 기회가 동일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재혁은 이처럼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의도하지 않게 얽혀지는 영역을 사회적 시장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비즈니스 영역이라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나 행위전략이 교환되는, 담론의 영역이다(ibid., 104). 이재혁은 이를 사적영역이나 공적영역과는 구분된 ‘공공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상식적으로는 공적영역에 가깝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혁은 시장화를 “공공영역에서의 일정한 행위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는 믿음의 형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보편적 타자에의 신뢰, 그리고 사회 내 경쟁의 원칙에 대한 신뢰(제도신뢰)에까지 합의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시장화의 실패는 결국 제도에 대한 불신을 말한다. 한국에서 이런 의미의 시장화가 제대로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기회가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해방 후 산업화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자원과 정보가 특정 통로를 따라 제한된 범주의 사람들 사이에 배분되는 것이 관행화되었고 따라서 공적인 정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갈등 심화는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제도에 대한 불신보다는 어떤 특정한 시대적 차원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김용학은 신뢰를 대상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김용학 1999, 133)⁴⁾. 그의 분류를 적용하자면 현재 한국 사회는 정태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보다 동태적이고 사건으로서의 공적 신뢰가 현저히 떨어진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은 한편으로 잠재되었던 갈등이 민주화를 계기로 표면화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교육제도나 지역행정에 대한 불신을 말할 수 있다.

교육제도는 최근에 와서 신뢰도가 가장 실추한 제도이다. 최근의 평준화 문제, 입시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갈등에서 잘 나타난다.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 혹은 정책들이 개인들 사이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도에 스스로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데 다시 말해 제도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해관계의 충돌로 나

4) 신뢰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으며 신뢰의 형태가 어떤 상태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정태적인 것과 특정 사건에 대해 계산적으로 반응하는 동태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 중 혈연(학연, 지연)에 대한 것은 상태에 대한 신뢰이며 계약자에 대한 것은 사건에 대한 신뢰이다. 제도에 있어서는 추상적 제도(화폐, 과학)에 대한 것은 상태로서 정태적 공적 신뢰이며 특정 시대나 사회의 정책에 대한 신뢰는 계산적이고 동태적인 신뢰이다.

타난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근본적으로 교육제도에 대한 지나친 신뢰에서 유래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의 기능이나 역할이란 의미로서 교육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신뢰는 전통적으로 높았다. 교육은 조선시대부터 신분상승이나 유지의 도구였고 이는 해방 후 새로운 교육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기에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그리고 그 결과 높은 인적자원의 결과라는 것은 상식으로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육을 이 사회에서 앞서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보는 것이 역설적으로 교육정책에 불신을 불러온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교육경쟁에 뛰어드는 한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공평한 교육정책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은 각 개인이 자신만의 교육원칙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의 가장 좋은 예는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에 뛰어드는 것이다. 공교육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성공적인 기회를 주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개인적인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목고의 경우도 공식적인 설립취지나 목적은 무엇이든 간에 교육수혜자들에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해주는 통로라는 것이다. 공적인 담론과는 달리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교육제도의 의미는 경쟁에서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키우고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오늘날 교육갈등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처럼 많은 경우 제도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에 대한 불신이 오늘날 많은 갈등의 중심에 있다. 근본적인 사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담론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 여기에 제도에 대한 신뢰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많은 부정부패가 존재하고 이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잘못일 경우가 많다. 이는 앞에서 말한 시장에서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상행위는 개인의

선택이며 여기에 책임이 동반된다.

물론 선택과 책임의 완수가 의지로서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셀리그만은 신뢰를 사회운동의 개념으로 가정할 수 있기 위해서 신뢰를 수행하는 주체의 개념이 필요한데 사회학 이론이 제시하는 능체(혹은 능동성, agency)의 개념은 이를 설명하기에 역부족임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사회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인간의 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보든지, 아니면 사회권위에 부응하는 구조의 산물로 본다는 것이다(Seligman, 2006, 54). 전자의 경우 어떤 선택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의지만 남게 되고 후자의 경우 모든 선택을 구조의 산물로 보게 하는 권위의 힘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한 편에서는 개인의 의지는 집단의 양심에 완전히 종속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자신의 내부로부터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욕망의 동일개념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불확실성의 현대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주체로서의 능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셀리그만의 해결책은 의례(ritual)의 개념이다. 그는 이러한 사회학적 이분법--개인적 의지/공유된 사회성, 사고/행동, 그리고 결합(cohesion)/이해--으로부터 잠시 시선을 돌려 반드시 사고에 종속되지 않는, 사고로부터 거리를 가질 수 있는 “이것 없이는 공유된 세계가 가능하지 않은, 사회와 개인 모두의 구축에 필수적인, 특정한 행동 양식(modality)으로서의(55)” 의례를 사회통합의 방법으로 제안한다. 이는 인사말 같은 에티켓 차원의 행위에서부터 제사나 졸업식 같이 좀더 공식적인 차원의 행사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의례는 단기적인, 그러나 반복적인 차원의 신뢰이다. 신뢰가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행해지는 동안 계속되는 행위 혹은 상황이라면 의례는 “안녕,” 혹은 “제발(please)” 같이 에티켓이나 매너를 수행하는 동안만 관계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상 속의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므로 이를 행하는 사회의 구성원에게 좀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실행하고 있는 규칙으로서 같은 행동에 대한 같은 결과의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일관적인 견해, 즉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장치인 것이다.

신뢰와 의례를 둘러싼 셀리그만의 사회학적 견해에 반드시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신뢰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는 특히 사회적 구성과 구조가 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믿을 수 있는 원칙과 이에 따른 일관적인 시행, 그리고 위반에 대한 확실한 제재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점은 개인사이의 신뢰형성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회에서 개인 차원의 신뢰가 높다는 것은 거기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신뢰가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은 자식에게 일관적으로 희생하는 부모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우리의 가족제도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공적영역에서도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되 여기에 대해 모든 이들이 책임감과 보상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이 작업의 어려움을 증언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여러모로 이러한 작업을 쉽지 않게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구축은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신뢰의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개별적인 과제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상호작용이 예측 가능하고 상식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뢰가 구축된 사회이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의례--즉, 모두가 실행하는 규칙--의 활성화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통합을 위한 현실 분석

1. 차이의 부상	67
2. 이해의 충돌	93
3. 구조 변화	114
4. 현실 분석의 개념도	127

1. 차이의 부상

20세기의 국외와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21세기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와 모습을 확연히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 중 어떤 것은 좀 더 가시적이고 어떤 것은 비가시적이며 어떤 것은 국민이 잘 의식하고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기는 하지만, 모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팔목할 만한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사람은 다 개성이 있고 따라서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차이는 언제나 존재해 온 것이지만 지금 논하고자 하는 차이는 집단을 기반으로 하고 세계화나 문화지형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면에서 구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이 중 언급할 만한 것은 세 가지 정도인데 이주민(노동, 결혼, 탈북)으로 인한 언어, 생활습관, 가치관 등 다른 문화의 존재, 세대 간 권력관계와 변화와 청소년 문화의 부상,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분화에 따르는 세대 간 차이, 그리고 민주화 운동, 개인적이고 상호적인 미디어의 발달, 정치적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난 이념 차이이다. 이러한 인종 집단, 연령 집단 그리고 신념 집단에 따르는 뚜렷한 차이의 존재는 국민통합이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한번쯤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협동과제에서는 이처럼 국민 사이의 차이에 대한 주제--이념갈등, 여성 결혼이주자와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갈등--에 대해 하부과제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여기서 정리해보기로 한다.

가. 여성 결혼이주자와 문화 차이

세계적으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⁵⁾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성이주자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통

5) 남성 중심이었던 이주인구에서 여성이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게 된 현재의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Zlotnik(2003)은 동/동남 아시아의 이주자 중 여성 비율이 '60년도 46.1%, '90년도 48.5%, 그리고 2000년에는 50.1%로 늘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다른 연구자들(야마니카, Piper)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홍콩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는 전체 입국 외국인 4,999,579명 중에 여성은 2,033,279명으로 1994년에 비해 114.2% 증가하여 남성의 같은 시기 58.6% 증가율의 거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남성의 이주는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여성 이주는 결혼이나 성산업 관련 취업과 관련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사이의 결혼은 1990년에 619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5년에는 31,180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9.9%를 차지한다. 그리고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간의 결혼까지 포함하면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 건수의 13.5%에 달한다(협동연구총서, 2006-02-07, 여성 결혼이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 및 소통을 위한 정책과제 참조).

2006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성 결혼이주자는 55,408명으로 이 중 중국 출신이 63.2%로 가장 많으며 이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출신이 20.3%이다. 이 외에 몽골, 우즈베키스탄,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이 한국남성의 배우자로서 살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주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일원이 됨으로써 한국 사회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이들로 인한 변화는 사회적 차원에서 그다지 가시적이지는 않다. 이는 이들이 가족의 일원으로 한국 사회에 들어와 흠어져 살기 때문에 집단적인 존재감이 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국 문화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예기하고 이를 위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의 하나로서 이들과 나머지 국민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차이는 이주여성의 시각과 그들의 가족의 시각 양쪽에서 보기로 한다.

(1) 이주 여성들의 시각

여성 결혼이주자들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대부분의 경우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취업을 하기 힘들고 또 가족의 기

대 때문에 가정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주민등록증을 얻을 동안은 신용카드를 발부받는다는가 혹은 선거에서 투표를 한다든가 하는 경제활동과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으므로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딪치는 차이는 일상생활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데 언어와 이에 관련한 문화수행의 차이, 일상생활양식의 차이, 그리고 가족구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와 언어 수행의 문화적 차이는 언어 자체의 차이는 물론이고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수행되는 인간관계의 차이를 말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른 문자와 어휘뿐만 아니라 어순, 시제 등의 문법과 음성, 음량, 음조 등의 발음적인 요소까지 모두 새로 습득해야 한다. 이는 언어 구조가 전혀 다른 동남아 등 외국 출신의 여성들뿐 아니라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한국계 중국 여성에게도 해당된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억양, 단어 사용, 관용적 표현 구사에서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 차이가 주는 불편 혹은 불이익을 느끼고 있다. 같은 한국계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조부모들이 현재 한국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투리를 쓰는 것을 들을 경험 정도가 있을 뿐 한국어에 대해 생경하기는 다른 외국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 습득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배경에는 한국어에 내재된 위계질서적 표현과 수행이 큰 몫을 한다. 관용적 표현을 구사하기 어려운 것은 어느 외국어를 배울때나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어에 독특한 존댓말과 연령이나 위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표현 등은 이들이 체화하기에 무엇보다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한국어 관련 예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자본임을 깨닫는 것이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일상생활양식에서의 차이는 음식준비나 식사하기, 그리고 목욕습관 등 결혼을 하기 전에는 말로 설명해도 알기 힘든 사적이며 가족적인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 결혼이주여성들의 놀라움은 적지 않다. 먼저 음식 자체의 차이로서 우리와 식성이 전혀 다른 동남아 여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맛도

없는 음식이다. 이는 한국계 외국여성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아 중국 여성의 경우 그곳에서 김치를 봤더라도 한국식 김치하고는 다른 것이어서 한국음식은 여전히 낯선 것이다. 음식 맛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음식 가짓수와 준비하는 방식 등 한국의 음식문화는 그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외식이 예외적인 식사가 아닌 그들에게 한국의 대부분의 음식을 집에서 준비하는 것도, 한 번에 음식을 다양하게 많이 먹는 것도 낯선 일이다. 특히 명절이나 제사 같은 행사에는 그 많은 종류와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것이 놀랍다고 한다. 또 음식을 한 끼씩만 준비하고 그 끼에 다 먹어 없애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남은 음식을 보관하여 또 먹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특히 놀라우며 동시에 힘든 일은 이러한 음식 준비의 부담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사실이다.

음식 에티켓에 관한 한 이들은 한국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여유를 갖고 식사를 즐기는 동남아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먹고 식사 후에는 빨리 치우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불만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식사 시 씹는 소리, 마시는 소리 등을 내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고 특히 태국 여성들에게는 불쾌하기까지 하다고 한다. 몸의 청결에 대한 기준도 사뭇 다른데 태국 여성들을 필두로 아침, 저녁 목욕을 필수적으로 여기는 동남아 여성들은 잘 씻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습관이 충격적일 수도 있다.

가족 구조와 이와 연계된 젠더 구조의 차이는 이들이 늦게 발견하지만 다른 문화적 차이보다 더 수용하기 힘든 문화적 국면이다. 가족의 구성, 자기 본가와 남편 본가와 관계, 가족 내에서 남녀의 역할 구분과 권한의 차이, 시부모와 다른 시집식구와의 위계질서 등이 그것이다. 가족의 구성이나 범주에 대해서는 한국계 중국인이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포함한 모든 국적의 여성들이 차이로 인식하는 것인데 특히 동남아 여성들은 여러 면에서 큰 혼란을 경험한다. 베트남(특히 남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의 전통적 공계(cognatic) 혹은 양변적(bilateral) 가족구조 출신의 여성들은 부계에만 초점을 맞춘 한국의 가족제도의 원리와 그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대가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동남아의 공계나 양변적 체계는 핵가족을 기초로 하여

부계와 모계 모두를 인정한다. 가족이란 바로 부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핵가족이고 가족 내에서 여성은 며느리로서보다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 받는다. 시집식구와 며느리의 관계는 위계적이라기보다는 양자 간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호혜성을 전제로 한 주인-고객의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이며 따라서 여성은 자기 집에서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Hanks, 1962; 김민정, 1997; 유인선, 1989, 1996).

이러한 체계를 체화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은 부부 간의 관계나 가사, 자녀 양육 등을 자신의 소관이며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 영역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시집식구 특히 시어머니의 관여나 강압은 자신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직계 가족이 아닌 시집식구에 가사노동을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시부모와 같이 산다는 것이 그들의 식사나 다른 일상사를 모두 챙겨야 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 간의 성 역할 구분과 여성의 가사분담에 대한 불만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결혼생활이 상당히 지속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출신 문화 사이와의 격차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의 본국에서는 여성들의 경제, 사회활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28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베트남 출신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지지해준다. 여성들이 바깥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부부가 가사와 육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내/며느리가 집에만 있는 것을 당연시여기고 가사와 육아를 자신이 전담하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낼 때 이는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이해도 가지 않는다. 특히 남편이 자신의 과도한 가사부담을 보고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원망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성 역할 분담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운용원칙에까지 확장되어 왜 한국여성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도 집에서 애만 키우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국의 성 역할 구분에 대한 불만은 여성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남편의 친족들이 자신을 남편의 아내로서(제수씨, 형수, 누구 부인)나 자식의 어머니로서(누구 엄마)로만 부르고 남자들

의 모임이 있을 경우 그들의 시중을 들게 하거나 여성들의 모임을 ‘집안일은 안하고 놀러만 다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이다.

결혼한 여성을 완전히 시집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집만을 섬기도록 하고 특히 여성의 본가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으로 결혼해올 때 전혀 예기치 못하던 일이다. 양변적 가족체계에서는 딸, 아들 모두 부모로부터의 상속권과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딸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Potter, 1977; 김민정, 1997).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여성이 결혼을 하더라도 중단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여성이 결혼을 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집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 자신의 집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위상을 확립해간다. 재산에 있어서도 부부 각자의 재산권을 유지하며 경제활동을 통해 이를 운영해간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은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며 또 이를 통해 친정에 경제적 보조를 함으로써 자신의 딸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시집 식구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집안일이나 농사일은 수입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바깥일을 못하게 하고 바깥일을 하는 것을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 좋지 않으며 “돈만 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2) 시집 식구의 시각

한편 이들의 시집식구들 또한 이런 며느리가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여성들의 남편이나 시집식구들의 타문화에 대한 경험은 대부분 제한적이다. 이 여성들의 출신국에 대한 정보, 경험 혹은 이해가 거의 전무한 경우 이들의 행동은 옳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 음식을 잘 못 만드는 것은 우려한 대로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들의 예의 없는 태도와 행동은 참으로 못마땅하다. 부인이나 며느리가 어른에게 인사도 안하고 손님이 와도 누

운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나 손님 앞에서 다리를 뺀고 앉는다든가 자주 다른 이주여성들을 불러 “놀고 파티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또 한국음식에 적응하려는 노력 없이 자기네 음식방식을 고집하고 혼자서 자기 음식을 해 먹는 것도 만족스럽지는 않다. 더구나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자기 집에 송금을 하기 위해 돈을 벌러 다니는 것은 나아서 말려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가족들은 이 여성들의 차이가 동등한 문화 사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 문화의 열등성으로 해석된다. 가족들과 이주 여성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주여성들이 불만인 가운데서도 한국문화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반해 가족들은 이들 문화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여성들의 남편들의 경우는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에 비해 부인의 배경문화에 대해 다소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인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라는 요구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부인의 언어나 문화를 좀더 잘 알면 가족관계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과 자료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관심을 실행에 옮기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들이 부인과 만나기 전에 결혼중개업체나 지인을 통해 부인 문화에 대해 얻은 정보는 극히 단편적이며 제한적이다. 이 정보들이 옳은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인의 나라를 방문한 경우 음식문화, 결혼식, 처가 식구들의 태도 등에 의해 두 문화 사이의 차이를 목격하지만 그 차이의 속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방문경험이 실제 결혼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극히 소수의 남편들은 해외생활의 경험도 있고 부인의 나라에서 생활해본 경험을 통해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외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부인이 빨리 한국말을 터득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나. 새터민과 문화 차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의 수는 8,104명으로 알려져 있다(통일부, 2006). 이처럼 현재 국민 중 새터민의 비율은 지극히 미약하지만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인구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새터민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새터민은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어서 가치관, 행동과 언어양식, 규범, 즉 문화가 남한 사람들과 다르다. 이러한 새터민과 남한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어질 통일 후 사회통합에 대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다른 유입인구에 비교할 때 새터민은 비교적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여성 결혼이주자의 경우를 보면 언어에서부터 가족구조에 까지 대단히 이질적인 문화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새터민은 언어와 전통을 공유하는 점에서 훨씬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모두 가부장적 구조가 세계 어떤 지역보다 강하다는데서 동질성의 근본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을 중시하는 것이나 연령에 따른 위계질서 등도 유사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새터민과 나머지 국민 사이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 안에서의 차이는 때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다. 특히 남한의 통상적인 영어 사용은 새터민에게는 대단한 언어장애로 받아들여진다. 또 남한 사회도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기는 하나 북한보다는 훨씬 성평등적이고 여성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터민들은 문화적 격차를 느끼기도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차이는 다른 체제의 경험에서 오는 가치관과 행동규범의 차이이다. 이는 새터민 자신들에게도 남한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장애이지만 남한 사람들 편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 언어

남북이 공통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전제는 새터민들로 하여금 언어와 관련 하여 오히려 더 갈등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면이 있다.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의 음운학적이고 용어상의 차이 뿐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체제·문화적 간격’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협동연구총서, 2006-02-06 참조).” 이들의 사투리는 단순히 여러 방언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들이 국외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낙인”이 된다. 이러한 북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차이’가 있는 사람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북한 사투리는 이들이 남한에 적응하기 위해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이다. 반면에 남한 사투리도 이들이 차이를 부각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들이 이 사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 사람들은 사투리로서 알아듣는 각 지방의 다른 단어나 발음 등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들의 말을 남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언어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한국어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영어 단어는 이들에게 이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들의 직업능력을 낮추는 한 요인이 된다. 특히 고령자, 저학력자, 생산직과 단순노무자의 경우 영어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2) 가족 및 젠더 구조

아마도 북한은 지구상에서 남한보다 더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진 몇 안 되는 사회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여성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새터민들은 남한 사회의 남녀평등적 경향이나 여성들의 여권의식에 놀라움을 표현한다. 특히 새터민 남성들은 남성우월 의식과 남존여비관에 익숙하여 새로운 젠더구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극단적으로는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강한 새터민 남성의 경우 (특히 북한을 이탈한 시기가 4-50대일 때), 이쪽에 와서 의식의 변화를 겪은 부인이 남편의 권위의식에 저항할 경우 가정폭력으로까지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고 한다. 반면에 남한의 젠더 구조와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지 않다. 그래서 가부장적 의식과 태도를 지양하고 집안일을 돕는 것을 당연시하고 실행한다. 특히 이미 중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남존여비사상이 이미 약화되어 있고 스스로 의식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한다.

새터민 남성에게 이러한 노력은 쉽지 않겠으나 새터민 여성 중에도 새로운 젠더 역할 구조에 불편함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새터민 여성들은 남한의 남녀평등관과 여권의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의식변화를 경험하며 일부는 남편에게도 의식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이러한 태도를 “못된 것부터 배운다(서울대 통일연구소, 2006, 197, 협동연구총서 2006-02-06에서 재인용)”로 간주하고 이것을 새터민 부부간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장 중심의 가족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남한에서 경제권이나 권리의식을 갖게 된 것이 한편으로 새롭고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과 자신 사이의 의식변화 속도 차이로 인해 불협화음을 일으켜 혼동스럽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북한에서의 체제가 더 편했다는 남성지상주의에 대한 향수를 고백하기도 한다.

(3) 직업 윤리 및 가치관

직업세계는 무엇보다 새터민과 다른 국민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영역이다. 앞에서 언급한 가족이나 젠더 구조의 차이는 주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어서 새터민과 남한 주민들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새터민 사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직업세계는 새터민이 남한 주민과 가장 깊이 접촉하는 영역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두 측 사이의 차이는 가장 첨예하다고 할 수 있다. 새터민의 입장에서 직업세계에서의 첫 장벽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직업적 능력과 경험이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자신들에 대한 한국사회이 편견과 무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자신들이 받은 교육이 한국의 그것과는 다르고 영어나 컴퓨터에 대한 능력의 결핍 등 자신들의 한계로 인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난관을 뚫고 직업을 얻게 되더라도 장벽은 사라지지 않고 더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새터민들이 한국의 직장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는 장벽은 남북한 간 노동 강도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북한의 ‘그럭저럭 시간 때우기’와 한국의 ‘죽기 살기로 일하기’의 대조로 표현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갓은 휴식과 느릿느릿 일하기의 형태로 노동시간의 사적점유가 이루어진다(협동연구총서 2006-02-06).” 그런데 남한에 와서 느낀 노동 강도는 이러다가는 죽겠다는 위기감이 들 정도라는 것이다. 야간노동의 경우도 북한에서는 일하다 졸다 해도 목표량을 채우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여기서는 시간 당 단 5분의 휴식시간 외에는 전혀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작업 중 졸면 옆에서 비난을 하므로 야간작업을 위해서는 낮에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노동 강도는 새터민들의 이직이나 사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새터민이 느끼는 차이는 노동 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노동 강도는 근무태도,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노동규율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저 생산량이 높은 것만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자의적으로 정말 열심히(ibid.)” 일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근무시간의 일부를 사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관련해서도 규율을 위반하는 것이 목인된다고 한다. 출퇴근이나 휴가에 대한 규율은 특히 ‘90년대 이후 식량난을 계기로 더욱 느슨해졌다. 이러한 노동규율에 익숙해진 그들은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휴가를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새터민들은 한국의 노동 강도나 근무태도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진다. 한편으로 일의 양과 질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에 거부감도 있고 특히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근무량 때문에 일을 그만 두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책임감을 인정하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력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4) 개인주의와 경쟁체제

한국 근로자의 열성적 근무방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직장에서나 다른 분야에서의 개인주의적 태도와 지나친 경쟁체제에 대해서는 새터민들은 부정적이다. 북한에서의 직장동료관계는 가족관계의 연장이다. 직장은 노동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지긴 관계로 발전하는데 명절 등 일 년에 몇 차례씩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여흥을 즐긴다. 동료의 관혼상제는 당연히 참가하여야 하고 이는 이들 집단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작업공동체가 확장되기 때문에 작업만이 이들에게 중요한 업무는 아니고 작업은 서로 나누고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작업장에서도 개인의 경계가 확실한데다가 직장에서의 관계를 사적으로 확장하려하지 않아 동료사이의 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새터민들은 남한의 직장문화가 “동료들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주의적이며 지나치게 경쟁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은 도가 지나쳐서 삶을 피곤하게 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능력에 따라 대우를 조절하는 것도 사회주의 체제와는 다른 점이다. 직장동료를 맘 편히 믿고 대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에게만 가두어놓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새터민의 눈에 보이는 한국의 직장문화이다.

이러한 경쟁체제가 적용되는 다른 분야가 교육이다. 공교육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든다는 것도 이들을 힘들게 하고 이러한 사교육 없이는 아이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자신들이 사회주의의 보장을 떠나 살벌한 경쟁체제로 들어섰다는 것도 적응하기 힘든데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영원히 뒤처지게 된다는 것은 더욱 무서운 현실이다.

이처럼 새터민과 나머지 국민들과의 차이는 없는 듯하면서 있고, 좁은 듯하면서 넓다. 어떤 점에서는 서로의 표면적 유사성이 더욱 차이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는 면이 있다. 이 차이의 해결은 주로 새터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해소된다. 남한의 방식을 북한의 것보다 우월한 것으로 받

아들이기는 것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 쉬운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남한 주민의 차원에서도 차이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역시 필요하다. 어쨌든 새터민은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 청소년과 부모의 문화 차이

세대갈등은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해 왔다. 즉, 연령별로 생각이나 행동의 차이는 있게 마련이고 어느 세대나 자신의 전, 후 세대와의 갈등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각 세대에게 세대의 차이는 그 전의 것과는 다른 독특한 것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세대 차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어서 요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나 행동이 기성세대의 그것과 빠르게 달라지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떤 학자는 이를 “세대 간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굳이 절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대단절”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함인희, 2006)”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세대 간 차이를 점검하는 각종 조사에서는 막상 세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보다는 연령 효과 차원의 차이만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세대의 세대 간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낸다.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차이의 본질에 대해 협동과제 하부과제인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과 문화소통 증진 방안(협동연구총서, 2006-02-05)”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 청소년 문화

세대 간의 의식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과 성인 사이일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은 어느 세대보다 물질적, 기술적 진보와 국가경제력 향상의 혜택을 많이 받은 집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능란하고 경제적 욕구가 강하며 자신들만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과 성인 사이에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문화적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접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와 정보기기의 이용이다. 이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컴퓨터 이용시간이나 실제 이용시간은 모두 그들의 부모보다 길었다. 컴퓨터 오락에 사용하는 시간이나 이메일을 제외한 채팅, 댓글달기 등의 인터넷 사용도 모두 부모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인터넷 쇼핑, 그리고 MP3 이용 등 정보기기의 활용도 청소년이 부모보다 훨씬 활발하였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컴퓨터와 정보기기에의 몰두는 청소년 자신들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컴퓨터나 정보기기를 잘 배우고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에 비해 자신의 아이티 능력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 청소년들의 컴퓨터 혹은 다른 정보기기 이용은 그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주로 게임이나 채팅에 한정되어 있어 부모들의 인정을 받기 힘들다. 오히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채팅을 하는 것을 부모들은 싫어하고 못하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다. 일부 청소년들은 홈피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기도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홈피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느냐 보다는 공부에 투자해야 할 시간이 여기서 낭비된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들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외에 텔레비전 시청이나 음악 감상에 있어서도 청소년과 성인의 취향은 많은 차이가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있어서 청소년은 뉴스/시사를 제외한 드라마, 쇼, 오락, 코미디에서 성인보다 선호도가 높다. 또한 음악에 있어서도 랩/힙합/록/메탈 장르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에서도 청소년이 성인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문화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문화 자체를 더 즐기고 또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성인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문화자본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에게는 문화가 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콘텐츠로서의 문화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에서도 청소년의 문화적 의식은 성인보다 높다. 즉, 청소년

년들은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의복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멋을 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한다. 특히 요즘 청소년의 특징은 유명메이커를 선호한다. 그래서 단정한 옷을 사주는 부모와 일단 비싸고 유행에 맞는 옷을 선호하는 청소년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생긴다. 이는 취향에 대한 차이일 뿐 아니라 소비나 경제개념에 대한 차이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요즘 청소년들은 소비를 즐기는 소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차이의 속성

이처럼 청소년과 부모 세대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문화영역이 과연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 가장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설문조사(협동연구 총서 2006-02-05)에서 청소년과 부모에게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영역을 물었을 때 청소년은 1위가 학업, 2위가 생활영역, 그리고 3위가 문화영역으로 답하였고 부모는 1위가 학업, 2위가 문화, 3위가 생활영역으로 답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문화적 차이는 다른 차이에 비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 문화적 차이는 있으나 이것이 세대 갈등을 가져오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청소년과 부모가 상대방이 문화에 대해 인정과 관용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편의 문화에 대해 무관심하다고도 할 수 있다. II장 4절 국민통합의 원칙에서 논한 것처럼 관용이란 흔히 무관심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 다른 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부분에서의 갈등은 문화로서의 갈등이 아니라 학업영역에 종속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즉 청소년의 문화 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용은 이것이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영역이 학업영역이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청소년과 부모 모두 학업영역에서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낀다고 답하였다. 즉, 청소년은 부모님이 공부나 학업성적만을 중요시하는 것

에 대해 불만이고 부모는 청소년이 학업을 등한시한 채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불만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 활동에 대한 관용도는 이것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학업 영역에서 세대 차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다른 조사결과와 연관하여 보면 얼핏 보기에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학업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청소년과 부모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학업에 대한 기대 수준을 물어봤을 때 청소년과 부모 모두 대졸, 박사 학위 획득, 석사 학위 획득의 순으로 답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은 모두 2% 정도에 불과하였다(ibid.). 이는 한국 청소년과 부모는 대부분이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것을, 청소년의 21%, 부모의 29.8%는 박사 졸업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학업 영역에서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청소년 내부의 갈등이다. 청소년들도 학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나 청소년 시기의 특성 상 실제로 실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다. 스스로도 자신이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부모가 지적하고 꾸지람하기 때문에 이를 참기 힘들 수 있다. 다른 이유는 부모와 청소년의 기대 수준의 차이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과 청소년 입장에서의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대학을 가야하겠지만 부모처럼 일류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그만큼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는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다. 우리 사회처럼 교육에 대한 경쟁이 높을 경우 학업에 대한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되는 바는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 사이의 가치관의 유사성이다. 학업에 대한 가치관은 그 중의 하나이고 가족, 결혼, 직업 등에 관한 가치관에서도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사고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가정의 화목은 생활목표 의식에 있어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결혼도 양 쪽 모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다. 직업관도 양 쪽 모두 전

문직, 경제적 보상이 높은 직, 그리고 인기직의 순위로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의 유사성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 가치관이라 함은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의 행동은 성인의 그것과 적지 않게 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관에 있어 청소년들도 성인처럼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나 청소년의 경우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나 혼자 사는 것이 낫다의 응답 비율이 성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을 이상적인 생활 형태로 보는 데는 청소년과 성인이 유사하지만 결혼에 대한 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대안적인 생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결혼상대에 대해서도 1순위는 양쪽 모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청소년들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보다 재미있는 사람을, 부모는 역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차순위로 선호하는데 차이가 있었다. 직업에 있어 양쪽 모두 전문직을 가장 선호하고 경제능력직과 인기직 순위로 선호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에 있어서는 직종 사이에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은 이상적으로는 전문직을 택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직업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통일에 관해서 청소년도 성인처럼 자유경제주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비율이 훨씬 낮고(성인 64.0%, 청소년 46.4%) 반면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나 안 하는 것이 좋다에 성인보다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3) 차이의 해석

이처럼 청소년과 그 부모 세대 사이의 차이는 원칙적, 선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전략적, 행동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전자 때문이 아니라 후자 때문이라는 사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적 차원에서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문화

적 영역은 세대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가 행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공동의 생활영역을 만들어 가는 면에서 중요하다. 문화적 취향 혹은 선호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긴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화 활동에 공통 영역을 갖지 못하면 양측의 생활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청소년에게 문화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로 문화는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학업영역처럼 부모와 자녀 모두 가장 중압감을 느끼는 영역에서 양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모는 자녀를 재촉하는 악역을 하는 것을 의무로 느끼고, 자녀는 이러한 압력이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청소년과 부모의 문화적 차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양측의 문화적 간극은 청소년의 지나친 정보통신오락 기기에의 의존과 부모의 문화적 척박함이 겹쳐져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가정에서 문화적 활동의 결여는 특히 남성들의 낮은 문화적 관심 때문임을 선행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이수연 외, 2005). 아버지를 문화 활동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자녀가 포함된 가족 단위의 활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개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화를 통해 자녀들과 가까워지려는 부모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라. 이념 차이

이념⁶⁾의 차이에 따른 갈등은 한국 사회가 처음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6) 본 연구에서 이념이란 남북체제나 반공이념 등에 대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이념과 사회경제적 기회나 평등에 대해 시장주의와 평등주의로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적 이념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 젠더 이슈, 문화/민족적 개방성을 포함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도 포함한다. 즉, 국민의 진보, 보수, 중도의 이념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이념과 사회경제이념 지표를 사용하였으나 사회의 이념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탈물질주의 지표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의미의 이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념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억눌려 있던 집단 간 사회체제나 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른 논쟁이 민주화 이후 갑자기 분출된데 대한 사회적 부적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의 논의가 너무 과열된 데 대한 우려일 수도 있다. 이념은 사회에 대한 규범적 사고의 체계 즉 사회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념의 차이는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념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조는 시계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념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사회의 지도 같은 것이어서 한 사회의 이념구도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사회의 이념 현황에 대해 본 협동과제의 하부과제인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협동연구총서, 2006-02-03)” 연구 결과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념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균열의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강원택, 1998, 2002; 김재한, 1996; 이내영, 2002). 지금까지 사회갈등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던 지역갈등이나 노사갈등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이념의 차이는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정치이념과 사회경제이념을 통합한 객관적 이념지수를 보면 중도가 54.8%이고 보수는 25.6%, 진보는 19.6%이다. 이 지수의 평균을 구하면 5점 척도에서 2.8로 보수에 더 가까운데 이는 정치 이념에 있어 보수성(5점 척도에서 2.16)과 사회경제이념에 있어 진보성(3.45)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 이념에서의 진보성과 정치 이념에서의 보수성은 대부분의 측정항목을 통해서 재연되어 우리 사회의 이념 성향이 구조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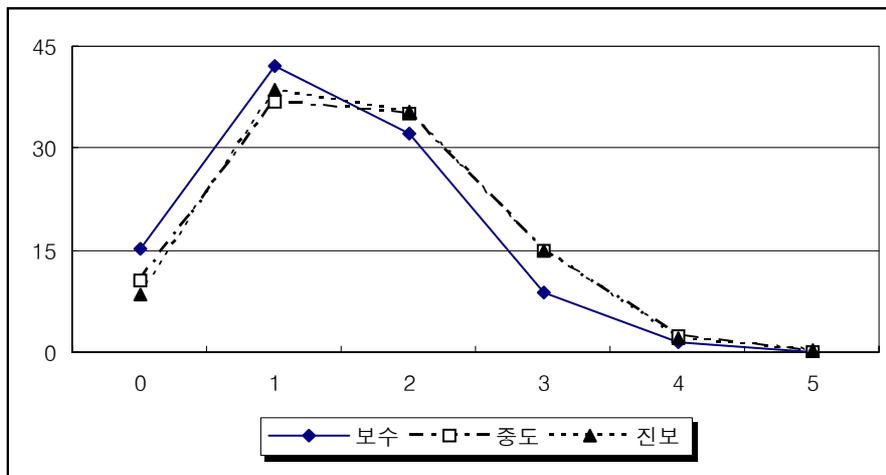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정치적 이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과 개혁가들의 정치적 야심에 대한 의견이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거나 우호관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77.6%로 보수적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가들이 결

국 정치적 야심이 있다는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66.5%가 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이념 측정 문항은 사회질서 유지에 무력의 사용이 당연하다에 대한 의견,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의견, 선배 공경에 대한 의견, 재산이 불평등의 원천이므로 상속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대한 의견, 세금 징수를 해서라도 국민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기업가로부터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는 대한 의견, 법과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 편에 서 있다는 의견,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여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이 중 법과제도는 부자들 편이라는 의견에 전체의 74.5%가 찬성, 근로자가 기업가로부터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는 진보 중 78.7%, 중도의 59.8%가 찬성(전체 55.2%),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서는 진보의 55.8%, 중도의 51.3% (전체 51.7%)가 반대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진보적인 태도가 우세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속제도 폐지나 복지를 위한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각각 20.9%, 32.7%의 동의만 보며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질서를 위한 무력사용에 대해서는 52.1%가 찬성하여 중간적인 태도를 보였고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진보의 66%, 중도의 55.7%가 동의하여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배공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6.9%만 찬성하여 역시 중간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중도의 태도이다. 중도는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보수 쪽에, 경제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에서는 동맹 강화나 우호 관계 유지에 78.6%가 찬성하여 63.7%가 찬성한 진보 쪽보다 86.1%가 찬성한 보수 쪽에 가깝다. 개혁가의 정치야심에 대한 동의 비율도 역시 보수 쪽에 가깝다. 반면에 경제 이슈에서는 진보적으로 기우는데 예를 들어 법과 제도가 부자들 편이라는 의견에는 76.2%가 찬성하여 75.3%가 찬성한 진보보다 더욱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보수(61.7%)보다는 진보(53.6%)에 가까운 52.3%만이 찬성하였다. 근로자가 기업가로부터 열악한 대

우를 받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59.8%가 찬성하여 26%만 찬성한 보수보다 78%가 찬성한 보수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근로자의 파업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59%만 찬성하여 70% 찬성한 보수 측보다 56% 찬성한 진보 쪽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 폐지의견이나 복지를 위한 세금징수 같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사안에 관해서는 진보보다 보수 쪽과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보수와 진보 사이를 오가는 중도의 움직임이 진보와 거의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영역이 바로 탈물질주의 가치이다. 탈물질주의 가치의 점수의 전체 평균은 1.62로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중도나 진보는 보수에 비해 높아 진보 1.64, 중도 1.61, 그리고 보수 1.4로 중도가 진보에 훨씬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각 점수 당 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에서는 진보와 중도는 거의 같은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탈물질주의 가치

이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념성향은 어느 정도 구조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즉,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은 특정 이슈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진보적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다

는 것이다. 또한 중도적인 사람 중 다수는 특정 영역에서는 보수 쪽에, 다른 영역에서는 진보 쪽으로 기울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정치 영역, 경제사회 영역, 그리고 탈물질주의 가치의 영역에서 이념 성향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며 보수, 진보, 중도의 결합이 특정 패턴을 보인다. 이는 사람들의 이념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며 다시 말해 집단에 따라 이념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이러한 차이가 소득, 즉 계층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흥미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소득집단별로 이념분포를 보았을 때 가장 보수 이념을 가진 비율이 높은 집단이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집단과 월 소득 300-400만원인 집단으로 모두 28.1%이고, 반대로 진보 이념을 가진 비율이 높은 집단은 월 소득 400만 원 이상으로 21.9%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월 소득 150~300만원인 집단은 57.6%가 중도 이념을 보여 중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earson 카이제곱=4.5)(ibid.).

이처럼 이념갈등에 계급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념갈등은 허위적이거나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념갈등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념갈등이 계급적 균열구조에 의해 매개되거나 아니면 계급적 기반을 가진 집단과 조직만이 이념갈등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라고 볼 수 있다. 이념갈등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에서는 계급주체 간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과 구조적 긴장이나 모순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의 차이가 계급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 문제를 이해관계의 충돌과 나누어지는 별도의 영역으로 보게 한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념의 차이는 서구식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과거 발전국가 시절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 사회적 유산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에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강원택, 2004).

이러한 가정은 본 연구에서 이념 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연령, 학력, 성별로 나타나 설득력을 높인다. 이 중 연령과 학력은 통합이념지수와 분야별(정치, 사회경제) 지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대체로 연령

이 높은 집단에서 보수적인 경향이 높아진다. 반대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진보적인 경향이 높아지는데 단 30대가 20대보다 진보의 경향이 더 높아 예외적이다. 이는 20대에서 중도의 경향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학력 변수는 대졸의 효과로 나타나는데 즉, 대졸 집단에서 진보의 비율이 가장 높다. 성별 변수는 사회경제적 이념 지수에 있어서만 유효하다. 즉, 여성은 사회경제적 이념에 있어 남성에 비해 0.14만큼 더 유의하게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bid.).

이러한 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볼 때 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 미디어, 그리고 세대별 경험이 주요한 요소가 되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예컨대 세대 간 이념갈등은 고령 세대는 그동안 정치적 권위주의에 의해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억압에서 자유로웠던 최근 세대 혹은 386세대와는 다른 이념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주목받는 이념갈등은 구조적 매개와 동원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도 가능하다. 교육과 미디어는 그 자체로 시대적 이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 세대경험은 다른 말로 교육과 미디어에 의해 중재되지 않은 직접적인 경험 부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쟁, 가난,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전쟁을 겪거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사이의 대미관이나 대북관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이미 상식적으로 알려진 일이다. 성별 변수가 사회경제적 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직접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른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이념 차이는 경제 구조에 기인한 계급적 차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즉, 문화적 취향이나 선호처럼 세대나 학력, 그리고 성별의 변수의 영향을 더 받으며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음악에서 트로트와 힙합에 대한 취향처럼 개인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념성향의 이러한 면이 이념차이를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오늘날 문화가 더 이상 부차적이

고 주변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문화가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념 성향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념과 관련한 몇 차례의 과격한 시위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되는 의정부 여중생(미선, 효선 양) 사건에 대한 촛불시위, 맥아더 장군 동상 관련 시위, 강정구 교수 사건이나 황우석 교수 사건과 관련된 시위들을 보면 이념이 현재 일부 한국인에게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몇 번 강조했듯이 이념 차이 혹은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념의 차이는 이제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적 체제하의 획일적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를 허용하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제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차이를 통해 번성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념 갈등이 과열되고 극단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시위사건들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과격한 시위의 사례들을 보면 이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이념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시위들이 대부분 정치이념과 관련해서 일어났는데 막상 정치이념성향 자체는 보수 쪽에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보수 측이건 진보 측이건 과격한 일부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하나는 이념의 과열을 부추기는 어떤 매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할 수 있다. 즉, 이념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미디어의 보도 태도가 편중될 수도 있다. “한국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협동연구총서 2006-02-03) 연구에서는 이념 관련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태도를 분석하여 이것이 이념갈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논쟁을 불러왔다고 보이는 네 가지 쟁점--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고교 평준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요 일간지 칼럼들의 내용 분석을 통해 언론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갈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즉, 각 쟁점별로 이념적 성향을 담고 있는 개념들의 빈도와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언론사 간의 이념적 분포와 각 언론사별 개념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와 함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의 비교를 통해 국민 여론과의 관련성 즉, 언론의 이념 분화가 일반 국민들의 이념적 분포에 비해 과대 혹은 과소 대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쟁점 간 이념 분포들 간의 변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국가보안법과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비교적 신문사들 간 이념의 폭이 분류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나타난 반면, 이라크 파병 및 부동산 정책 논란은 언론사들 간의 위치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개념들도 혼재되어 있어 논점이 상당히 미분화되어 이념적 갈등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이슈마다 신문들이 보이는 논쟁적 성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념 지도에서 대체로 주요 단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문의 경우 그 주제에 대해 다른 칼럼의 수가 적거나 다양한 내용의 칼럼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경우 이 신문은 해당 쟁점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로는 아예 일부 논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신문들도 있다. 경제신문들이 그런 경우인데, 이들은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반면,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활발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네 개의 쟁점들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이념 분화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발견되는 특징으로 보수적 성향의 신문들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 신문들은 그 위치가 잘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시민사회에서의 이념적 분화와 언론의 이념적 분화 사이의 차이가 쟁점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라크 파병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언론이 시민사회의 이념적 다양성을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고교 평준화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다른 이념적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평준화의 경우 일반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진보적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도 상당했는데 반해, 언론은 대체로 중도-보수적 입장에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과대 반영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 역시 시민사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반감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이념적 논조는 대체로 시장주의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론에서 얻어질 수 있는 시사점은 비교의 결과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쟁에서의 이념적 입장의 차이를 보다 넓게 만드는 언론의 역할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언론들이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경우들은 발견되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분화된 여론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언론들의 미분화된 태도 속에서 의미와 입장의 모호함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경우 갈등 상황에서의 모호함은 문제를 덮고 지나가려는 경향보다는 모호함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반복하는 경향을 낳기도 한다. 결국 이념의 과잉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점보다는 오히려 분화된 이념에 따라서 생산된 정책적 지식에 입각한 논쟁이 부재한 것이 갈등을 소모적으로 만드는 보다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가 최근의 이념갈등이 사회에 대한 순기능적 결과보다 역기능적 결과를 더 많이 가져온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이념갈등이 매개와 동원을 통해서 증폭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념갈등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할수록 더욱 이념갈등은 지속되고 강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언론과 정치권의 이익에 기여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측면은 높지 못하다. 이념갈등이 국민 내부의 이념의 분포나 차이에 기인하는 바에 비해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매개되고 동원되어진 바가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념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언론과 정치권이 이념적 매개와 동원을 자제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소결

이상 네 가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차이는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 민족, 문화, 그리고 이념의 차이는 우리 사회를 더 이상 단일

민족 신화에 근거한 균질적인(혹은 이를 믿는) 사회가 아닌 다양한 가치관, 사고틀, 생활양식, 그리고 의견을 포괄하는 이질성을 가진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은 그 자체로 부정적이지 않으나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일부는 이미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는 갈등요소로 잠재되어있다. 즉, 이념차이는 이미 갈등으로 진전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차이는 경우에 따라 가정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협동연구총서, 2006-02-07).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사회 차원의 갈등을 유발하기에는 이들의 수가 아직 적고 사회 권력도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터민의 차이도 아직은 가시적이지 않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앞으로 갈등의 잠재요소가 될 수 있다. 전자는 혼혈 아동의 사회적 수용 문제를 야기하고 후자는 통일이 될 경우 거시적인 구조의 문제로 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는 차이에 대해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 차이에 대해서는 관용과 함께 이를 드러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이를 관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왜 다른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어려서부터 타인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를 교육하고 서로의 차이를 통해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키울 필요가 있다.

2. 이해의 충돌

어느 사회든지 구성원 집단들 사이에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이는 주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누가 얼마만큼의 배분을 받느냐는 제로섬 게임 법칙에 따르는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는 이해의 충돌은 때로는 순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가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이해의 충돌이 첨예해진 것은 무엇보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는 위에서 나누어주는 데로 받는데 별 저항이 없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주장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때 자신이 주장하는 자신이 몫과 남이 인정하는 자신의 몫이 일치하지 않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난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일정 부분은 물질적, 권력적 이해관계의 문제이다.

사회 갈등은 대부분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계층갈등, 교육갈등, 지역갈등, 환경갈등 등의 일부 사례에서는 이해관계의 갈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어떤 갈등이든 이념적인 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 갈등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해관계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발전하는지, 어떠한 요소들이 이를 가중시켰는지 등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가. 계층갈등

한국의 산업화는 분배적 형평성의 손상 없이 진행되었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경제분석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형평성을 갖춘 성장”(growth with equity) 모델로 불렀다.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성장이 완전고용을 창출하면서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개발연대의 한국 모델은 1997년 이후에 큰 타격을 받는다(임혁백, 2006: 137). 1997년의 ‘외환위기’는 정리해고로 인한 대규모 실업, 중산층의 몰락, 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출발점이었다.

계층 간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0년 0.3을 넘었고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내부의 소득분배 양상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임금에 따라 근로자 집단을 10분위로 나누고 하위 10% 집단에 대한 상위 50% 집단의 소득비, 그리고 하위 10% 집단에 대한 상위 90% 집단을 비교한 소득비를 계산해 보면, 점차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이

중간(5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하위10%에 해당하는 집단의 2.09배이며, 고임금 근로자인 상위 90% 집단은 하위 10% 집단보다 4.35배의 임금을 받았다. 그리고 고소득 집단의 임금 상승폭이 중간소득 집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표 1> 근로자의 임금소득 분배추이

연도	지니계수	분위수 배율	
		P50/10	P90/10
1990	0.367	1.91	3.96
1995	0.273	1.96	3.67
1997	0.277	1.99	3.74
1998	0.282	2.01	3.83
1999	0.286	2.03	3.86
2000	0.299	2.08	4.08
2001	0.300	2.05	4.10
2002	0.303	2.09	4.24
2003	0.311	2.09	4.35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 2005

소득의 양극화는 한국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산업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한국의 경우 복지정책의 미성숙으로 양극화를 완화시킬 만한 정책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1997년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 하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 등을 도입하였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 외환위기로 국가의 경제관리 능력이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최고점에 이르는 딜레마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지의 확대를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이혜경, 2004: 13). 이는 개발연대의 성장 일변도 정책을 성장과 분배의 병행,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방향전환 하

는 것을 의미하였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와중에서 사회복지의 축소지향적 재편을 단행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복지의 ‘소폭 확대’라는 일종의 역코스를 선택한 것이다(홍경준·송호근, 2003).

최근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분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찬반 논쟁은 뜨겁게 지속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경제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다. 사회갈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경제적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77.5%로 조사대상인 15개의 사회갈등 중 ‘여야 간 갈등’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협동연구총서, 05-02-05). 2006년 실시한 이념성향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잘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간의 갈등과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5.2%로 더 높아졌다.⁷⁾

경제 양극화가 사회통합에 걸림돌이라는 사실에는 일반적인 동의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방법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을 정비하여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지출 증대나 과도한 국가개입은 성장 잠재력을 침식할 것이며 오히려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여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여야 양극화 문제를 완화된다는 입장이 대비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임금이 아닌 자산소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평생의 근로소득을 저축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상실감과 계층 간의 대립,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자산을 소유한 집단의 실태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부분적 자료들을 종합하여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금융자산,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추이, 임대건물 소유자 등을 추정해 볼 때 부유층에 해당하는 자산 소유자의 규모는 64만 명 이하로 추정된다. 자산 소득의 집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

7) 본 협동과제의 하부과제인 <한국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연구에서 실시한 ‘이념성향 국민의식조사’ 결과임.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자산소득이 있는 집단이 가장 많은 부를 차지하고 향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의 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혹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신광영, 2004: 180).

계층 간의 경제적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는 고용의 양극화와 산업·기업 간의 양극화를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용의 양극화는 비정규직의 증대로 나타나는데,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이 약할 뿐 아니라 임금에 있어서도 정규직보다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는 결과적으로 임금근로자 내부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

고용형태		월평균 임금(단위: 만원)	시간당 평균임금(단위: 천원)
종사상 지위	상용직	131.4	6.58
	임시직	73.4	4.17
	일용직	82.5	5.3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V)』, 2003 (133).

한국에서 노사 대립은 지속적인 사회의 현안이었으며 사회통합에 이르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로 인식되어 왔다. 2005년 실시한 <사회갈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 경영자와 일하는 노동자간의 갈등’을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7%로 나타나 ‘보통’(22.1%), ‘심각하지 않다’(4.2%)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에 포함된 15가지 갈등 유형 중 노사 갈등은 정치 갈등, 경제적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의 갈등에 이어 세 번째로 그 심각성이 높은 갈등 유형으로 인식되었다(협동연구총서, 05-02-05).⁸⁾

8) 이 조사결과는 본 협동연구의 2차년도 연구결과물임.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만한 통로가 없고 결국 갈등의 폭력적인 분출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노사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시하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억압되어 오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의 시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민주노총이 결성되고 특히 민주노동당이 출범한 것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사회적 공론장 안으로 표출하는 새로운 계기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노조의 목소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전반적인 노동조직률이 매우 낮고 또한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는 산별교섭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1%로써 핀란드(76%), 영국(31%), 이탈리아(35%), 일본(21%)보다 낮으며 OECD 평균인 3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OECD, 2003). 또한 노조는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국한되어 보다 일반적인 노동자 일반의 권익향상이나 노동자 내부의 소수자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대기업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별 노조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조직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며(신광영, 2005) 노조가 사회의 보편적인 공익에 기여하기 보다는 조직적 이기주의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낮은 조직률과 기업별 노조체제라는 한계는 한국 사회가 노사갈등을 중재할 만한 광범위한 사회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강조할 것은 20세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드러내고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나 관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한국 사회는 21세기적인 변화의 물결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의 유연화는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더욱 약화시킨다. 2003년 노조 조합원수는 162만명(조직률 11.4%)인데 정규직 여부에 따라 조직률이 큰 차이가 있다. 정규직 631만 명 중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162만 명(22.7%)이나 비정규직은 784만 명 중 19만 명만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2.4%)(김유선, 2005).

기업의 측면에서도 양극화는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은 팽창하는 탈제조업화의 경향이 나타나며 1990~2001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업 고용은 4.13% 늘어났으나 제조업에서는 1.42%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지속적인 생산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비중이 1989년 27.8%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 19.0%를 기록하였다. 최근 제조업 분야의 고용감소는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나 부가가치가 제조업에 비해 계속 열위에 있다는 점이다. 1990~2001년의 기간 동안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68%로 급락하였다. 즉, 점점 줄어들고 있는 대기업 제조업 종사자와 늘어나고 있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종사자들 간의 소득분배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신동면, 2006: 43).

기업이 노사 간의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계층갈등의 추이를 파악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에 대한 기업 경영자의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사업자패널조사(2003년) 자료에 대한 신광영·이병훈(2005)의 분석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노사관계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가 사전에 결정된 불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보다는, 기업 조직의 환경, 기업의 활동과정 및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파업 경험이 일관되게 경영진의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전문경영인 체제일수록 경영진의 협력적인 노사관계 태도가 두드러졌다. 넷째,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고부가가치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사업체의 경우 경영진의 협력적 노사관계 태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반면, 가격경쟁력 위주의 비용절감 압력에 시달리는 사업체에서는 경영진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결과에는 긍정적 부정적 함의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 우선 한국의 기업 경영자들은 노사관계 자체를 경직된 고정관념의 틀에서 보는 인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으며 전문경영인을 갖추고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 시

장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는 기업일수록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노사 간 파트너십 형성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산업과 기업 내부의 양극화 문제이다. 즉, 대기업이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협력적 노사관계에 개방적인 인식을 보이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경영자들은 여전히 노동배제적인 태도에 기울어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노동자는 소득이 높을 뿐 아니라 노조를 통해 자신을 대변할 수도 있고 노사관계에 개방적인 경영자와 함께 일하지만,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노사 대립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갈등의 제도화 기제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고 그러한 결핍이 세계화가 몰고 오는 노동시장 및 기업환경 변화에서 초래되는 새로운 노사대립에 대응할 사회적 역량을 더욱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경우 조직화된 노동자들 중심의 권익 주장을 넘어서서 노동시장 내의 약자를 대변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숙이 필요하며,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를 성공적인 경영의 파트너로써 인정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의 인적 자본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축적하는 긴 안목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서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시장 내의 취약 집단,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영자는 각각이 모두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 영역에서의 갈등의 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일관되게 심화되고 있으며, 임금소득자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산소득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부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계층별 양극화가 심각할 뿐 아니라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의 대립도 매우 격화되어 있다. 국가복지의 확대에 대한 반발, 부동산 이익을 환

수하려는 세계개혁에 대한 반발은 언론 지상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적 대화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배·복지강화 논리와 시장·성장 중심 논리의 대립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서구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보수당과 노동당(혹은 사회민주당)의 양당 간 대립구도를 통해 오랜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민주적 정치제도 확립과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모두 성공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분배논리와 성장논리의 흑백론적 대립보다는 양자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타협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영국의 예를 살펴보면⁹⁾, 산업화의 역사가 깊은 영국에는 첨예한 계급 대립의 역사가 있으며 투표성향에서도 계급적 위치에 따라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이루어진 양당제는 계층별로 형성된 정치적 대의 구조를 반영한다. 흥미로운 것은 각 정당이 지지계층의 정치적 이념을 선명하게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 당의 이념이나 정책을 수용하는 타협 정치의 전통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계급적 이념을 초월하는 타협적 컨센서스의 형성은 먼저 20세기 중반인 1955년부터 1964년까지 지속된 이른바 ‘버츠크리즘(Butskellism)’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노동당과 보수당은 복지국가와 혼합형 경제,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거대산업의 국가 소유 등의 정책에 대해 사실상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보수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실용적 입장에서 이념적 유연성을 보였으며 노동당 역시 자신들의 강령 중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강경한 정책을 완화시키는 유연함을 보였다. 이러한 양당간의 합의정치는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게이츠크(Hugh Gaitskell)과 뒤이어 집권한 보수당 정부의 재무장관 버틀러(R. A. B. Butler)의 경제정책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버츠크리즘’으로 표현되었다.

9) 여기에 소개한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본 협동과제의 하부 과제인 『이념갈등과 사회통합 :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협동연구총서 2006-02-04)』의 분석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마가렛 대처총리의 집권으로 이러한 합의는 깨졌지만, 그러나 1997년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의 집권으로 새로운 합의정치가 형성된다. '제3의 길'로 잘 알려진 블레어 총리의 정책 기조는 대처정부가 추진한 복지국가 개혁, 시장 중시, 국가개입 축소, 통화주의적 경제정책, 노조의 약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1950년대의 양당 간 합의정치는 좌파적 '사민주의' 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1990년대 이후 수립된 양당 간 합의 정치는 우파적 '신자유주의적 틀'에 의해 형성되었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합의정치의 경험이 나타난다. 1949년 보수정당인 기민연(CDU)의 아데나워(K. Adenauer) 총리시절에 채택되어 1960년대 초중반 에어하르트(L. Erhard) 총리시절에 완성된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적 경제원칙 안에서 계층간 차별 없이 사회경제적 형평을 기하는 "형평을 갖춘 중산층사회(nivellierte Mittelstandsgesellschaft)"의 건설을 이념으로 삼았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중반에는 보수정당이 케인주의적 합의정치를 주도하였다면, 20세기 후반에는 시민당이 보수정당의 정책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신자유주의적 동의구조가 나타난다. 1990년대 이후 독일 시민당은 '현대적 경제정당'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수렴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입장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베를린 강령(1989)의 제정, 그리고 1999년의 블레어 슈뢰더 성명(Blair-Schröder Papers)으로 명문화되었다. 블레어-슈뢰더 성명은 '시장의 조정기능이 정치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완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한국과 비교할 때 영국과 독일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 수준이 한층 더 높은 국가이며 정치제도도 상이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계급갈등이 뚜렷하게 표출되었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과 보수 정당에 대한 계급적 지지성향이 명확한 이들 국가에서 이념 대결과 국론분열이 격화되기 보다는 일정한 타협과 합의정치의 경험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첫째, 갈등의 역사가 압축적이고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만큼 통합의 역사도 압축적·복합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에 없으며 사회계급의 이해관계를 끌고루 대표하는 개방적 통합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합의 정치는 영국과 독일 모두에서 시민주의적 합의정치가 이룩한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이다. 즉, 시민주의적 합의정치의 결과 사회적 안전망이 확립된 상태에서 그 비효율적 측면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신자유주의적 합의정치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도입된다면 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정이 극대화되고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시장·성장 중심논리와 분배·복지 중심논리는 흑백론으로 대립하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맞게 조합되고 조정됨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복지와 시장을 조합하는 혼합형 복지체제(welfare mix)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 사회는 21세기적 상황에 적절한 조정안을 만들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영국과 독일의 사례에서 신자유주의적 동의구조가 시민주의적 동의구조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 즉 경쟁 위주의 합리적 시장질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없이는 국민적 동의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계화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초래하는 양극화의 추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안전판이 필요한데, 한국의 정책 현실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에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즉, 공적 이전의 빈곤 완화 효과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하다.

<표 3>에서 보듯이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복지국가의 상징인 스웨덴이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시장 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것이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는 스웨덴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정부가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신동면, 2006: 45).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에 비해서도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개입은 훨씬 저조한 수준이다. 결국 시장 질서를 중시하되 경쟁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어느 정도 완충시키는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갖추는 노력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전 가구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OECD 국가 비교)

국가(조사연도)	시장소득 지니계수(A)	가처분소득 지니계수(B)	A-B
스웨덴(1994)	0.493	0.230	0.209
프랑스(1994)	0.417	0.278	0.139
영국(1995)	0.428	0.312	0.116
독일(1994)	0.395	0.282	0.113
호주(1994)	0.391	0.305	0.086
미국(1995)	0.411	0.344	0.067
한국(2002)	0.390	0.389	0.001

자료: Foster, Michael(2000), 신동면(2006)에서 재인용

둘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가 중요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려면 조세개혁이나 사회보험의 정비 및 확장이 필수적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면 국민들은 자신의 복지를 국가에게 맡기기 보다는 스스로의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많이 내는 만큼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없다면 보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나. 교육갈등

교육갈등은 협동연구 2차 연도에 수행되었던 “교육갈등 현황 및 정책과제 (협동연구총서, 2005-02-08)” 연구를 바탕으로 서술한다. 교육갈등도 1990년

대 이후 드러난 사회갈등인데 이 또한 민주화 이후 사회 구성원 및 집단의 참여의식 강화와 이로 인한 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첨예화에 따른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교육갈등 안에는 이념적인 요소도 많다. 예를 들어 평준화정책의 논란은 공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수월성과 평등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교육의 기능을 계급의 유지나 상승의 수단으로 보는지 혹은 사회의 통합의 수단으로 보는지 하는 문제 등 사회 가치체계가 깊게 관련된다. 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학력의 하향평준화와 이와 관련하여 인재양성의 비효율화로 국가적 경쟁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갈등이 실제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논의보다는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평준화 정책에 있어서도 갈등의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권 보장 문제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문제이다.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90년 이후에는 지자체 자체 결의로 평준화를 실시, 폐지할 수 있게 되자 평준화 도입과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교육시민단체 간, 학부모들 간, 그리고 평준화에 반대하는 집단(지역 명문고 동문회, 지역유지 등)과 평준화를 원하는 집단(일부 사립학교와 그 학부모들) 사이(ibid., 95)에 충돌로 나타나게 되었다.

몇 예를 들자면 전북 군산시와 익산시, 그리고 울산 지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1980년 중앙정부 주도로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각각 1990년과 1991년에 평준화를 폐지하였다. 군산시는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나타나고 우수학생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익산시는 군산시의 평준화 해제가 학업풍토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데 자극을 받아 평준화 해제 논의를 시작하였다. 전자는 1989년 5월 시민의견 수렴 결과 80.26%가 찬성하여 1990년 평준화를 폐지하였다. 후자는 1990년 8월 평준화제도 개선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폐지 반대가 53.3%로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 의원 중 다수가 폐지에 찬성하여 1991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후 몇 년 동안 비평준화를 시행하였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서 익산시는 1997년, 군산시는 1998년 초부터 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평준화 제도 회복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평준화 제도 환원을 원하는 교사와 학부모 측에서는 2002년 새 대학입시제도에서 본고사가 없어지고 내신의 비중이 커지면 비평준화지역 고교 출신이 평준화 지역 고교 출신보다 불리해진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비평준화를 고수하는 학부모와 교육자들은 2002년 새로운 입시제도의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또한 실현되더라도 성적 우수자가 대학 합격에 유리하므로 비평준화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쟁 중 평준화 제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이 두 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고교 평준화 제도를 재도입하였다. 이 과정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비평준화가 초래한 학교 간 과열 경쟁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일부 사립학교의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고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ibid., 105).

울산은 1981년 정부의 중소도시 평준화계획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들의 반대로 평준화계획이 보류되었던 곳이다. 그 후 광역시 승격을 계기로 평준화 도입을 위한 노력이 재개되었으며 광역시 의회, 시민연대, 일반 시민 등의 진정과 청원이 있었다. 1998년 2월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시체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세미나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12월 평준화 건의가 이루어져 교육부령 개정을 통하여 2000년부터 평준화가 실시되었다.

울산시의 갈등은 이 후부터 시작되었는데 도농복합지역이며 서울의 1.7배가 넘는 이 지역을 하나의 학군으로 묶은데 갈등의 발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평준화 도입 시 기존의 고교 서열화의 배경에서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치였다. 결과적으로는 농촌지역에 배치되는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 갈등을 초래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학교 시설과 교육여건의 차이가 높기 때문이고 또한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는 만큼 특정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또 넓은 지역에서 배치되다보니 원거리 통학의 문제도 있다. 이처럼 평준화 자체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해추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준화 정책 외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교원평가, 사립학교법 제정, 그리

고 대학입시제도에 있어서도 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권익 대립이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은 전국에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고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육행정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의 활용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각 학교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은 서버관리의 어려움, 해킹의 우려, 비표준화의 문제가 있고 여기에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그런데 2003년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에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전교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측과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장단을 축으로 하는 찬성 측,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직원노조, 그리고 일부 학부모단체의 조건부 찬성 측으로 나뉘어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ibid., 52). 반대 측의 논리는 인권침해문제(교무/학사, 보건, 입/전학 사항의 자료수집과 전송 관련), 정보유출의 우려, 법적 근거, 교원의 중앙통제 강화, 교원의 잡무 증가 등이다. 이에 반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새로운 시스템이 학교정보의 보안 유지와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인 논리와 당위성 다툼 이면에는 떠오르지 않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과 교육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주도권을 유지 혹은 새로 잡으려는 전교조, 교직원단체, 그리고 교장과 교사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 측은 중앙집권적이고 타율적, 하향적인 교육개혁 추진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당국이 교원들의 생활을 인터넷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 측은 전교조의 반대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이를 계기로 교육행정 당국에 타격을 가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ibid., 56).

교원평가 역시 표면적으로는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교육주체들 사이, 혹은 주체 내부의 여러 구성 집단 간에 정치적이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다(ibid., 140).” “학교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

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 우수한 교사들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고 자질과 자격이 부족한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공익 증진 차원에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과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평가제라는 큰 변화 앞에서 평가에 앞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이 선행될 것을 주장하는 교직원단체들의 각기 다른 주장(ibid., 140-141)”은 각 주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보면 교육 외적인 변수로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참여민주주의 욕구의 분출 등이 있고 교육 내적인 변수로 구체적으로는 구성원 간 교육관의 차이, 구성원의 권익확보, 그리고 교육 정책의 혼선이나 정책적 일관성 부족 등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교육 개혁을 둘러싼 교육계 내부의 구성원 간의 이익갈등(ibid., 195)”으로 나타난다. 사립학교의 파행적 운영과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그리고 일부 사립대학과 사립중등학교의 수업 파행 등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01년부터 시작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교원임면권, 이사구성, 감사, 비리임원의 복귀, 임시이사 재임기간, 이사회 친족관계, 학교운영위원회(ibid., 195)”와 관련한 개정요구안이 중심이 되었다. 이에 사립학교 법인들은 이 안이 사학법인을 사회화하고 사학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여기서 가장 부각되는 논리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것인데 자주성은 사립학교 관련 집단들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과 인사의 자주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공성은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의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운영과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보장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두 편은 “서로의 주장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극단적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ibid., 238).”

이러한 교육갈등은 각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논리가 결합되어 이념 논쟁으로 진행되는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부상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의 확대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보와 사회분위기의 조성, 그리고 교육행정

이나 정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각 집단의 이해를 추구하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때때로 격렬하고 과격해지는 것이 여러 교육갈등의 공통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지역갈등

여기서의 지역갈등은 그동안 영호남의 갈등으로 나타난 지역주의 혹은 지역차별과는 다른 맥락이다. 지역주의는 출신지역에 따른 투표행위의 패턴화 같은 주로 정치적인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고 지역차별은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지역민 간의 차별감정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그 이후 정치적인 수단과 사건들에 의하여 강화(협동연구총서, 2004-01, 133)”된 것을 말한다. 지역주의나 지역차별에도 이해관계와 관련된 요소가 없지 않지만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 이념화된 측면이 강한 반면 지금 논의할 지역갈등은 혐오시설 회피나 선호시설 유치 등 보다 가시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갈등은 환경갈등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그리고 지역 간 갈등과 분쟁(협동연구총서, 2005-02-06, i)을 말한다.

지역갈등은 민선 지방자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더구나 참여 정치를 내세운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 혹은 집단 이기주의가 분출되기도 한다. 지역갈등은 무엇보다 지역의 경제성이나 생존가능성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지역 통치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갈등의 사례들과 구체적인 갈등 발생 및 증폭 요인 등이 협동연구총서 2005-02-06에서 분석되었는데 여기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한 사례는 천안시-아산시 간 역사명칭을 둘러싼 갈등, 전주시-군산시 간 전북외국어고 유치관련 갈등,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관련 갈등, 그리고 정읍 첨단방사선 이용센터 건립관련 갈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은 공통적으로 생존권 대립이나 상충적 이해관계가 갈등의 시발이 된다. 즉, 시설유치를 통한 편의성 증가와 지역발전(전주시-군산시 간 전북외국어고 유치, 천안시-아산시 간 역사명칭)을 시도하거나 시설유치가 한 편에는 이익으로, 다른 편에는 피해로 간주(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정읍 첨단방사선 이용센터 건립)되어 이해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천안시-아산시 간 역사명칭을 둘러싼 갈등은 1995년 온양과 아산이 아산시로 통합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아산시는 “천안역”이 행정구역상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산역으로 부를 것을, 천안시는 천안이 상대적으로 더 알려졌고 현재도 천안의 생활권에 든다는 이유로 신천안역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 대립은 “무엇보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두고 중핵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역사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ibid., 77).” 역명을 둘러싸고 천안시와 아산시의 대립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심화되어 충청남도 차원에서 조정하지 못하고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속철도역 명칭선정자문위원회(2003. 3. 27)”를 구성하였다.

이 사례는 처음에는 지방행정단체사이의 갈등으로 시작하였으나 시민들의 이해관계 인식이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 본 연구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산시는 자문위원회의 조정안인 천안아산을 병기하는 안에 아산시민들이 과반수이상 찬성함에 따라 처음에는 이 안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용불가의 입장으로 바꾸었다. 또한 아산시와 시민대표는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지역단위의 권리의식과 경제관념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전주시-군산시 간 전북외국어고 유치관련 갈등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이 지역의 권위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지역주민의 기대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가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과 정부의 재정보조 감소로 도 경제의 위축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여파가 커지기는 했으나 특목고의 유치 같은 특정 사건이 시의 장래에 중요한 전환

점이 될 수 있다는 사고는 지역을 경제단위로 보고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민의 생존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의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산시 쪽에서는 군산에 전북외국어고 유치를 목표로 2002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명운동을 통한 범시민운동이 전개되어 2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군산시 총인구 중 50%가 넘는 136,33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시 쪽에서는 임시 시의회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전주 유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전주시의회를 필두로 민·관·학이 이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양 시의 갈등은 시민단체까지 개입되면서 확산되고 첨예화되는 양상(ibid., 93)”을 보였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관련 갈등은 수자원의 권리와 개발권에 대한 것인데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는 것이 상주시에는 이득이 되고 그 밑에 위치한 괴산군에는 피해를 끼친다는 이해관계 인식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다. 1985년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문장대 및 용화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상주시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개발 역점사업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그러자 달천수계 신월천 하류에 있어 문장대의 온천공이 위치하고 있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서는 청정수질 유지에 문제, 상수도 시설 오염 가능성, 온수에 의한 하천 생태계 파괴의 우려 때문에 온천개발 저지운동을 벌이게 된다. 충북지역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2005년 1월 17일 상주시 규탄집회를 열고 이어 청주지원에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이른다. 이처럼 “개발추진 측과 개발저지측은 각 집단의 생존권을 이유로 대립(ibid., 117).”하게 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민과 관이 힘을 합치게 된다. 8월에 온천공사를 착수하자 이에 대한 저지측의 항의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급기야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이에 대해 추진측은 현수막 등을 강제 철거하는 무력행사로 대응하였다.

이처럼 선호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의 편익과 경제적 이익 추구의 경쟁에 기인하는데 여기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기 때문에 갈등의 극단적으로까지 치닫지는 않는 편이다. 이에 반해 혐오시설과 관련된 갈등은 “소음, 악취, 매연, 교통 혼잡, 지역이미지 손상, 재산적 가치의 하락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단기적으로 해당 입지지역에 집중하게(*ibid.*, 175)”되어 이를 거부하는 지역주민과 시설을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하는 광역단체 혹은 중앙정부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혐오시설의 설치는 결국 공공의 편익을 가져오므로 이러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혐오시설 관련 갈등 사례들--구리시-남양주시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 관련, 부산시 신평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관련, 청계산 서울추모공원 건립, 제천시-영월군 간 취수장 건립--을 보면 지자체에서 일단 수용한 안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 때 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착하고 더구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진전과정을 보면 주민들이 행정결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도 없이 단편적인 과학정도에 근거하여 무조건 거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부산시 신평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는데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장 가동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다시옥신 발생정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 시도 자체를 거부하였고 따라서 소각장을 전혀 가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혐오시설의 설치에서 오는 편익은 사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결국 지역주민에게도 필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시설 자체가 사회의 필요악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 권리의식과 이해관계에 대한 첨예한 추구는 앞날의 끊임없는 갈등을 예고한다.

라. 소결

사유재산의 원리에 근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은 사회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대립축이다. 여기에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만능과 배금주의적인 경향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소리, 다양한 집단이기주의의 만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한국 사회의 이해관계 대립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립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구조화의 흐름이다. 비교적 계층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던 한국 사회는 1997년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급속하게 양극화가 진행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양극화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층 간의 대립은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로 보다 전면화 될 가능성이 크다. 상류 계층은 자신의 기득권을 극대화하면서 시장원리의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비판하면서 시장을 규제하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립하는 갈등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계층갈등은 지역갈등이나 교육갈등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많은 갈등의 바탕에 있는 밑그림으로 작용한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결국 이익의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나타난 갈등 전개の内容을 살펴보았다. 지역갈등 사례는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도입 이후 한층 표면화되었다. 교육갈등에서는 공교육의 목표를 보는 이념적 견해의 차이와 더불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불신이 중요한 갈등요소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은 시장경쟁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의 추구하고 존중하지 않는 무분별한 사익의 추구,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회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사익 간의 분쟁 조정, 그리고 공익을 위해 일정하게 사익을 규제하는 제도와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구조 변화

‘구조(structure)’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장기지속하는 고정적 사회관계의 틀과 원리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긴 호흡에서 보면 사회구조도 불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누적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특정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전환점이 형성된다. 한국사회는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에 노출되어 왔고 사회 전체가 급속한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외형적인 변동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인식의 기본틀이나 정서적 심리적 태도(이른바 망팔리테 mentalite)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구조의 급속한 변화 못지않게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서 젠더구조의 변화와 세대관계의 변화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경제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가령 경제발전으로 여성의 노동참여가 늘어나면 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언제나 상호 조율하면서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조의 전환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 하위 집단별로 새로운 태도나 세계관을 수용하는 정도나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갈등으로 표출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성별 역할구조의 변화로 인한 갈등, 그리고 생애주기의 변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주로 고찰하기로 한다.

가. 성별 역할 구조의 변화

어느 사회에나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담론이나 태도가 존재하며, 그러한 성별에 따라 다른 역할을 맡기는 사회적 분업이나 공사분리의 형태로 나타나며 때로는 차별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성별 역할을 구분하는 인식구조가 지속되어 왔지만, 또한 성별 역할을 나누는 기준이나 각 성의 역할의 내용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역동적으로 변화

해 왔다는 것이다. 남녀의 차이는 무엇이고 차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사회 집단별, 특히 남녀별로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질적 견해의 배경에 있는 근거 논리로서 유교 담론, 생물학 담론, 그리고 경제학 담론을 꼽을 수 있다(협동연구총서, 2004-01 : 80~81).¹⁰⁾

오늘날 유교적인 여필중부의 윤리를 추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유교 논리 중 아직도 힘을 잃지 않는 것은 역할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이 바깥을 담당하고 여성이 안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에 익숙하며 또한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여기에서는 한 성 안의 차이, 즉 여성이나 남성 내부의 차이, 그리고 역할의 다양성은 고려되지 않으며 남녀의 역할을 고정시키는 것이 상생적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생물학적 담론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선천적이고 생리적인 불변의 속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남성성은 논리성, 공격성, 감정의 절제, 현실감, 지배력 등과 연결되고 여성성은 상냥함, 친교성, 배려, 감성, 순종성, 의존성 등과 연결되며, 일상에서 남녀의 상이한 습성이나 반응을 호르몬 작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간의 생물학적 차이와 젠더규범에 대한 사회문화적 구성간의 비중을 따지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고정된 구분방식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이나 사회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무시하는 인식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생물학적 담론과 관련하여 성차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지점은 남녀 간에 중요한 생물학적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남녀의 다른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경제학 담론은 노동시장이나 공적 사회생활에서 여성을 남성과 다르게 대우하는 근거를 생산성의 차이로 설명한다. 여성은 남성이 할 수 없는 출산을 담당하며 육아도 주로 여성의 몫이 되고,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직업적 성취에 모든 것을 걸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의 입장에서 남성의 평균임금이 더 높고 고용안정성이나 승진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남

10) 이하 성차를 정당화하는 담론에 대한 분석은 본 협동연구의 1차년도 과제인 한국여성개발원 2004,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80~94쪽)

성이 취업을 하고 여성이 집안일을 담당하는 것이 가정경제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산성 논리는 경제적으로 볼 때 근시안적이며 차별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여성을 모두 배제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능력 있는 인력을 활용할 기회를 잃게 되며, 일단 고용하여 투자한 인력이 결혼이나 육아로 인하여 중도에 탈락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한 손실이다. 또한 남성 위주의 인력구조나 조직문화가 과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세 가지 논리는 한결 같이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을 담당하는 성역할 분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는 성별 역할에 대한 태도, 성별역할에 따른 사회적 분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는 여성들을 유급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서비스 산업의 확대, 지식 경제의 등장, 감성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상품 시장의 확대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동,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부족 현상은 여성들이 생산인력으로써 국가경제에 참여해야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 자신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성취지향적 정체성을 내면화함으로써 더 이상 보완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인 삶의 성취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성별 역할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성이 가정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대적 핵가족의 모델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인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동시에 진행된 노동시장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처음에는 남성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오늘날 점차 많은 여성들이 독자적인 '노동시장 일대기'를 추구하고 있다(Beck and Beck-Gernsheim, 1995). 종래 여성들의 삶이 '가족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개인으로서의 생애주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에스핑-앤더슨은 여성들의 삶의 선택이 세 가지 유형, 즉 전통적 여성형, 모성과 유급 노동의 양립 지향형, 성취지향형 여성으로 나뉘어지며 오늘날 유럽사회에서 가장 많은 것은 모성역할과 노동자 역할을 양립하고자

하는 여성들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유급노동 역할을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남성화'된 만큼 남성들도 돌봄 노동이나 가사 일을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임으로써 전체적인 사회 수준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분석한다(Esping-Andersen, 2002).

성별 역할구조의 변화 흐름은 첫째, 성별의 라이프스타일이 동질적인 한 가지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내부 혹은 남성 내부에서 다양한 삶의 경로가 공존하게 된다. 둘째, 여성과 남성은 한 가지의 고정된 성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다양한 역할간의 조정 능력이 요구받게 된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제공자를 전담하는 분업구조는 새로운 사회적 구조 변화에 적합하지 않으며 분배의 양극화나 돌봄의 공백 등의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프레이저(Fraser 2000)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남성생계양자 모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여성 취업이 일반화되면서 남녀 모두가 유급노동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편적 생계부양자(universal breadwinner) 모델이 퍼지고 그 이후에는 보편적 돌봄제공자(universal career) 모델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한다. 보편적 케어러 모델은 성별분업을 넘어서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보살핌의 제공자가 되는 새로운 역할모델을 의미한다.

새로운 성별 역할구조는 의식과 태도의 측면에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가 혹은 다양하고 유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는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를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경험적인 조사연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형 양성평등 의식검사(KGES)를 척도로 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평등 문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크게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성이 지향하고 기대하는 성평등의 수준과 남성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간의 괴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연령별 양성평등 의식의 성별 차이

	여성 (A)	남성 (B)	남녀격차 (A-B)
20대	2.99(.35) n=102	2.74(.30) n=221	0.25
30대	2.84(.33) n=121	2.68(.33) n=258	0.16
40대	2.82(.33) n=112	2.63(.31) n=241	0.19
50대	2.68(.37) n=74	2.58(.30) n=149	0.10
60세 이상	2.57(.39) n=97	2.42(.31) n=147	0.15
전 체	2.79(.38) n=506	2.63(.33) n=1016	-

자료 : 협동연구총서 2006-02-02 성별갈등해소를 위한 젠더파트너십 구축방안¹¹⁾

특히 주목할 것은,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대 집단 안에서 남녀 간의 양성평등 의식의 격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50대와 60대 응답자에서는 남성의 양성평등 의식이 낮지만 여성도 젊은 응답자에 비해 양성평등 의식이 낮게 나타나 성별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20대 남성은 30대 이상의 남성 응답자에 비해 양성평등 의식이 높았으나 20대 여성의 매우 높은 평등 의식에 비교할 때 큰 격차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가 변하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여성과 남성 간의 의식 차이가 자연스럽게 좁혀지리라는 일반적 상식과는 다른 것이다.

직장인 대상의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대우나 조직원의 성평등 의식, 고용이나 승진에 대한 평가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래 표의 지문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을 했으므로, 남성들의 응답은 3점에 가까운 수준, 즉 성평등에 대한 약한 긍정(‘약간 그렇다’)에 근접해 있다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약한 부정(‘별로 그렇지 않

11) 이 연구는 본 협동연구의 하부 과제로 수행된 것임.

다’)에 좀 더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 측정 항목 중 은 승진에서의 남성 선호, 그리고 성희롱이나 회식문화에서 남녀 간의 견해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승진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응답에서 의견 차이가 가장 컸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승진이 어려운 하위직이나 주변적 직무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실적 차이와 더불어, 승진 지체의 문제를 해석하는 시각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즉, 남성들은 여성의 승진이 느린 이유에 대해서 여성이 중요하지 않은 보직이나 주변적 직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또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자기 개인의 시간을 우선시 하고 직무에 남성처럼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보직이나 직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며, 상사나 중요 보직자와의 연줄망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¹²⁾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성평등 의식, 여성에 대한 직장의 대우나 관행들을 놓고 성별에 따라 극단적인 견해의 대립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보다는 이전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나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보지 않는 태도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판단된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지금부터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으로 경쟁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족이나 육아, 개인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하며, 가사일이나 육아부담을 사회가 덜어주거나 남성이 분담해주지 않는 한 여전히 불공정한 상황에서 매우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입장에 따라 다른데, 남성이 보기에는 여성의 의식과 태도가 문제이고, 여성이 보기에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여성이

12) 이러한 남녀 간의 견해 차이는 본 협동연구의 하부 과제로 수행된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파트너십 구축방안>의 FGI 자료에 잘 나타남.

져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문제이다. 여기에서 성별갈등의 복합성이 나타난다. 여성과 남성은 성별갈등의 원인을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여성의 노력 부족과 헌신하지 않는 태도를 원인으로 보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기회 불균등과 불공정한 분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 자체를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간의 의사소통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표 5> 조직문화 및 직장관행에 관한 남녀의 응답률

문항	남성	여성	격차	t
◦ 우리 조직은 여성도 능력이 되면 키워준다	2.77	2.54	0.23	5.65***
◦ 우리 조직의 중요한 정보는 남성들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다	2.71	2.41	0.3	7.20***
◦ 우리 조직 사람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2.76	2.53	0.23	6.08***
◦ 우리 조직의 장이나 최고경영자는 양성평등의식이 높다	2.74	2.51	0.23	5.08***
◦ 채용이나 승진에서 남성들이 더 선호되는 편이다	2.51	2.16	0.35	8.08***
◦ 여성은 남성보다 승진하는데 오래 걸리는 편이다	2.56	2.12	0.44	9.99***
◦ 조직이나 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는 대부분 남성들에게 돌아 간다	2.75	2.45	0.3	6.84***
◦ 우리 조직은 누군가 성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2.83	2.61	0.22	5.60***
◦ 여성들은 외모나 성적인 매력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2.84	2.64	0.2	4.62***
◦ 우리 조직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없는 편이다	3.12	2.87	0.25	6.80***
◦ 퇴근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편이다	2.68	2.50	0.18	3.91***
◦ 우리 조직의 회식문화는 여성들에게 불편한 편이다	2.85	2.61	0.24	5.91***

* 4점 척도의 평균값을 사용함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 3 - 4 [매우 그렇다]). 단 역문항의 경우 수치를 전환하여, 모든 문항에서 값이 높을수록 여성에게 대한 차별이나 남녀간의 격차가 없다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일하였음.

자료 : 협동연구총서 2006-02-02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남성성이나 남성다움에 대한 태도가 성평등 의식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후기 산업사회의 구조변화와 맞물려 있는 성별 역할분업구조 안에서는 고정되고 동질적인 이분법적 성별정체성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한 성별정체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협동연구총서 2006-02-02)의 국민의식조사에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한국 남성들은 여성들과 비교할 때 자신들의 성별 집단정체성(즉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보다 강하게 고착되어 있는 것이며, 남성다움에 대한 강한 자기정체성은 성평등 의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남성 응답자들은 남성의 지위를 여성보다 높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남성의 높은 지위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집단지위인식과 집단 성별정체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자신이 남성이라는 성별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양성평등 의식이 낮았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남녀가 역할을 나누고 공존할 수 있도록 협력적 양성관계 곧 젠더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긴급한 사회적 과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젠더 파트너십 형성을 어렵게 하는 성별 인식의 격차가 몇 가지 드러났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의식을 척도로 측정해 보면 남녀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 유의미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연령집단 중에서는 20대 남녀 간의 양성평등 의식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다.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지는 경향이지만 그러나 여성의 평등의식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속도에 비해 남성들은 훨씬 더디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성세대 뿐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과 협력의 중요성을 초기 사회화 과정부터 학교 교육 안에서도 일상적으로 습득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둘째, 직장인 의식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남성들은 성별 갈등을 여성들

의 의식이나 생활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들은 기회의 불균등과 공정한 분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게 더 많이 업무에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기회가 보장되지도 않는데 과중한 이중노동의 부담을 혼자서 다 떠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성격이 다른 갈등이 상호 침투(spill-over)하면서 갈등이 더 복잡하게 엉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대적인 소수자 집단의 생활태도나 의식을 타하는 문화적 물이해의 문제와,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불만과 자신이 노동한 대가를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불만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젠더파트너십 형성은 일과 가족생활을 통합하는 시각, 공사 분리를 뛰어넘는 통합적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가적인 방향의 제시와 각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성중심적인 기존의 직장 문화를 양성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로 바꾸어 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남성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낮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여성들의 생활이 변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남성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는 다중적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여성들은 역할 긴장을 남성보다 더 많이 느끼며 따라서 모순된 역할들을 조정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경험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역할긴장을 덜 느끼게 되며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동질적인 남성 경험을 공유한다. 남성경험의 동질성은 남성들 간의 유대를 쉽게 형성하여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면 역할 긴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연하게 성찰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와 고용유연성의 증대로 실업상태와 취업상태가 자주 반복되고 또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고 있는 변화된 환경에서, 경직된 남성성의 역할 모델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경직된 남성성 역할모델은 양성평등한 사회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남성들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젠더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질적이고 경직된 남성성이 아닌 다양하고 유연한 남성성 모델이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을 지배하면서 보호하는 남성성의 모델이 아니라, 남성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유연한 역할모델을 남성들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여성역할에 대한 인정은 다양한 남성역할을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하며, 유연한 남성성에 대한 교육은 초기 사회화과정 뿐 아니라 생애주기의 중요한 단계에서 재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이나 이혼, 자녀출산과 양육기, 중년기 실직, 은퇴와 같은 생애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남성들이 혼란이나 열패감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역할을 유연하게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과 남성 간의 성별 갈등이 남성의 무능력과 몰이해, 여성의 무책임이나 도전적 태도를 상호 비난하는 것이 된다면, 그러한 갈등은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과 가족, 직장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넓은 시각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러한 역할 분담은 공정한 것인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바꾸어갈 것인가 등에 대해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토론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나. 생애주기 변화와 세대 분화

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은 비단 현대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세대 간의 관계 역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로 인해 세대 간 경험의 격차는 매우 선명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세대 갈등이 오래 전부터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각각 자신의 청소년기를 농촌공동체 안에서 보낸 조부모, 산업화 초기의 중소도시에서 보낸 부모, 정보화 시대의 대도시에서 보낸 자녀 세대 간의 경험 내용은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고 그 차이만큼 상호 이해나 소통에도 어려움

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 대한 태도에서 세대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성향, 그리고 정당지지 성향은 세대에 따라 나뉘어서 2030세대는 진보 지지층, 5060세대는 보수 지지층으로 흔히 인식되고 있다. 한국인의 이념지향은 계층적 지위보다는 연령집단에 의해 더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것이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강원택, 2004).

그러나 이는 현실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으며 IMF 이후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경험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으며 큰 차이가 없다는 진단도 있다(송호근, 2005). 또한 세대간 이념 성향의 차이가 점점 심화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연령집단별로 응답에 차이는 있지만 연령별 응답의 경향이나 차이의 폭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고 비슷한 추세가 지속된다는 분석이다(김재한, 2006).

세대 분석을 둘러싼 이러한 혼란은 세대의 개념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세대에 따른 일정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연령효과, 코호트(cohort) 효과, 그리고 기간 효과를 구분해서 정의해볼 필요가 있다. 연령효과는 사회적, 생물학적 성숙과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급진적이던 젊은이가 나이가 들면서 보수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그 예이다. 코호트 효과는 특정한 코호트 집단이 겪은 이전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화 경험의 독특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청소년기에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을 경험한 사람이 진보성향을 계속 지니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간효과는 관찰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상황이나 사건이 모든 연령, 모든 코호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9.11테러 이후 미국인들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해진 것은 전형적인 기간효과 의 예이다(전상진, 2004: 37).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세대와 관련된 표현들은 위의 다양한 요인들을 혼용하고 있다. 386세대,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 4.19세대, 월드컵 세대 등과 같은 용어는 코호트 효과, 즉 특정한 집단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의 독특성이 그 세대의 집단적 특성을 형성하는 현상에 들어맞는다. 그런가 하

면 2030, 5060 세대와 같은 표현은 연령효과, 즉 조사 시점에서의 연령을 지칭한다. 현재의 2030세대는 30년 후엔 5060세대가 될 것이며 생애주기상의 특성이 이러한 세대의 성향이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존의 세대 차이나 세대 갈등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해 세대 간 경험의 차이가 크다는 점, 특히 굴곡진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격변을 겪거나 사회운동에 참여한 코호트들의 특성과 상이한 코호트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대를 논하는 보다 큰 환경의 틀이 바뀌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령혁명(age revolution)이라고 불리는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이다. 우리는 곧 4세대 혹은 5세대 이상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수명의 연장은 생애주기와 가족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부부가 50년을 함께 산다고 가정한다면, 결혼생활의 일사분기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투자하고 이사분기는 조부모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삼사분기에는 증조부모 시기와 그에 따른 친인척 관계의 팽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함인희, 2006: 129) 생애주기의 변화는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세대갈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김재한, 2006: 92). 평균 기대여명의 연장과 고령화의 진전은 결국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연령 차이의 폭을 늘리게 되므로 객관적인 차원에서도 세대 차이를 확대시키는 셈이며, 또한 주관적인 인식 수준에서도 세대 간 차이를 더 민감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흔히 세대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경험이나 사건이 세대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만약 수명의 연장으로 생애주기가 바뀐다면 굳이 청소년기의 사건만이 긴 여운을 남긴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생애주기 상의 질적인 전환기에 겪는 독특한 경험들이 세대 형성에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의 상황을 보면 집단적 거리 시위는 청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주로 노인 회원으로 이루어진 NGO의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은퇴하고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

년기라는 생애주기에서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로부터 예상되는 갈등 쟁점은, 첫째 늘어나는 노년층의 은퇴기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으므로 노인들의 취업과 생산 활동 기회를 늘려달라는 욕구가 증대할 것이다. 구직에서의 연령차별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이 점차 부상할 것이다. 이미 은퇴한 노년층의 복지비용을 현재 생산연령에 있는 청장년층이 담당하고 있는데 생산연령층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수명연장과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생애주기 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준비기간이 과거에 비해 매우 길어진 것이다. 의무교육기간이 늘어났고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취업 그 자체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중요해 지면서 인적자본을 고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과 준비의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추세이다. 학위나 수련과정, 특정 경력이 필요한 전문직의 경우 입직의 시점이 30대나 40대가 되는 사례도 있다.

교육기간의 연장, 그리고 청소년기 교육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짐으로써 교육적 성취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세대 갈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세대는 한편으로 사회적 성공에 이르기 위한 학업적 성취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관에 공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자신들이 처해 있는 과도한 학업부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최근의 청년 실업은 이러한 긴장을 더욱 가중시킨다. 즉, 어려운 입시의 과정을 통과하고 교육을 마친 후에도 일자리 기근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이나 자신들이 처한 부족한 기회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다.

다. 소결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성별 역할구조에 대해 여성과 남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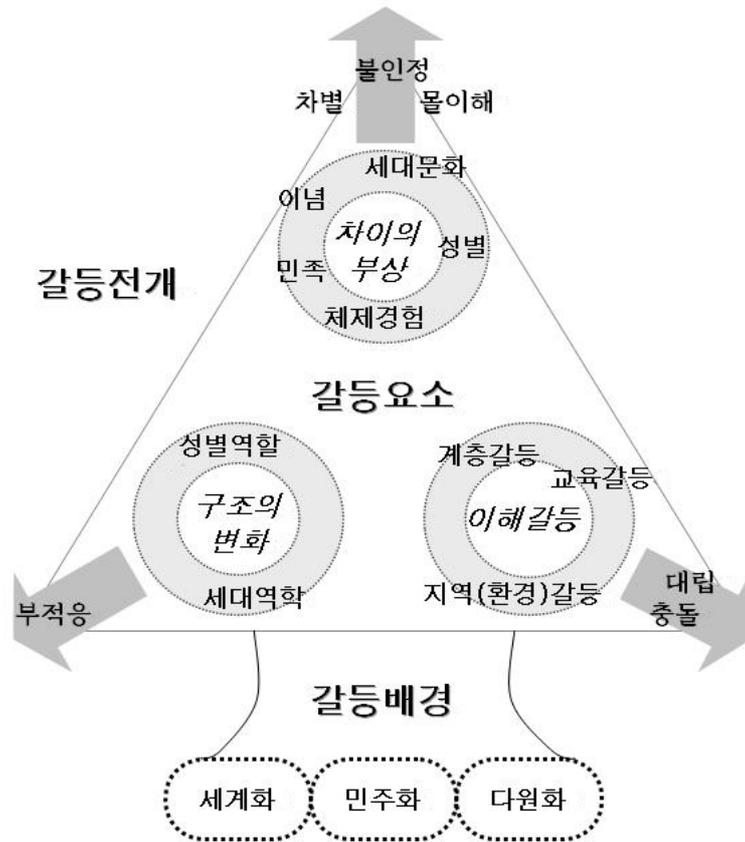
이가 앞으로 줄어들어 양성 간의 견해가 수렴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할 만한 근거도 없다. 경제구조나 인구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성별역할 분업, 즉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유연한 역할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태도는 집단에 따라 균질적이지 않다.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기존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인지적 불일치를 피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즉, 맞벌이 여성들은 자신들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부담을 피하고자 하며 남성 직장인들은 여성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명의 연장과 생애주기의 변화는 세대 간 인식의 차이도 확대하는 추세이다. 물론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연령집단 간의 대화 단절이나 소통의 부족, 문화적 상이성의 증대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구조의 변화는 사실 개별 행위자들에게는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한 긴장을 수반한다. 특히 기득권을 누리왔던 남성이나 기성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과 여성, 세대 간의 반목은 사회 내부의 소통을 차단할 것이며 사회통합에도 짐이 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입장, 상이한 역할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있는 집단 간의 문화적 장벽을 낮추고 상호적인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파트너십의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4. 현실 분석의 개념도

본 장에서 수행한 현실분석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의 현실을 갈등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이의 배경과 요소, 그리고 이 요소가 갈등으로 전개되기 위한 기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림 5> 통합을 위한 현실분석

IV

정책 방안

1. 신뢰 구축	133
2. 차이의 소통	139
3. 갈등해소의 제도화	146
4. 파트너십 형성	150

본 협동과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국민통합이라는 주제를 놓고 다양한 방법과 시각을 동원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통합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통합의 비전이 필요하고 또 이를 향해 나아가야 할 현실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본 과제는 차별이 없고 갈등이 해소되며 평등한 사회가 통합된 사회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런데 차별이나 평등은 대단히 논쟁적인 개념이어서 어떤 것이 차별이며 어떤 것이 평등인지를 모두가 동의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또한 갈등의 해소라는 것도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갈등 자체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시각으로 현상을 보느냐에 따라 문제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정의, 관용, 그리고 신뢰를 국민통합의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 개념들은 근대 사회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고 더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언급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어디인지, 장애요건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분석은 3차 연도뿐만 아니라 1, 2차 연도의 하부과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 2차 연도의 연구는 제도 개선 방안에 비중이 커서 주로 3차 연구의 하부과제가 현실분석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3년 동안 수행한 차별이나 갈등의 연구를 통하여 현실의 3가지 큰 맥락이 잡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차이의 부상**, **이해의 갈등**, 그리고 **구조의 변화**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세 측면은 우리 사회에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요소인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갈등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차이가 이해, 인정되지 않고 심지어 차별로 이어지거나 이해의 갈등이 충돌로 발전하거나 구조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갈등이 전개되고 나아가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통합이란 서로를 인정하고 관용하고 신뢰함으로써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사람 없이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조화로운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요소가 갈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

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현실분석에서 나타난 갈등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갈등의 제도화란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즉 갈등해소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이는 구성원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을 높여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갈등의 제도화는 공적인 제도와 민간 제도를 포함하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갈등의 제도화가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이라면 **신뢰 구축**은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한 현실분석을 보더라도 이해의 갈등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음으로서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신뢰 구축 방안에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과 더불어 개인이나 집단 간의 신뢰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새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여러 차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 사이에 **차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차이가 존재하고 또 중요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는데도 구성원들이 아직 차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균질한 사회에 대한 믿음 하에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차이를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를 차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국민들이 차이를 인식하고 다음으로 이를 서로의 이해의 발판으로 삼고 나아가 차이로부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형성**이 있다. 이는 갈등의 해소나 차이에 대한 이해보다 한 단계 성숙한 단계의 통합방안으로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1. 신뢰 구축

신뢰란 안정적인 심리적 투자를 요구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사람들은 한번 신뢰했던 것을 영원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기에 따라 쉽게 거 뒤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일에 걸쳐 형성된 신뢰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신뢰의 구축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우리 사회처럼 신뢰가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모르는 사람, 이방인, 그리고 특히 제도에 대해서는 인식할 때 신뢰 구축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신뢰의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은 사회의 변화 때문이다. 구성원들 사이에 이질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조직이 형성되어 조직과 조직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현실을 분석하여 보면 신뢰의 부족이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이해갈등 사례에 있어서도 교육갈등이나 지역갈등 모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우 이것이 본인 (혹은 본인의 자녀)에게 최선의 교육 기회를 줄 것인지, 또한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정책인지 등 정책이 효율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방인에 대한 신뢰 부족의 예는 새터민이나 결혼 이주여성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한다.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차원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 규칙과 규범을 세우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열은 “정부, 법질서, 계약관계 등 공적 제도, 규범 등에 대한 낮은 신뢰는 … 우리 사회의 최대의 취약점”이며 이 “제도, 규범의 취약성은 파행적이고 압축된 근대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학습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반영하며, 정부의 리더십과 권위에 대한 신뢰결핍”

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적인 신뢰의 토대는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규칙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재열, 2006, 15)”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인과 한국인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신뢰도가 낮은 가운데서도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그렇지 않은데 신문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미국인의 그것과 같았고 방송에 대한 신뢰는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재혁, 2005). 미디어는 정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기여와 동시에 반대의 작용을 할 수 있다. 본 협동과제의 하부과제인 “한국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협동연구총서, 2006-02-03)”의 연구결과에서는 현재의 언론이 신뢰형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적 차원에는 지역 기반 공동체 참여와 신뢰 교육 방안이 있다.

가. 거시적 차원

1) 법제도의 신뢰도 제고

가) 정치에서 법치주의 확보

사회에서 규칙과 규범을 생산, 운영하는 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부이고 이 세 부 사이의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됨으로서 공적 신뢰의 토양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관성이 아직 보이지 않고 이는 무엇보다 이 세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정치인, 관료, 사법관 등 각각의 영역의 주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모든 영역이 정치적 논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논리라고 함은 바로 법적 원칙이 없이 당시의 세태나 포퓰리즘적 행태에 따라 정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제도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각 영역이 정치에서 독립되어 각각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무엇보다 정치 자체가 법적인 근거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사회 규범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행정영역이다. 그런데 행정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예측가능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규칙을 자기이익에 맞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규칙이 사적 점유 혹은 오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예가 교육행정이다. 교육은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교육행정은 이러한 장기투자를 위한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교육방향이 고정적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의 틈새를 이용해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즉, 사교육에 투자를 한다든가 심지어 가능하다면 학교성적도 조작까지 시도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일관적이지 못한 규칙은 그 자체로 존중되지 못하고 오용되거나 왜곡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은 주기적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적어도 몇 년 앞까지는 예측이 가능한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

다)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제도에 대한 신뢰는 직접 경험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이는 사회화 과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얼마나 정확하게 주어지냐에 따라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 중의 하나는 규칙위반에 따른 처벌의 임의성이다. 특히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교통규칙 위반인데 처벌을 받지 않을 때가 받을 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경찰의 실적 올리기에 희생당했다는 등의 정당화를 하게 된다. 따라서 교통규칙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가 사회에 만연하다.

이처럼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확히,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 기업형 범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칙 없는 사면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보통의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모든 규칙의 위반에 있어 철저하고 엄격한 처벌을 함으로써 규칙 준수에 대한 사회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미디어의 순기능 제고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것은 양면의 칼일 수 있다. 한편으로 국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득하여 통합적인 방향으로 국론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몇몇 이익집단과 정치집단, 혹은 미디어 자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미디어가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보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미디어는 국민을 혼동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의 차원에서보다는 시민적 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미디어 감시의 제도화

현재 미디어 감시 기능은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디어 모니터링의 결과가 기사의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 환류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 모니터링은 의견의 다양성과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표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지면을 할애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와 미디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나) 미디어의 공론장 제공 기능 강화

시민의 공론장 참여는 사회 각 부분에서 정책적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에 의한 공론장 형성은 빈약하다. 결국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의 중요한 기능인 것이다. 오늘날처럼 온라인이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특히 논리보다는 감정적인 논쟁으로 치닫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난무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럴 때 미디어에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검증된 공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방송에서의 토론 프로그램이나

신문에서 독자기고란,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저널리즘을 통한 의견수렴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미시적 자원

신뢰는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제도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부족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가족 밖의 사람이나 다른 조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신뢰부족이 문제가 된다. 특히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변하면서 이웃과의 소통이 줄고 이웃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줄고 있는 것도 우려할만한 일이다. 이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경험을 늘리고 자기반영적 교육을 통해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지역사회 공동체 경험의 강화

대인관계가 가족, 직장, 그리고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는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도 명절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주민잔치나 경로행사 등이 주민들을 모으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행사보다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구민회관,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이 어느 정도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취미동호회도 중요한 지역공동체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거리상의 한계를 넘어 시, 도, 때로는 전국적인 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공동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들에 소속률은 전체 인구를 볼 때 아직 대단히

낮은 편이다. 이는 시간, 경제, 그리고 거리 등의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제약과 프로그램과 시설의 제한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리의 제약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기반으로 하거나 주민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성인들 못지않게 어린이들의 공동체 경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요새 아이들의 인적 교류가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같은 전통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환경, 봉사 단체 등을 조직하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시작한 단체들도 적지 않으나 지역의 시민단체나 학부모 모임이 주도하는 더 많은 모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어렸을 적부터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유아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을 같이 놀리는 플레이그룹의 차원에서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2) 신뢰 교육

신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즉, 신뢰 교육은 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함께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민주시민교육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민주적 시민 교육(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1997-2000; 2000-2005)의 원칙을 적용해보고자 한다(Jackson, 2006-4-10).

가) 윤리적 능력 형성

자유, 평등, 연대감(solidarity)을 키운다.

- 자신과 타인을 존중
- 타인을 자신처럼 여기며, 인류의 일부분으로 간주

- 최소한 이상의 관용
- 남의 말을 듣는 능력
-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성찰
-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수용

나) 사회적 능력 형성

- 타인과 함께 사는 능력
- 협동 능력
- 법의 원칙에 따른 갈등 해소 능력
- 공공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다) 민주적 시민이 되기 위한 기술(skills)의 교육

- 행동, 상호작용, 참여, 중재, 협력, 공유, 토론, 협상(구축, 해체, 재구축), 상상력, 예측력

2. 차이의 소통

가. 차이에 대한 이해 증진

단일민족 의식, 민족적 순혈주의를 중시하는 한국사회는 민족적·혈통적 기준에 의한 한국인만을 ‘우리’로 인식해 왔으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사회 통합이나 국민통합은 이러한 의미의 한국인만을 내포하는 것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그런데 세계화의 추세는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인의 해외 거주 경험과 외국인의 한국 정주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물론 세계화 시대라고 하여 민족의식이나 민족 전통이 무의미한 것은 전혀 아니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민족과 전통에 대한 추구하고 계발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는 세계화·개방화의

흐름과 공존할 수 있는 민족의식이나 민족문화는 과연 어떤 형태와 내용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현존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배제하는 배타적 의식에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하고 또 다양한 가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표상하는 집단인 이주민과 새터민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책대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은 약 8,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대략 2005년 한 해 동안 입국한 외국인은 500만 명이상으로 1995년에 비교할 때 1.8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해 입국자를 체류자격별로 나누어 보면 취업관련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116,127명, 예술홍행 비자 (E-6) 4,759명, 거주비자(F-2) 88,391명으로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05년 신고된 전체 혼인 중 13.6%(43,375건)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이며 이 중 31,180건은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결혼이다.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 이주가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새터민의 수는 전체 인구에 비해 극히 소수이며 외국인이주자의 비율도 다른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변화의 추세이며, 또한 이들에 대한 정책은 한국 사회의 차이와 개방에 대한 지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새터민이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정책은 이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 동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새터민의 경우 담당 기관(하나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데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정착금을 지원하며 신변보호담당관과 정착 도우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성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지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부분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한글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강습, 생활예절 교육, 가족상담, 멘토링(‘친정부모 맺기’ 등), 건강검진 등 복지프로그램, 일반적인 교양 취미교육 및 부분적인 취

업기술교육, 풍물전시 등의 문화 교류 등이 있다.

현재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외부에서 유입되어온 집단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동화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로 옮겨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언어, 직장의 규칙, 가정의 문화와 관습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이 불가피하며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보다 체계화되고 확대될 필요도 크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 적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을 재사회화(re-socialization),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재사회화와 적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북한 출신, 혹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지워질 수 없다.

새터민에 관한 한 연구(정진웅, 2004)에 따르면, 새터민 교육에서 ‘적응’ 못 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종의 ‘자발적 비적응’, 즉 자신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남한 사람들의 지배문화를 객관화, 상대화하고 이에 대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라고 한다. 새터민 적응교육의 성공적 실행은 역설적으로 ‘사회구조적 적응’과 ‘적절한 정도의 문화적 부적응’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응과 동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차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차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일방적 동화정책은 쌍방향적인 문화교류와 병행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새터민이나 이주민들의 ‘출신지역’ 문화나 가치관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높일 수 있는 홍보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커다란 장애가 있는데, 이들의 출신지역에 대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 결혼 이주자들의 모국인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는 한국보다 빈곤하고 경제적 발전 수준이 낮은 이른바 후진국이며 특히 북한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비인격적 대우, 인권 침해 등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경제발전 수준이나 정치적 기준에 따른 평가나 선입견에 대해서는 쉽게 개

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문화적’ 차원에서는 상호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풍물과 음식, 예술, 가족생활 문화 등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 특히 결혼이주자들의 가족이나 이웃들의 문화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 여성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상당수 여성들이 자신들의 모국어와 출신문화에 대해 남편들이 보다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요구하고 자녀가 한국어와 함께 자신의 모국어와 출신문화를 어느 정도 습득하기를 원하고 있었다.¹³⁾

새터민의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해온 이들에게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투사하는 것은 사실 매우 부당한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온 의지와 용기, 가족애와 강인한 생명력, 탈출과정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 등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차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대안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우선, 새터민을 지원하는 접촉자(신변보호관, 도우미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자를 지원하는 전문담당관이나 자원봉사자를 늘리고 이들에게 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결혼 여성들의 가족(남편, 시부모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과는 상이한 가족제도나 관습을 이해함으로써 가족내부의 갈등을 보다 잘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아시아 각 지역과의 문화예술 교류가 증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일부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음식이나 풍물에 국한된 일회성 교류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우리와 역사적 배경이나 종교적 관습이 상이한 사회를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본격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한 지역축제를 정례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넷째,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장점에 대한 교육이 학교교

13) 이 심층인터뷰는 본 협동연구의 하부 과제인 <여성 결혼이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실시한 결과이다.

육과 사회교육 양 차원에서 모두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새터민이나 이주자를 지원의 대상으로 객체화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이들이 남한주민과 함께 참여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문화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문화행사나 자원봉사 활동 등에 새터민, 이주민들이 남한주민들과 나란히 참여하면서 호혜적인 우정을 쌓고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나. 차이를 통한 발전

차이는 동질성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매우 불편한 것이고 또 차별의 빌미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차이는 사회의 유연성과 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인종적 민족적 구성이 다양해진다면 한편으로 다양한 입장차이로 인해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나,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세계화와 더불어 몰아닥치는 다양한 요구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인적 자원을 확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는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주민들의 경우 이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 특히 외국어 능력이나 출신 사회에서 이전에 종사했던 직업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일부 농촌지역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 여성이 영어교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으며, 동남아시아 언어(베트남어, 태국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제2외국어 특별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또한 한국사회에 먼저 들어온 여성들을 일정한 교육을 거쳐 새로 이주해온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나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새터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북한에서 자신들이 종사했던 직업이나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과정이나 자격증 체계의 차이 때문에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심층 면접 사례를 보면 북한에서 의사나 약사로 일했으나 남한에서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하여 좌절감을 겪는 새터민이 있는가 하면, 교사 출신으로 남한에 와서도

새터민 대상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감이 매우 높았다. 많은 새터민들이 단순노무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당장 취업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대학진학 등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¹⁴⁾ 현재 대다수의 새터민이나 이주민들이 타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가장 주변적인 일자리로 편입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다. 외국의 경우 주로 가족단위의 이주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한국 사회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단신 입국하거나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날 혼혈 2세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국 사회의 혼혈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나 통계수치도 나와 있지 못한 실정이며, 차별과 편견,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존의 관행을 방치한다면 국제결혼에서 탄생한 2세들은 정체성 형성과 사회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새터민 청소년들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터민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부모의 출신지역이 아닌 한국에서 살아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부모와의 갈등을 심하게 느낄 수 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차이로 인해 또래 집단에서 소외를 겪을 때 마다 자신의 가족과 부모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며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

14) 이러한 심층면접 실태는 본 협동과제의 하부 연구로 수행된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협동연구총서 2006-02-06)>의 결과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다.

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한국어나 한국문화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모국 언어나 문화를 이중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이중성을 그들의 장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제결혼이 대부분 농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어, 많은 시부모들이 자신의 손자녀들이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나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을 꺼려한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어머니는 자녀와의 의사소통하기 어려워지며 자녀 교육에 대해 다른 가족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 가족 내 갈등은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갈등을 풀려는 의미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접근,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갈등을 ‘관리’하려는 접근이 있다. 갈등해소나 갈등관리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갈등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의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갈등 전환의 관점에서는 갈등을 단순히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갈등의 역동은 특정한 예측가능한 국면을 경과하면서 사회적 관계들을 변화시킨다고 본다(Lederach, 1995). 사회통합은 갈등을 소멸시킴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갈등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조정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아직은 전체 인구 중 소수에 불과한 새터민이나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기존의 문화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거주지인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문화요소를 버리지 않고도 새롭게 정착한 문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즉 양측 문화를 동시에 갖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주자들에게도, 기존의 주류사회에도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차이를 새로운 잠재력으로, 한국 사회의 관용성과 유연성을 확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이를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향적인 시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3. 갈등해소의 제도화

갈등의 제도화는 초기 산업사회에서 계급갈등이 대립적·폭발적으로 분출되다가 점차 일정한 제도의 틀 안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다렌돌프, 1982). 전복적이고 급진적인 저항들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나 정당정치의 틀 안으로 흡수되고, 이견이나 갈등의 표출은 법이나 관행의 테두리 안에서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갈등의 제도화는 계층갈등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갈등을 안정적으로 중재·조정하고 사회통합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을 단순하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해결과정을 제도화해야 하는 까닭은, 갈등도 나름대로 사회에 존재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루이스 코저(L. Cos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갈등은 언뜻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갈등의 존재가 사회의 유지에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갈등은 한편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통로가 됨으로써 사회 내부의 긴장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미리 예시함으로써 대안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갈등 해소과정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제도’의 의미는 공식적인 법률이나 국가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 수준의 다양한 제도들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아래에서는 갈등관리 및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대안적 갈등조정기구(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민간의 갈등인프라 구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가. 갈등관리 및 차별해소를 위한 법과 기구의 정비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확대될수록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화된 수단은 법률에

따라 소송을 하는 것이다. 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익의 침해가 분명한 사안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긴 소송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법률의 집행은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갈등양상에 즉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의 지체나 마땅한 갈등해소 및 분쟁조정 수단이 없어 갈등이 방치된다면,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결국에는 실력 행사나 물리적 충돌에 이르러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갈등관리 관련 법 제정과 제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권 국가들은 갈등관리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지는 않았지만 기구설치나 제도마련을 통해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갈등관리관련 제도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구체화되고 점차 입법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협동연구총서, 05-02-03: 37).

갈등관리법은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정부 사업이 민간의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서 분쟁을 낳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간의 이견과 분쟁 등 주로 정부의 행정행위와 관련된 부문, 즉 공공갈등을 다루게 된다. 내용에서는 갈등의 사전 예방 시스템과 갈등의 사후 조정 및 관리 시스템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새만금 사업이나 고속전철 터널 건설,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등의 정부 사업에 놓고 중앙과 지역의 입장,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입장, 개발 찬성 주민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격렬한 갈등이 벌어진 사례가 많다.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 수렴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주민들이 입은 손해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보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갈등관리기본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갈등관리법(안)이 각 부처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각 부처의 고위관료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공공갈등 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 내에서 갈등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 실행에 옮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논의 중이며, 성별, 나이, 장애, 민족, 인종, 종교, 성적 선호, 출신지역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차별피해를 구제받고 가해자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차별의 피해자는 대개 가해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이며, 차별을 가한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차별이 아님을 주장하기 때문에 차별 여부에 대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의 차별관련 법에서는 차별 가해자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차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나. ADR의 적극적 활용과 전문 인력 양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란 일반적으로 중재, 조정, 알선 등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방법을 널리 가리킨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쟁당사자를 위해 공정한 제3자가 관여해서 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협동연구총서, 05-02-03: 87).

ADR은 재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접근성도 용이하지만, 반면 재판의 판결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분쟁의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상호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관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신뢰성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조물책임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무역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협동연구총서 2005-02-04).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업계의 필요성에 의해 민

간협회 수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 역시 정부 시책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ADR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널리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법원의 조정은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민간 사업자가 실시하는 ADR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 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협동연구총서, 05-02-03: 88). 결국 민간 ADR이 활발하게 기능한다는 것은 그만큼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만한 민간의 전문적 역량과 신뢰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ADR이 보다 확대되도록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법지원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제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ADR 기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도 개개의 ADR 기관에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제휴하여 ADR의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격증을 창설하거나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양성기관의 운영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민간 인프라 구축

다양한 분야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민간단체나 NGO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민간단체는 전문분야별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한 중재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NGO는 사회적 약자나 사회에서 주변화 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필요한 사회적 정책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NGO들은 아동상담, 청소년 상담, 여성상담, 노인상담, 가족상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상담 등 다양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한편으로는 고민이나 피해를 입은 내담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개인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지원역할이지만, 다른 한편 내담자를 고통 받게 만드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할 때 개선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대상의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도 교육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전문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해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갈등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방안, 둘째, 다양한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전문가 양성과 배출을 위한 구체적이며 사회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가령 공인된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정부나 민간 협회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넷째, 갈등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전문성 강화 등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협동연구총서, 2005-02-04: vi).

4. 파트너십 형성

파트너십은 서로의 자발적인 협력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통합방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를 때 하나의 목표와 방향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이 공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의 공존과 협력을 의미 있게 만드는 시각은 무엇을 찾아내어 새로운 시각에서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이 공존관계에서 상생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3자--중앙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미디어 등--의 중재가 필요하다.

앞에 현실분석에서 잘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갈등적인 관계에 있는 집단들이 많다. 이러한 갈등관계의 해소는 중재 같은 제도적인 방법도 있겠으나 많은 갈등은 몇 개의 현안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갈등의 내용이 복잡하여 파트너십 형성이 좀더 생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각 갈등의 성격에 따라 파트너십 형성의 내용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각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파트너십 형성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를 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젠더파트너십을 소개하고 이것이 다른 파트너십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가. 젠더파트너십과 구축방안

1) 젠더 파트너십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파트너십이 가장 필요한 영역 중 하나는 젠더이다. 남녀는 공존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경제구조는 남녀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젠더파트너십이란 남녀평등이 결국 남녀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시각 하에 남녀의 참여를 끌어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 요구되는 젠더 파트너십은 남성의 변화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왜냐하면 젠더 이슈 관련 남녀의 의식은 변하고 있지만 남성의 의식 변화는 여성에 비해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협동과제 하부과제인 “성별 갈등 해소를 통한 젠더파트너십 구축방안(협동연구총서 2006-02-02)” 연구결과를 보면 성평등 문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크게 대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여성과 남성 간의 의식 차이가 넓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남성의 의식 지체는 무엇보다 남성들 자신에게 사회부적응의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감을 낮출 것이다. 남성 스스로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남녀가 화합적으로 가정과 직장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제도마련에 동참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젠더 파트너십이다.

2) 구축 방안

이를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차원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의식 차원, 조직문화 차원, 그리고 정책의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하부 과제인 “성별갈등해소를 위한 젠더 파트너십 구축방안(협동연구총서, 2006-02-02)”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가) 의식 차원

의식 차원에서 젠더 파트너십 형성은 남녀의 성평등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남성은 성평등의식이 여성보다 낮을 뿐 아니라 성별집단정체성,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남녀 지위 고저, 합법성, 안정성)의 인식이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별집단정체성을 낮추고 남성의 우월한 지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식의 차원에서는 교육과 미디어,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1) 가족 문화에 대한 공적 관심 제고

가정은 사회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앞의 조사에서 보듯이 성평등 혹은 성차별적 의식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가정이다. 동시에 가정은 사적 영역이어서 정책적 중재가 가장 힘든 영역이기도 하다. 공사 영역의 구분은 근대사회의 특징이지만 이는 성차별적 관행을 유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오랫동안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묵인해왔다. 같은 맥락으로 가정에서의 성별 역할 구분도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반면에 가정은 고립된 섬은 아니다. 외부에서의 영향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중요한 발견은 성별 역할 의식을 중재하는 것이 주관적 규범, 즉, 남들이 의견이라는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가

족들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친구, 동료의 의견, 나아가 사회적 담론 — 미디어, 교육 — 일수도 있다. 특히 교육과 미디어가 성평등의식과 규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직도 지대하다. 따라서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가족문화 양성평등성 제고는 효율적인 젠더 파트너십 구축방안이다.

○ 미디어의 양성평등성 제고의 새로운 전략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제안되어 온 미디어 양성평등성 제고전략은 좀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성평등성 모니터링의 경우 내용의 성평등성 분석 뿐 아니라 수용자의 성평등의식 수준에 따라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관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필요하다. 성평등 의식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가족의 모습을 소개하는 다큐 등 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성평등 의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남성 지위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담 형태의 프로그램, 퀴즈쇼 같은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마 등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안이나 시나리오 공모를 하여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그동안 미디어에서 간간히 수행한 평등한 명절문화 캠페인은 의식전환의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의 입장에서 명절문화의 성차별성과 억압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제기의 정당성에 대해 사회적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남성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미진하였고 이제부터는 실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미디어에서 가족문화를 다루는 것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구체적인 문제 지적과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성평등의식

에서 양성평등행동으로 진행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적, 단편적인 캠페인이 아닌 연 단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의 기획할 필요가 있다.

(2) 젠더파트너십의 정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공교육과 관련된 젠더파트너십 확산 방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교육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성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관행 및 내용들을 개선하는 접근이다. 또 다른 접근은 젠더파트너십을 습득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교육 콘텐츠 모니터링

교육과정은 교과서와 같이 정형화된 공식적 교육과정과 교사의 훈육방식이나 학교 관행과 같은 비공식적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또 최근에는 방과 후 교육, 특기적성 교육 등 교육 콘텐츠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성별 고정관념이나 젠더 파트너십의 습득에는 공식적인 교과서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교육내용, 즉 교사의 평소 발언이나 교장의 교육방침, 두발규제에서 급식질서에 이르는 폭넓은 학교의 훈육 방침 등이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식적·비공식적 교육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젠더파트너십 형성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내용과 관행들을 적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젠더파트너십 향상을 교육과정에 반영

나아가 젠더 파트너십 향상을 교육적 목표로 설정하고 학생의 참여를 유발하는 유연한 방식의 젠더파트너십 향상 교육을 개발할 수 있다. 실천방안으로는 학교장 재량 교육이나 논술 교육 등의 형식으로 젠더파트너십 교육을

학교 시스템 안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협력적 성별 역할 훈련, 젠더 파트너십의 효율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프로그램, 현재 성별 구조에 대한 분석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성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남녀 학생에게 요리나 육아 등의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 교사 양성평등 교육

요즘 아이들의 성역할태도가 많이 바꿨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교육은 아직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다. 교과서에서의 성차별적 요소, 그리고 선생님들의 성차별적인 태도가 대표적이다. 선생님들의 성차별적 태도는 학생들이 어릴수록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도 나타난다. 문제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성차별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식전환에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창조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학교에서의 교장선생님의 영향을 고려할 때 교장선생님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인쇄교재나 영상, 사이버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현재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개발한 교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보육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젠더파트너십 교육 반영

초기 사회화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대한 것이다. 현재 보육이나 유치원 교육에는 사교육과 공교육이 공존하고 있지만 제도 교육에 편입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유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공공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보육을 확대하는 한편 사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의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젠더 파트너십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 프로그램 안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시설에서 원하는 언어 교재 등을 젠더 파트너십을 적용하여 개발함으로써 시설운영자들

의 사용 동기를 높일 수 있다.

(3) 남성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확대

남성들이 젠더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성평등의식이 우선 필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평가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본 협동과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양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주관적 규범의 압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모, 형제 등 친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 등의 의견이 평등한 행동을 격려할 수도, 억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남성들이 성평등한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혹은 이 행동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한 행동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남성들의 여러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아버지들이 학부모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이나 휴일에 모임을 가진다든가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예회, 운동회나 수업참관 등 모든 행사에 아버지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기관이나 문화교육기관 등에도 남성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커리큘럼의 차원에서 남성의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족이 남성 참여가 매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관에서도 아버지가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남성 참여 확대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그리고 교육부 등이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적,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과 함께 직장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온 남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남성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직문화 차원

기업과 조직은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직의 목표를 추구해 나아가는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협동적인 과업수행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곳이다. 이는 즉 젠더 파트너십이 곧 생산성과 조직의 효율성과 결부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직이든 기업이든 조직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은 조직 효율성에 치명적이며, 목표달성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기업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젠더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 할 수 있고, 이곳에서의 젠더 파트너십의 긍정적 효과는 가정의 영역에까지 파급되어질 수 있고 또한 그 역으로 순환되어지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1) 적극적 조치 정책 특성에 맞는 추진체계 구축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부 제도에서 적극적 조치의 수혜자인 소수자(여성)들이 오히려 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추진 과정에서의 부주의나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다. 특히 적극적 조치로 승진한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와 평가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평가에 여성 참여 확대

현재 우리 사회의 기업이나 공적 조직은 남성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체 인원의 성비에서 뿐만 아니라 관리직, 경영진의 비율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실태는 기존의 성별 지위와 합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사평가의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이 보는 능력은 다른 것일 수 있으며, 평가의 모든 결정권이 어느 한 성에 한정되는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발면접 등에서 여성임원이 반드시 포함되거나, 인사평가 시 어느 한 성이 일정 비율 초과하

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CEO 및 임원진의 성평등의식 교육기회의 확대

젠더 파트너십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 CEO나 기업의 임원진의 의식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협동연구(협동연구총서 2006-02-02)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결과 모두 일관되게 직장인들은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의 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CEO의 오픈 마인드”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가족친화적인 제도 도입의 결정권뿐만 아니라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좌우하는 것도 CEO와 기업의 임원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EO나 기업 임원진은 너무 바빠서 양성평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들 한다. 남녀 간의 갈등이 조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기업인 대상 교육이나 경제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경영진 세미나 등에 다양한 성평등의식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과정이나 경영대학원 등의 CEO 과정에 필수교육과정으로 넣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들 교육과정에는 젠더파트너십 구축과 가족친화적인 기업사례를 비롯한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가 생산성과 이직율 감소 가져오는 국내외 사례를 접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4) 노조와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여성에 대한 인정과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핵심적 규범으로 수용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성평등이 개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평등 문화 조성은 노사 한쪽에서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노사위원회나 노동조합 등 노사 간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여 성평등을 노사협력의 중요한 이슈로 채택하는 주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조와 경영진

내에서 성평등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남녀 직장인들이 스스로의 의식을 개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5)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의 다양화 및 활용성 제고

맞벌이 가정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경제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직장인들이 갖는 관심사는 급여수준보다는 여가시간, 자녀양육, 자기계발 등 근무시간 외에 허용되는 시간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탄력적 근무제도들을 개발하고, 이들을 선택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성육아휴직제도의 부진한 활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직장인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정에 걱정거리를 남겨 둔 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인의 회사에서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문제를 회사나 조직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서구 국가들의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 정서문제, 결혼 및 가족문제에서부터 노인보호,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 학업정보지원, 위기관련 스트레스이완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회사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6) 성희롱 방지교육의 젠더 파트너십교육으로의 전환 및 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많은 남성들이 여성과의 의사소통에서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은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오해를 받는다는 호

소를 하기도 한다. 아직까지 남성이 절대적 다수인 직장에서 여성과 동료로서 협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경험의 축적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점집단인터뷰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참여자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회사생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무엇이 성희롱이고 무엇이 성희롱이 아닌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무엇이 힘든지, 또 남성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동료로써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사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젠더파트너십 교육은 경험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오프라인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 정책 차원

현재 도입되어 있는 고용평등관련 법,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다루는 법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률들은 젠더 파트너십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기존의 법률들은 평등과 참여라는 당위적 목표를 선언적으로 제시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평등한 젠더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들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성 평등이라는 상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나 목표에 근접해가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갖추지 못한다면 법의 실효성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법은 도입되었으나 현실을 변화하지 않는 상황, 즉 외형적인 제도와 현실적 실행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차원에서 젠더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상생활이나 공적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관행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실천을 개인의 자의적 선택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책임을 지우는 한편 각각의 행위자에게 적합한 구체적이고도 단계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젠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실상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성평등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남녀 사이에 인식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는 것이 성평등한 정책 구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젠더 파트너십 형성 방안이 필요하다.

(1)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법적 정비

새로운 젠더 파트너십을 도입하고 실행함에 있어 기업은 매우 중요한 행위자의 위치에 있다.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고 가족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가정 생활이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직장이 차지하는 의미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주체일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조직 운영 방식이 남녀의 성별 분업에 대해,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사회 전체의 젠더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젠더 파트너십은 고용평등, 가족친화 경영,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자체적으로 젠더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젠더 파트너십의 향상은 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다른 한편 기업의 인력 관리를 효율화하고 조직의 역량을 신장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현황 진단과 계획 수립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의사결정직 대상의 교육과 워크숍 체계화

제도 개선이나 법률의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행위자들의 인식 전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 법률이나 조례의 제·개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 스스로가 내면화하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젠더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가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마련이다.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고위 공직자 및 의원들은 정규 교육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대상이다. 의사결정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개방적 토론을 유도하는 워크숍 형식 등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의원의 경우 NGO나 유권자들과의 토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젠더 파트너십과 관련되는 정책 의제들을 모아서 전문가-NGO/유권자-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구 내지 지자체 수준에서 시민단체 및 유권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나. 기타 파트너십에의 시사점

이처럼 젠더파트너십은 다양한 차원에서 요구되고 따라서 이를 구축하는 방안도 의식, 제도,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젠더파트너십이 본인의 복지와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의 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남성 직원이 가사나 육아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여도 직장에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식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남성이 가사를 하고 싶어도 필요한 기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행동에 옮길 수 없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남성에게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가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젠더파트너십 구축은 의식과 제도, 문화 사이의 악순환에 중재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다른 파트너십에도 적용된다.

젠더파트너십 외에도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지역과 지역 간의 파트너십, 기업과 시민 간의 파트너십, 교사와 학생 간 파트너십, 부모와 자식 간 파트너십, 세대 간 파트너십, 그리고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파트너십 등 셀 수 없는 영역에서 파트너십의 형성은 필요하고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적절한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파트너십은 단순히 주체들을 연결하는 것은 넘어서 구체적인 이슈를 토대로 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간의 파트너십은 지역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기업과 시민 간 파트너십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체 하에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 또 다른 고려사항은 중재자이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중립적 혹은 초월적 시각을 가지기 힘들다. 따라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념갈등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언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론은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이념갈등의 수위는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이처럼 파트너십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다. 정부, 지자체, 시민은 여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원택(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강원택(2004), “남남 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 강정인 외(2002), “정보화와 한국인의 의식변화: 네티즌의 동화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4호.
- 강정인 외(2003),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 《신아세아》 제10권3호.
- 구영록(1974), “통합이론에 관한 연구: 통합의 유형과 갈등”, 국제정치논총, pp. 91-140.
- 길승흠(1993), “한국인의 정치의식 구조 변화: 1963~1992”, 《한국정치학회보》 26집3호.
- 김무경·이갑윤(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권2호.
- 김병국 외(1999),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 김용학(1999), “경제위기의 충격과 신뢰 위기 - 위기 전후의 경험적 지표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 김유선(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3.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은미·김현주(2004),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과 합의 형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재한(2006),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의 이해”. 한국여성개발원·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자료집.
- 김종길(2003), ““안티사이트”의 사회운동적 성격 및 새로운 저항 잠재력의 탐색”, 《한국사회학》, 제37집 6호.
- 김종길(2005), “접속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진균·조희연(1985), “분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 《한국사회 한 세대》,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형준·김도중(2000),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의 갈등구조: 통일담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0집 4호.
- 남궁곤(2003), “햇볕정책의 일관성과 여론 분열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19권4호.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2), 《월드컵과 신공동체문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마인섭(2003), “정당과 사회균열구조”, 심지연(편저), 《현대 정당정치 이해》, 백산서당.

마인섭·장훈·김재한(1997),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27집.

박동서·김광웅(1987), 《한국인의 민주정치 의식-대중과 엘리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재규(2002), “대북정책 추진에 다른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해소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6차 회의자료.

박형준(2004), “정보화 사회의 불평등구조와 대응 전략”, 철학연구회 편,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철학과현실사.

박효중(2006), “한국의 보혁 갈등에 관한 일 고찰 : ‘포스트민주화 패러다임’의 부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자료집.

백준기·조정관·조성대(2003),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그리고 2002년 대통령 선거”, 《국가전략》 9권4호.

社會 保障 研究, Vol.18 No.1.

삼성경제연구소(2001),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삼성경제연구원(2002), “《2002월드컵》과 사회·문화적 변화,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원.

서진영 편(1998), 《세계화시대의 사회통합》, 나남출판.

선학태(2004), 《갈등과 통합의 정치》, 심산.

설동훈·정태석(2002),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사상》 제 14권 제3호.

송호근(2005),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이념갈등과 정책빈곤의 진보 정치》, 21세기북스.

신광영(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신광영(2005), “미조직 노동자와 시민사회에게 인정받는 노동운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2005. 6월호

- 신광영·이병훈(2005), “경영자의 노사관계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산업노동연구》 제 11권 제1호.
- 신동면(2006),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이론》 2006 봄/여름호.
- 심연수(2003), “남북한 관계개선과 국정안정을 위한 복합체계론적 이념통합 모형연구”, 호남정치학회보, pp.69-82.
- 심창학(2002), “유럽 통합의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 in the European integration)”.
- 안병철 외(2001), 《경제위기와 가족》, 생각의 나무.
- 양창삼(2003), “차별 당하는 성과 통합의 사회경영(The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 Social Management for Integration)”, 사회이론, Vol. 23 No. -.
- 어수영·한배호(1996),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 유영옥(2003), “남남이념갈등 극복을 위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7집.
- 유해운·권영길·오창택 공저(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 윤상철(2004), “이념의 정치와 권력경쟁의 정치-노동권의 출범에서 총선까지”, 《경제와 사회》 제62권.
- 원숙연(2001), “신뢰의 개념적·경험적 다차원성: 신뢰 연구에 갖는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3호.
- 유석춘·장미혜·배영(2002), ‘사회자본과 신뢰 :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비교연구’, 《동서연구》 제14권 1호, pp.101~135.
- 이상안(2005), 《(공동체)사회통합론: 갈등·교란·양극화의 잡초치유, 평등·협력·평화의 신사회창조》, 博英社.
- 이수훈(1989), “베트남이 사회문화적 통합노력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Vol. 5 No. 1.
- 이재열(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1998 여름호.
- 이재열(2006), “지역사회공동체와 사회자본”,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엄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재활성화를 위하여> 발표.
- 이재혁(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 제32집, pp.311-335.
- 이재혁(2000), “위험과 신뢰 그리고 외부성: 한국의 시민사회 사례”,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제39권 2호, pp.97~135.

이재혁(2005), “신뢰와 시민사회: 한국, 미국 조사비교,”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 센터 제2차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심포지엄 발표논문.

이정춘(2000), “사회갈등과 방송의 사회적 기능”, 언론학회-KBS세미나 주제발표 논문(2000년 9월1일)

이종원(2004), “재일동포 사회와 남남갈등”,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이필상(2003), “신자유주의 극복과 사회통합”, 철학과 현실, Vol. 57 No. -.

이현승·김현진(2003), 《늘어가는 대한민국》, 삼성경제연구소.

이호근(2000), “유럽 통합과정과 사회정책(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and the Social Policy)”, 한국정치학회보, Vol. 34 No. 3.

이호영(2004), “한국전쟁 후 남북한 “민족정체성”의 형성 : “타자성”의 사회학“, 《사회와 역사》 제65집, 한국사회사학회.

이혜경(2004), “한국 사회안전망의 재점검과 대책 : 탈가부장적-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한국사회복지학회 발표문.

장훈(2004), “한국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과제: 진보-자유지상주의의 등장과 한국 민주주의의 압축 이동”, 한국정치학회 2004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전성우(1995),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경제와 사회, Vol. -, No. 26.

전태국(2000), “사회통합 전망과 과제,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2000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정이환(2006), “동아시아의 노사관계와 임금불평등”, 《한국사회학》 제40집 2호.

정진웅(2004), “‘적응’을 넘어서 :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열린 교육 연구》 제12집 제2호.

조희연(2006),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의 혁신, 보수의 혁신”, 한국여성개발원·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자료집.

최세경(2003), “한국언론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담론의 구조, 이념, 지역 그리고 세대갈등 담론의 ‘권력관계’와 ‘정치참여의 동원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3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최영진(2001), “16대 총선과 한국 지역주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5집1호.

- 최영진(2001), “제16대 총선과 한국 지역주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5집 1호, pp. 149-165.
- 최인철(2003), “월드컵 열기의 심리학적 분석: 공통의 정체성에서 발견하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가능성”,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학술세미나, 《2002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적 역동성의 이해와 해석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한겨레21(2004), “국민 이념 성향 추적조사”, 2004년 3월10일 제500호.
- 한국사회학회 편(1985),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 한국이론사회학회(2002), 《월드컵과 신공동체문화》, 한국이론사회학회 특별심포지엄.
- 함인희(2006), “세대 분화와 세대 충돌의 현주소”,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정치학회 ·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자료집.
- 함재봉(2001), “한국의 이념적 갈등구조와 역사”, 《사상》, 겨울호.
- 홍경준 · 송호근(2004),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pp. 205~230.
- 홍성우(1995), “다원주의적 사회의 통합 가능성 모색”, 철학과 현실, Vol. 24.
- 협동연구총서 2004-01, 민무숙 외,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 해소 방안》, 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4-02, 박수미 외,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4-03, 유경준 외, 《차별의 사회적 비용과 정책적 함의》, 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4-04, 이상돈 외, 《연령차별 실태 및 해소방안》, 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4-05, 변용찬 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4-06, 한종희 외, 《차별시정정책 현황 분석 및 평가》, 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4-07, 박선영 외, 《차별시정기구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함의》, 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4-08, 박영균 외, 《청소년대상 차별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5-02-01, 김태홍 외,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5-02-02, 김태홍 외,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5-02-03, 박홍엽 외, 《국내외 갈등관련 법·제도 분석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5-02-04, 최인재 외,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민간인프라 구축 현황 및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5-02-05, 전영평 외,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의식 및 정책 수요 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5-02-06, 주재복 외, 《지역 갈등 현황 및 정책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5-02-07, 정희성 외, 《환경 갈등 현황 및 정책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5-02-08, 김홍원 외, 《교육 갈등 현황 및 정책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5-02-09, 변화순 외, 《가족·성별 갈등 현황 및 정책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5-02-10, 김태홍 외, 《국내외 갈등관련 제도 및 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5-02-11, 신창현 외, 《갈등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6-02-01, 이수연 외,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연구 총괄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6-02-02, 이수연 외,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파트너십 구축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6-02-03, 한준 외, 《한국의 이념갈등 현황 및 해소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6-02-04, 강원택 외, 《이념갈등과 통합: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6-02-05, 박영균 외,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6-02-06, 조정아 외,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여성개발원.
- 협동연구총서 2006-02-07, 김이선 외, 《여성 결혼이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여성개발원.
- Adler, Nancy J.(1991), "International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Behavior", Belmont, CA: Wadsworth.
- Agneessens, F., Waege, H., & Lievens, J.(2005), "Diversity in social support by relations: A typology", *Social Networks*, (in press).
- Angell, R. C.(1965), *The Sociology of Human Conflict*, E. McNeil(ed), *The Nature of Human Conflict*,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Arendt, Hannah(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gyris, Chris, and Donald A. Schon(1996), "Organizational Learning II" Theory, Method and Pract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Benhabib, Selya(1992), *Situating the Self, Gender, Community and Postmodernism in Contemporary Ethics*, Cambridge, Polity Press.
- Benhabib, Selya(2002), *THE CLAIMS OF CULTURE: EQUALITY AND DIVERSITY IN THE GLOBAL ER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nhabib, Selya(2004),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ting, Jan(1995), "Patterns of exclusion: imaginaries of class, nation, ethnicity and gender in Europe", in J. Nederveen Pieterse and B. Parekh(eds), *The Decolonization of Imagination. Culture, Knowledge, and Power*, London, Zed Books, 149-65.
- Bock, Gisela and Susan James(eds)(1992), *Beyond Equality and Difference. Citizenship, Feminist Politics and Female Subjectivity*, London, New York, Routledge.
- Brubaker, W. Rogers(1989), *Immigration and the Politics of Citizenship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anham, University of America Press.
- Calhoun, Craig(1995), *Critical Social Theory. Culture, History, and the Challenge of Difference*, Oxford, Blackwell.

- Castle, Seven. and Mark J. Miller(199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 Chang, M. L (2004), "Growing pains: Cross-national variation in sex segregation in sixteen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 114-137.
- Chatman, Jennifer A., Jeffrey T. Polzer, Sigal G. Barsade, and Margaret A. Neale.(1998), "Being Different Yet Feeling Similar: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Composi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Work Processes and Outcom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3(4): 749-80.
- Cheah, P., Robbins, B.(1998), "Cosmopolitics: Thinking and Feeling beyond the Nation", Vol. 14, *Cultural 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onnolly, William E.(1991), *Identity Difference. Democratic Negotiations of Political Paradox*, 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Coser, Lewis A.(1956),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Free Press, 《갈등의 사회적 기능》, 박재환 옮김(1980), 한길사.
- Cox, Taylor, Jr.(1994), *Cultural Diversity in Organization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San Francisco: Berrett Koehler.
- Cox, Taylor, Sharon Lobel, and Poppy McLeod.(1991), "Effects of Ethnic Group Cultural Differences on Cooperative and Competitive Behavior on a Group Tas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4): 827-47.
- D. Held, A. McGrew, D. Goldblatt & J. Peraton(1999), *Global Transformation*, 《전지구적 변환》, 조효제 옮김(2002), 창작과비평사.
- Dahrendorf, R.(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 J.(1996),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2nd ed. Chatham. NJ: Chatham House: 165-238.
- Deutsch, W., K.(1977), "National Integration: Some Concepts and Research Approache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 No. 4, Summer.
- Dahrendorf, R(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산업사회

- 의 계급과 계급갈등», 정대연 옮김(1982), 흥성사.
- Ely, Robin J., and David A. Thomas.(2001), “Cultural Diversity at Work: The Effects of Diversity Perspectives on Work Group Processes and Outcom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6(2):229-73.
- Esping-Andersen, G(2002), *A New Gender Contract,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 Ferguson, Marjorie(1993), “Invisible divides: communication and identity in Canada and the U.S.”, *Journal of Communication*, 43:2, 42-57.
- Fink, C. F.(1968), “Some Conceptual Difficulties in the Theor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2, Dec, pp.429-431.
- Flangan, Scott(1982), “*Changing values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4: 403~44.
- Foldy, E. G.(2004), “Learning From Diversity: A Theoretical Explo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5), 529-538.
- Fraser, N., Honneth, N., Golb, A., Ingram, J., & Wilke, C.(eds)(2003), *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 Fraser, Nancy(2000),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in Hobson, B. 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Routledge: New York.
- Galeotti, Anna Elisabetta,(1993), “Citizenship and equality. The place for toleration,” *Political Theory*, 21:4, 585-605.
- Green, Leslie(1995), “Internal minorities and their rights,” in W. Kymlicka(ed.), *The Rights of minority Cul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57-72.
- Giddens, Anthony (1979),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ddens, Anthony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London: Macmillan Press.
- Habermas, J.(1996), *The Inclusion of Others*, 《이질성의 포용》, 황태연 옮김 (2000), 나남출판.

- Habermas, Jurgen(1992a),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some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Europe," *Praxis International*, 12:1, 1-19.
- Hakim, C.(2003), "The search for equality", *Work and Occupations*, 30(4), 401-411.
- Hall, Stuart(1993), "Culture, community, nation, *Cultural Studies*," 7:3, 349-63.
- Hettne, Bjorn John(1993), "Neo-mercantilism: the pursuit of regionness," *Co-operation and Conflict*, 28:3, 211-32.
- Higham, John(1993), "Multiculturalism and universalism: a history and critique," *American Quarterly*, 45:2, 195-219.
- Honig, Bonnie(2003), *DEMOCRACY AND THE FOREIGN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nt, Istvan(1994), "The permanent crisis of a divided mankind: 'Contemporary crisis of the nation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Political Studies*, 42(special issue), 166-231.
- Horton, John(ed.)(1993), *Liberalism, Multiculturalism and Toleration*, Houndmills, Macmillan.
- Inglehart, Ronald(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ckson, Robert(2006). "Issues in Religious Education and Citizenship in EU Integr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U Integration and Korean Unification" 4월 10-11일. 서강대학교.
- Jehn, Karen A., Gregory B. Northcraft, and Margaret A. Neale.(1999), "Why Difference Make a Difference: A Field Study of Diversity, Conflict and Performance in Workgrou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4): 741-63.
- Jordan, Bill.(1989), *The Common Good. Citizenship, Morality and Self-Interest*, Oxford, Blackwell.
- Jung, Yong Hye(2006), "Korean Women in Diaspora and Ethnicity Trouble", International Workshop on Social Integration, Seoul, Korea.
- Kilman, R. H. and K. W. Thomas(1983), "Four Perspectives on Conflict

- Management; An Attributional Framework for Organizing Descriptive and Normative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Jan.
- King, Desmond S.(1987), *The New Right. Politics, Markets and Citizenship*, Houndmills, Macmillan.
- Kitschelt, Herbert(1994),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kathas, Chandran(1995a),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 Kukathas, Chandran(1995b), “Are there any cultural rights?,” in W. Kymlicka(ed.), *The Rights of Minority Cul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derach, J. P.(1995), *Preparing for Peace: Conflict Transformation Across Cultures*, Syracuse University Press.
- Lipset, Samuel and Stein Rokkan(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Lipset and Rokkan(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New York: Macmillan, pp.1-64.
- McDonald, Michael(1991), “Should communities have rights? Reflections on liberal individualism,” *Canadian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4:2, 217-37.
- Mouffe, Chantal(1992b), “Feminism, citizenship and radical democratic politics,” in J. Bulter and J. Scott(eds),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369-84.
- Nir, Norman\Kristi, Andersen(1974), “Mass belief systems revisited”, *Journal of Politics*, vol36: 340~91.
- OECD, 2003, OECD Employment Outlook.
- Okin, Susan Moller(1999),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spina, Sonia.(1996b), “Realizing in the Promise of Diversity”, In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 edited by J Perry, 441-59. San Francisco: Jossey-Bass.
- Parekh, Bhikhu(1994a), “Cultural diversity and liberal democracy,” in D. Beetham(ed.), *Defining and measuring Democracy*, London, Sage,

199-221.

- Parekh, Bhikhu(1994b), "Minority rights, majority values," in D. Miliband(ed.), *Reinventing the left*, Cambridge, Polity Press, 101-9.
- Pelczynski, Z. A.(1984a), "Introduction: the significance of Hegel's separation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Studies in Hegel's Political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3.
- Phillips, Ann(1987), *Divided Loyalties: Dilemmas of Sex and Class*, London, Virago.
- Resnick, D.(1998), "Politics on the Internet: The Normalization of Cyberspace," Chris Toulouse and Timothy W. Luke(eds), *The Politics of Cyberspace*, London: Routledge.
- Ridgeway, Cecilia L.(1997), "Interaction and the Conversation of Gender Inequality: Considering Employ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2):218-35.
- Rief, Karheinz(1993), "Cultural convergence and cultural diversity as factors in European identity," in S. Garcia(ed.), *European Identity and the Search for legitimacy*, London, Pinter, 131-53.
- Roland Axtmann(1996), *Liberal democracy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ization, integration and the nation-stat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Rutherford, Jonathan(ed.)(1990),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Wishart.
- Satori, Giovanni(1968), "The Sociology of Parties: A Critical Review", in Stammer(ed) *Party Systems, Party Organizations, and the Politics of New Masses*, Berlin: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Free University at Berlin.
- Seligman, Adam B.(2001), "Role Complexity, Risk, and the Emergence of Trust", *Law Review*, Vol. 81 N. 3, Boston University.
- _____ (2003), "Tolerance, Tradition, and Modernity", *Cardozo Law Review*, Vol. 24 N. 4, Yeshiva University.
- _____ (2006), "Social Theory, The Challenge of Society and the Potential of Ritual", International Workshop on Social Integration, Seoul, Korea.

- Shaw, James B., and Elaine Barrett-Power.(1998), “The Effects of Diversity on Small Work Groups Processes and Performance”, *Human Relations* 51(10): 1307-25.
- Sidanius, Jim, and Felicia Pratto.(1999),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egel, J., et al.(1986), “Group Processe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27.
- Smith, D., A.(1991),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Books.
- Taguieff, Pierre-Andre(1993/4), “From race to Culture: the New Right’s view of European identity,” *Telos*, 98/99, 99-125.
- Tan, Kko-Chor(2000), *TOLERATION DIVERSITY, and GLOBAL JUSTICE*, The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 Taylor, Charles(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aylor, Charles(2004), *Modern Social Imaginaries*, Duke University Press.
- Taylor, Gooby peter(1993), “What citizens want form the state. In International Social Attitudes:” The 10th BSA Report, ed. R. Jowell et al. Brookfield, Dartmouth.
- Thomas, David A., and Robin J. Ely.(1996), “Making Differences Matter: A New Paradigm for Managing Diversity”, *Harvard Business Review* 74(5): 79-90.
- Tomlinson, J.(1999), *Globalization and Culture*, 《세계화와 문화》, 김승현, 정영희 공역(2000), 나남출판.
- Tsui, Anne S., Terri D. Egan, and K. Xin.(1995), “Diversity in Organizations: Lessons from Demography Research”, In *Diversity in Organizations: New Perspectives from a Changing Workplace*, edited by M. Chemers, S. Okampo, and M. Costanzo, 191-21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Voydanoff, P(2005), “Social integration,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and job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666-679.

- Waldron, Jeremy(1992), "Minority cultures and the cosmopolitan alternative,"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25:3/4, 751-93.
- Waver, Ole *et al.*(1993), *Identity, Migration and the New Security Agenda in Europe*, London, Pinter.
- Williams, Katherine Y., and Charles A. O'Reilly III.(1998), "Demography and Diversity in Organizations: A Review of 40 Years of Research",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0: 77-140.
- Yamaguchi, I.(1998), "Coexistence of Cyberspace and the Real World under Tension: Some Reflections on the Premises of Cyberspace Law," Asia-Pacific Regional Expert Meeting on Legal Framework of Cyberspace, September.
- Young, Iris Marion(1989),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Ethics*, 99, 250-74.
- Young, Iris Marion(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oung, Iris Marion(1995), Together in difference: transforming the logic of group political conflict, in W. Kymlicka(ed.), *The Rights of Minority Cul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55-76.
- Young, Iris Marion(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 Zuckerman, Alan(1982), "New approaches to political cleavage", *Comparative Politics*, vol. 15:131~44.



<부록> 하부과제 연구요약

- I.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 파트너십 구축 방안 181
- II. 한국의 이념 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199
- III. 이념 갈등과 사회통합 :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207
- IV. 청소년과 부모세대 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 방안 213
- V.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223
- VI.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231

I .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 파트너십 구축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성별 관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갈등적인 관계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의 갈등은 남녀의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궁극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이러한 시각 차이의 결과는 성평등한 사회로의 진전을 늦추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낮춘다.

여성이 느끼는 가정에서의 불평등, 경제활동과 기회에서의 불평등, 사회적 인 인정의 부족 등은 첫째는 여성 자신의 불만과 고통으로 체감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으로 교육받은 인적자원의 낭비와 이혼율의 상승, 그리고 저출산 같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결국 남성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성별고정관념은 남성의 권력 장악이나 유지를 지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남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도 한다. 한 예로 남성들이 사회 활동만 하고 가정에서의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지 않는 것은 남성이 노년에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직장 생활만을 하다가 퇴직한 남성들은 가족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고 심지어 자신의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도 몰라서 비로소 돈 버는 것 외에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심각한 회의론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고정관념적 의식이나 관행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여성, 사회, 그리고 남성들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성평등 노력에 남성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1995년 유엔 여성회의의 ‘베이징 선언’은 회원 국가들에 성평등을 위한 모든 노력에 남성이 전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04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48회 세션의 중요 안건 중의 하나는 ‘성평등의 성취에 있어 남성과 소년의 역할’로 채택되었다. 이런 점에서 젠더 파트너십은 여성만을 위한, 여

성 만에 의한 성평등 노력에서 벗어나 남성을 적극적인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조류에 발맞추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기반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는 다른 나라보다 공고하며 남성의 의식적, 무의식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남성의 태도는 여성과의 갈등은 물론 남성의 내면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젠더 파트너십 구축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며 무엇보다 남성을 자유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평등을 위해 남성이 여성과 협력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젠더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젠더 파트너십은 간략하게 표현하면 성평등 확산을 위해 남성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이는 기존의 젠더 관계를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성별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성평등 행동으로 남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젠더 파트너십은 의식, 조직문화, 그리고 정책의 크게 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차원에서 각각 젠더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의식 차원의 젠더 파트너십

성별 고정관념은 오랜 가부장제의 역사와 연계되어 있고 단시일 내에 극복되기 어려운 것이다. 평등의식의 확산은 뒤집어 말하면 성별 고정관념(sex stereotype)을 완화시키고 해체하는 과정이다. 성별 고정관념은 한편으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편견’ 또는 ‘허위의식’이며 그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교정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법률이나 국가 정책이 바뀐다 하여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고하게 남아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실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광범위한 평등의식의 확산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젠더 파트너십이 남성의 참여를 통한 젠더관계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평등의식이 무엇에 의해 형성되는지 혹은 어떤 요인에 의해 성평등의식의 수용에 장애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 조직문화 차원의 젠더파트너십

성평등을 지향하는 젠더 파트너십은 기존의 자원 분배방식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분배체계를 개선하는데에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원분배 방식은 남성이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전담하는 식의 공사분리를 전제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은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경제구조와 교육환경의 변화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춘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관행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되려면 먼저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차원의 젠더 파트너십을 위해서 직장관행을 성평등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정책과 젠더 파트너십

여성을 지원하고 성평등을 제고하려는 정책의 결정과정 및 실행과정에서도 남성의 참여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남성들이 성평등 정책을 지지하고 또 참여하는 이유는 성평등이 단지 여성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보다 보편적으로 사회에 바람직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는 전반적으로 인권보호나 삶의 질 보장의 수준이 낮으며, 성평등이 제도화한 국가는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높은 사회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을 보는 시각에서의 남녀 차이도 주목하였다. 대다수 남성은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당하며 그로 인해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들은 그러한 정책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아직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성별 갈등을 촉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 파트너십 향상을 위해서 성평등 정책에 적대적인 남성들의 태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강화되는지를 분석하는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내용

세 차원에서의 젠더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는 젠더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세 차원을 다루었다. 첫 번째 차원인 젠더 파트너십과 의식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관한 이론적 논의, 즉 성별 지위, 합법성, 안정성과 같은 요인이 남성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성평등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데 관련된 요인들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다루었다. 둘째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승진기대 등은 조직성과나 노동성과와도 관련되어진다는 많은 선행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으며, 조직문화 요인이 직간접으로 조직효율성이 노동성과와 관련되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을 소개한다. 셋째, 양성평등정책의 수행에 있어 젠더 파트너십의 역할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식조사와 직장인 의식조사, 그리고 직장인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여 성평등의식 구체적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의 성평등의식 수준, 조직문화의 양성평등성, 그리고 정책에 있어 남녀 국민의 태도 등을 알아보았다. 우선 의식차원의 젠더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국민조사에서 나타난 남녀 성평등의식의 실태, 성별 차이, 성별관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남성의 성별정체성과 성평등의식 및 행동의도의 관계와 사회적 정체성이론과 합리적 행위모형의 통합모델의 검증을 다루었다. 그리고 조직문화차원의 젠더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조직에서의 조직문화와 직장관행 실태, 가족친화적 정책 현황을 다루고 이러한 변수들과 구성원들의 성평등의식, 조직성과 효율성, 구성원의 만족도, 그리고 일-가정갈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책차원의 젠더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태도와 이를 매개하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식조사와 직장인 조사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젠더 파트너십은 의식, 조직문화, 그리고 정책의 세 차원을 가지는데 이 중 조직문화는 직장인 대상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과 정책의 차원은 국민의식조사와 직장인 조사 모두를 통해 조사하고 조직문화는 직장인 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장인 대상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조직문화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사례를 얻고자 하였다. 각 연구방법을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젠더 파트너십의 개념, 젠더 파트너십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 성별 지위, 합법성, 안정성 요인이 남성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성평등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표출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직문화의 개념,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와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 양성평등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젠더 파트너십의 역할에 대한 이론을 고찰했다.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전국 만20세 이상의 남성,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지역별, 연령별, 층화 후 비례할당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단계로는 2005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통계의 만 20세 이상 인구를 성별, 시도별, 연령별로 정리한 후, 2단계로 16개 시도별로 인구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을 실시하였으며(남성 1,000명, 여성 500명을 분리하여 따로 할당), 3단계로 최종 조사지점에서 연령, 결혼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응답자를 선정했다. 1,2,3,단계를 통해 남성 1,016명, 여성 506명이 선정되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1:1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2006년 6월 21일~7월 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직장인 조사는 직장인과 공무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직장인조사는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참고로 하여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지역별 모집단을 고려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 업종을 대상으로 826명을 종사자 수 기준 업종별, 업종 종사자 규모, 지역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할당을 하였으며, 분석 시 최소 표본수를 고려하였다.

직장인 초점집단인터뷰(FGD)는 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직장문화의 특성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직장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직장인의 노동환경이나 여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포괄하기 위해 다양한 범주별로 기업체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1개 기업체별로 직장경력 2년 이상, 기혼자 중심, 다양한 부서, 평사원과 관리자를 포함하여 남녀 각각 8명을 기준으로 집단인터뷰를 실시했다. 집단 인터뷰는 2006년 8월 30일에서 9월 18일 사이에 대부분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 해당업체의 회의실에서 2시간 - 2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승진과 평가에서의 남녀차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체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활용 저해요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5. 연구결과

가. 성평등의식

1) 성평등의식의 실태

먼저 성별·나이·교육수준·결혼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성평등의식수준을 검토해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 기혼보다는 미혼인 사람, 그리고 나이가 젊은 층의 성평등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은 반면 농축산 분야 종사자들의 성평등 의식이 대체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젊고 교육을 많이 받은 미혼자일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을 것이라는 상식적 추론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 내부의 성별 의식 차이를 비교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20대 연령층, 미혼자,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집단 내부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의식 격차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크게 벌어져 있다. 달리 표현하면 성평등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 내부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의식 격차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평등의식과 사회적 정체성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또한 성별 정체성 형성에서 사회적 정체성이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였다. 즉 남성 혹은 여성 집단에의 소속감이나 동일시의 정도, 집단 지위의 정당성이나 합법성에 대한 지각, 그리고 성평등의식이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들은 남성집단의 지위를 높게 지각할수록, 남성의 우월한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남성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현재 지위가 여정보다 높고 또 남성의 높은 지위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믿을수록 개인적 정체성보다는 남성 집단에 소속된 구성

원으로서의 사회정체성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남성들은 남성의 지위를 여성보다 높게 인식하는가 혹은 낮게 인식하는가에 상관없이 성평등 의식이 낮았다. 반대로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응답자는 남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에 상관없이 성평등 의식은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젠더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성별 사회정체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관련된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셋째, 남성의 지위가 높으나 그 지위의 합법성은 낮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이 가장 성평등의식이 높았다. 현실적으로 남성의 지위가 높은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득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를 보면, 성평등의식이 낮은 남성들은 자신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누리고 있어야 우월한 지위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어 합법적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는 왜곡된 지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결과는 남성이 성별관계에서 누리는 높은 지위가 정당한 근거나 합법적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왜곡된 지각과 갈등을 바로잡고 해소하는 노력은 젠더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3) 성평등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련변수들에 대한 가설적인 모형을 검증한 결과 성별 지위, 지위 합법성, 지위 안정성 지각이 높을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또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높아지지만, 행동통제감이 낮고 주관적 규범지각이 높을수록 성평등 행동을 실천하려는 의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비추어보면 성평등 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남성으로 하여금 성평등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높이고, 성평등의 도덕적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또한 성평등 행동의 실천 의지

를 위축시키는 주변의 시선이나 가부장적 규범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조직문화

1) 직장인들의 성평등 의식

조직문화에서의 젠더파트너십 실태는 주로 직장인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직장인의 성평등 의식을 살펴보면 국민의식조사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남성 직장인의 성평등 의식은 여성 직장인들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기혼 직장인이 미혼 직장인보다 성평등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성평등 의식의 차이를 보면, 20-30대 직장인이 40-50대 직장인에 비해서 성평등 의식이 높았다. 나이가 젊거나 미혼인 직장인이 연령이 높거나 기혼인 직장인들에 비해서 성평등의식이 높았으나 이들 집단 내부에서 성평등 의식의 남녀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국민의식조사와 유사한 결과였다. 남성 직장인의 성평등 의식은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회사원과 공무원 간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직장 여성에 대한 태도와 평가

여성 직장인의 업무 수행이나 책임감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 간에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었다. 특히 남성 직장인들은 여성 상사나 동료에 '좋은 팀워크 형성', '능력', '리더십', '책임감' 등에서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여성상사와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 여성의 능력을 대체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상사와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았으며, 승진 불평등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내부귀인 경향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내부귀인 경향의 감소는 남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직장인들이 여성과의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거나 여성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경험들이 증가할 때 여성에 대한 태도나 성평등 의식이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조직문화와 조직 효율성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관행의 확립이 조직 전체의 효율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조사에서는 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응답자의 직무만족이나 이직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물론 직무만족도나 이직의도가 조직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높은 만족도는 작업 의욕을 높여 성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 직장인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정보에 접근성이 높을 때, 잡무처리에 시달리지 않고 명확한 자기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조직문화와 직장관행의 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친화 정책이 잘 실행되는 조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조직문화 변수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여성 직장인의 이직 의도를 낮추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였다. 남성에게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 조직문화가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직무만족도는 높고 이직 의도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는 남녀 직장인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 의도는 감소시킴으로써 조직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일-가족 양립

조직문화에서 젠더파트너십이 확립되려면 직장인들이 단지 회사에만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일과 가족의 양립, 혹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지원하는 제도와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직장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등한 직장문화가 일-가족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여성 직장인의 경우 가족친화적 정책은 가족에 대한 의무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느끼게 되는 가족-직장 갈등(FIW)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 가족 친화적 정책의 효과는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직장 때문에 가족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갈등인 직장-가족 갈등(WIF)과 반대 방향의 가족-직장(FIW) 갈등을 모두 완화시켜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줄이는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실제로 남녀 직장인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젠더 파트너십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직장인 개인의 일-가정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측면에서도 유용한 제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태도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즉 여성의 진출이 낮은 분야에서 채용이나 승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여성을 한시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에 대해 여성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남성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남성들은 적극적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로 절차 혹은 분배의 공정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남성들의 반대가 실상은 성평등 의식이 낮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어진 결과인가 아니면 성평등 의식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정성 문제제기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매개 분석 결과는 공정성을 들어 적극적 조치를 문제 삼는 남성의 태도 이면에 실상 편견적 태도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정책에 대한 젠더파트너십 형성에서도 남성의 성평등 의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젠더 파트너십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본 연구는 젠더 파트너십 구축에 시사점을 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의식의 차원에서 남성의 성평등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 조직문화 차원에서 평등한 남녀 관계와 일-가족 양립에 기여하는 조건들, 그리고 정책의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매개 변수들을 찾아내었다. 각 차원별로 정책 제언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의식 차원의 젠더 파트너십을 위한 정책 제언

의식 차원에서 젠더 파트너십 형성은 남녀의 성평등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남성은 성평등의식이 여성보다 낮을 뿐 아니라 성별집단정체성,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남녀 지위 고저, 합법성, 안정성)의 인식이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별집단정체성을 낮추고 남녀 지위의 합법성에 동의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식의 차원에서는 교육과 미디어,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1) 가족 문화에 대한 공적 관심 제고

본 연구 결과의 중요한 발견은 성별 역할 의식을 중재하는 것이 주적 규범,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주관적 규범은 가족들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친구, 동료의 의견, 나아가 사회적 담론 — 미디어, 교육 — 일수도 있다. 특히 교육과 미디어가 성평등의식과 규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직도 지대하다. 따라서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가족문화 양성평등성 제고는 효율적인 젠더 파트너십 구축방안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미디어의 양성평등성 제고의 새로운 전략
- 양성평등 가족문화 캠페인

2) 젠더파트너십의 정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젠더 파트너십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교육 환경을 꼽을 수 있다. 성 역할에 대한 습득과 사회화는 일차적으로 가

정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제도화된 공교육 환경이 성별 고정관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보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도화된 교육에 접하는 연령은 앞당겨지고 있으며 제도 교육에 노출되는 시기도 더 길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교육환경이 초기 성역할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교육과 관련된 젠더파트너십 확산 방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교육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성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관행 및 내용들을 개선하는 접근이다. 또 다른 접근은 젠더파트너십을 습득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교육 콘텐츠 모니터링 젠더파트너십 향상을 교육과정에 반영
- 젠더파트너십 향상을 교육과정에 반영
- 교사 양성평등 교육
- 보육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젠더파트너십 교육 반영

3) 남성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확대

남성들이 젠더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성평등의식이 우선 필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평가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사결과에서 처럼 다른 사람들이 양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주관적 규범의 압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른 남성들이 성평등한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혹은 이 행동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한 행동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남성들의 여러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아버지들이 학부모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이나 휴일에 모임을 가진다든가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예회, 운동회나 수업참관 등 모든 행사에 아버지

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기관이나 문화교육 기관 등에도 남성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남성 참여 확대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그리고 교육부 등이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적,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과 함께 직장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온 남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남성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범 정부 차원에서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직문화 차원의 젠더 파트너십을 위한 정책 제언

기업과 조직은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직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공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협동적인 과업수행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곳이다. 이는 즉 젠더 파트너십이 곧 생산성과 조직의 효율성과 결부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직이든 기업이든 조직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은 조직 효율성에 치명적이며, 목표달성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기업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젠더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 할 수 있고, 이곳에서의 젠더 파트너십의 긍정적 효과는 가정의 영역에까지 파급되어질 수 있고 또한 그 역으로 순환되어지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1) 적극적 조치 정책 특성에 맞는 추진체계 구축

남성들은 적극적 조치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정성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낮은 성평등 의식의 결과임이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성들에게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것과 더불어 남성들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직장 여성들이 적극적 조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도입은 여성에게 분명 유리한 제도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여성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취감이 특혜 논의로 인해 훼손

된다고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인 소수자의 제도 도입반대는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추진 과정에서의 부주의에 기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적극적 조치로 승진한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와 평가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평가에 여성 참여 확대

현재 우리 사회의 기업이나 공적 조직은 남성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체 인원의 성비에서 뿐만 아니라 관리직, 경영진의 비율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실태는 기존의 성별 지위와 합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성별 불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사평가의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이 보는 능력은 다른 것일 수 있으며, 평가의 모든 결정권이 어느 한 성에 한정되는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선발면접 등에서 여성임원이 반드시 포함되거나, 인사평가 시 어느 한 성이 일정 비율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CEO 및 임원진의 성평등의식 교육기회의 확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결과 모두 일관되게 직장인들은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의 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CEO의 오픈 마인드”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가족친화적인 제도 도입의 결정권뿐만 아니라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좌우하는 것도 CEO와 기업의 임원진이라고 할 수 있다. CEO나 기업 임원진은 너무 바빠서 양성평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남녀 간의 갈등이 조직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기업인 대상 교육이나 경제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경영진 세미나 등에 다양한 성평등의식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과정이나 경영대학원 등의 CEO 과정에 필수교육과정으로 넣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들 교육과정에는 젠더파트너십 구축과 가족친화적인 기업사례를 비롯한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가 생산성과 이직을 감소를 가져오는 국내외 사례를 접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4) 노조와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여성에 대한 인정과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핵심적 규범으로 수용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성평등이 개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평등 문화 조성은 노사 한쪽에서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노사위원회나 노동조합 등 노사간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여 성평등을 노사협력의 중요한 이슈로 채택하는 주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조와 경영진 내에서 성평등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남녀 직장인들이 스스로의 의식을 개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5)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의 다양화 및 활용성 제고

이 연구에서 가족친화정책이 여성들의 가족-일 갈등을 완화시켜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조절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과정에서 남성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내용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었다. 다양한 탄력적 근무제도들을 개발하고, 이들을 선택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성육아휴직제도의 부진한 활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예컨대 스트레스, 정서문제, 결혼 및 가족문제에서부터 노인보호, 한부모 가족, 이혼가족, 학업정보지원,

위기관련 스트레스이완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회사가 지원해 주는 직장인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6) 성희롱 방지교육의 젠더 파트너십 교육으로의 전환 및 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상당수 기업들이 사내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방지교육은 자칫 전시용으로 흐르기 쉽고,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의 소극적 예방교육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성희롱에 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내용상 자칫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대립적 입장이 과도하게 부각될 수 있으며 또 선정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이 강조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가하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젠더 파트너십교육을 실시하고 그 한 부분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초점집단인터뷰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참여자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회사생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무엇이 성희롱이고 무엇이 성희롱이 아닌지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무엇이 힘든지, 또 남성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동료로써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사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젠더파트너십 교육은 경험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오프라인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 제도 차원의 젠더 파트너십을 위한 정책제언

현재 도입되어 있는 고용평등관련 법,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다루는 법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률들은 젠더 파트너십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기존의 법률들은 평등과 참여라는 당위적 목표를 선언적으로 제시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평등한 젠더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들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차원에서 젠더 파트너십 필요한데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상생활이나 공적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젠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실상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성평등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남녀 사이에 인식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는 것이 성평등한 정책 구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젠더 파트너십 형성 방안이 필요하다.

1)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법적 정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족친화적 경영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녀평등 고용, 가족친화 경영과 더불어 젠더 파트너십의 형성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젠더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을 유발할 만한 법적 강제력이나 유인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기업들이 여성고용 현황을 제출하게 하여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성고용이 저조한 기업에게는 평등고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의 방향은 적절한 것이지만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젠더 파트너십은 고용평등, 가족친화 경영,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자체적으로 젠더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현황 진단과 계획 수립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의사결정직 대상의 교육과 워크숍 체계화

제도 개선이나 법률의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행위자들의 인식 전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고위 공직자 및 의원들은 정규 교육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대상이다. 의사결정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개방적 토론을 유도하는 워크숍 형식 등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의원의 경우 NGO나 유권자들과의 토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젠더 파트너십과 관련되는 정책 의제들을 모아서 전문가-NGO/유권자-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구 내지 지자체 수준에서 시민단체 및 유권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II . 한국의 이념 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이념은 중요한 사회적 균열(cleavage)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갈등과 노사갈등 못지않게 이념갈등이 이제 현실적인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념갈등은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억압되어 왔던 다양한 이념적 지향들이 민주화의 과정에서 분출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한국 사회가 짧은 시간동안 압축적·돌진적 방식으로 수행한 근대화 및 탈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과 모순들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이념 논쟁의 확대는 과거에 억압되었던 것의 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불필요하게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경직되고 소모적인 이념갈등에서 벗어나, 시민의식·시민참여의 활성화 및 정치세력의 미래지향적 정책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념적 개방성과 합리적 공론장 형성이 현단계 한국 사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념갈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의 전개방향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념의 격차 및 양극화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을 위해서는 국민의 이념적 성향의 분포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이념적 다양성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특성이며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양극화와 대립은 사회발전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 이념 성향의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념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한편, 이념성향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 의식에서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념적 격차 및 갈등의 해소 방안 마련의 기본적 방향을 가늠하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이념갈등과 실제 국민의 이념성향 사이에 차이는 없는지 분석하여 이념갈등을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공론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념갈등의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대립의 양상과 대립의 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들을 밝히고 소모적 논쟁이 아닌 생산적이고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자료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설문조사 자료이고, 또 하나는 언론에 대한 내용분석 자료이다.

설문조사는 2006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에 걸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에서 64세의 남녀 1200명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실사는 한국갤럽에서 담당하였으며 면접조사의 대상은 다단계 층화표집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다. 설문문항은 이념적도 지수 구성을 위한 질문들과, 그밖에 사회, 경제,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들은 주로 대외개방성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 극단주의에 대한 포용(tolerance), 젠더와 관련된 쟁점들이다. 아울러 설문에는 탈물질주의 가치, 각종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참여를 묻는 질문도 포함된다. 이러한 질문들 중에서 특별히 변수의 계산과정을 통해서 분석에 이용된 개념들은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등이다.

내용분석 자료로는 주요 중앙 일간지들의 칼럼을 사용하였다. 중앙 일간지의 칼럼들은 일반 기사와는 달리 주요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분명한 찬반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이념적 분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일간지가 직접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는 사실과는 다르게 각 신문사들이 한 쟁점에 대해 지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이념적 태도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이념적 갈등을 반영하는 쟁점으로는 이라크 파병 논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고교 평준화 존폐 논쟁,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3. 이념성향의 측정

이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으로 나뉜다.

주관적 방법은 응답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 혹은 진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평가해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방법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측정의 신뢰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단 개인마다 이념성향을 평가하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관적 편향이 반영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여러 문항들에 대해 응답한 패턴을 기초로 해서 이념성향에 대한 다문항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개인의 이념적 성향은 정치, 경제의 두 차원으로 크게 나누었다. 정치적 차원은 주로 안보와 남북관계, 질서 및 안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체제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 사회의 기본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경우 보수적인 것으로, 북한에 대해 포용적 입장에서 이념과 체제를 떠나 통일을 강조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진보적인 것으로 보았다. 경제적 차원은 사회적 형평과 시장질서, 분배와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경제성장 및 소유권보호를 중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개인적 차이의 결과로 보는 경우를 보수적인 것으로, 분배 및 복지 증진을 중요시하고 불평등을 잘못된 제도의 탓으로 보는 경우를 진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항 척도를 이용한 이념적 성향의 측정과 함께 본 조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자기 평가도 실시하였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함으로써 본 조사는 두 방법을 통해 얻은 이념적 성향에 대한 측정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대체로 객관적 이념성향과 주관적 이념성향은 유사한 방향으로 분포되어 공변(covary)한다. 하지만 완벽한 일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주대각선 상에 위치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진보에 비해서 중도, 중도에 비해서 보수의 경우에 객관적 이념성향과 주관적 이념성향 사이에 일치하는 정도가 더 높다.

4. 이념성향의 결정요인

이변량 분석을 통해 볼 때,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 이념성향

의 분포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수와 진보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중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보다 이념성향 면에서 양극화된 경향이 높다.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가장 보수의 비중이 높은 연령층은 50대 이상인 반면, 진보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로 역시 50대 이상 연령층의 두 배가 넘는 24.8%가 진보적 이념성향을 보인다. 한편 20대에서는 진보의 이념성향 비중도 높지만 중도의 성향이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초중등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가운데 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초중등졸 집단이다. 전문대졸이 가장 중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대졸의 경우 진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초중등졸에 비해서 두 배가 넘게 진보의 이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보수로부터 멀어지고 진보에 가까워진다는 교육의 진보적 효과를 확인시켜준다. 직업집단별로 비교해 볼 때, 보수 이념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블루칼라와 자영업이며, 진보의 이념을 가장 많이 가진 집단은 학생과 화이트칼라이다. 소득별로는 유의미한 이념성향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변량분석을 통해 이념성향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탐색한 결과, 연령과 대졸 이상의 학력, 그리고 화이트칼라 직업이 이념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 이상일수록 그리고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질수록 이념성향이 보다 진보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념성향의 차이를 보수, 중도, 진보의 각 집단에 속할 확률로 나누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도에 비해서 보수에 속할 확률은 연령이 높고, 남성일수록, 그리고 숙련직의 직업을 가질수록 높았으며, 중도에 비해서 진보에 속할 확률은 남성일수록 대졸 학력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념성향 격차의 결과

이념성향별로 한국 사회의 현안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한 결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사용 여부, 기본권으로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존중 여부, 재산 불평등과 관련하여 상속제도의 폐지에 대한 찬성 여부, 세금을 징수해서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여부, 근로자들이 기업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과 근로자 파업을 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여부,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 등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의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참여의 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사회적 신뢰의 면에서는 일반적 신뢰나 제도에 대한 신뢰의 면 모두 이념성향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 사회적 참여에서는 보수성향이 보다 연고주의적 조직에, 진보 성향이 보다 시민사회적 조직에 참여하는 경향은 발견할 수 있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극단주의적 입장의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에서 모든 종류의 집회에 대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이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보수적 성향을 지닌 응답자들은 모든 집단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젠더 역할과 관련해서는 대를 잇기 위한 남아의 필요성, 취직 시 남성 우대에 대한 찬성 여부, 그리고 남녀 간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 보수와 진보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적 이념성향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보적 이념성향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태도나 개방성의 면에서도 진보적 이념성향이 보수적 이념성향에 비해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언론에 반영된 이념갈등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존폐, 고교평준화, 부동산 정책 등 한국 사회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내용분석한 뒤, 주로 사용된 용어들을 중심으로 의미의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된 발견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보안법과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비교적 신문사들 간 이념의 폭이 분류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나타난 반면, 이라크 파병 및 부동산 정책 논란은 언론사들 간의 위치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개념들도 혼재되어 있어 논점이 상당히 미분화되어 이념적 갈등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사별로 이념적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쟁점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로 특히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등 진보적 입장을 가진 신문들의 클러스터가 가시적으로 관찰된다. 고교 평준화는 국가보안법 문제만큼 일관적인 이념적 스펙트럼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겨레와 나머지 중도, 보수적 신문들로 클러스터를 구분할 수 있다. 이념 분화가 미비했던 부동산 정책과 이라크 파병은 두 이념지도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실제로 칼럼들이 참여한 대립을 보인다고 보다 정책의 효과에 대한 입장과 제언을 밝히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이라크 파병의 경우 각 신문별, 칼럼별로 찬반의 입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이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거나, 개념에 대한 공통의 이해 기반이 없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미분화된 이념 분포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각 이슈마다 신문들이 보이는 논쟁적 성격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념 지도에서 대체로 주요 단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문의 경우 그 주제에 대해 다른 칼럼의 수가 적거나 다양한 내용의 칼럼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경우 이 신문은 해당 쟁점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로는 아예 일부 논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신문들도 있다. 경제신문들이 그런 경우인데, 이들은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반면,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활발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네 개의 쟁점들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이념 분화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발견되는 특징으로 보수적 성향의 신문들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 신문들은 그 위치가 잘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동아와 같은 보수적 색채의 신문들의 경우 신문의 성향과는 다른 비교적 중도 혹은 진보적 입장을 가진 칼럼들도 종종 게재하는 반면, 한겨레, 경향과 같은 진보적 성향의 신문들에서는 네 가지 쟁점 공히 보수적 입장을 칼럼을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진보적 지식인들 및 언론사들의 연대가 보수적인 쪽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끝으로, 시민사회에서의 이념적 분화와 언론의 이념적 분화 사이의 차이가 쟁점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라크 파병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언론이 시민사회의 이념적 다양성을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고교 평준화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다른 이념적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평준화의 경우 일반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진보적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도 상당했는데 반해, 언론은 대체로 중도-보수적 입장에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과대 반영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 역시 시민사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반감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이념적 논조는 대체로 시장주의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이는 정치적 쟁점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쟁점의 경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및 지식인들이 기고하는 언론 칼럼과 시민사회의 설문조사 결과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이념 갈등과 사회 통합: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1. 서 론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적 목표이며, 그만큼 모든 나라는 다양한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한 갈등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관리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고 극심한 분열을 겪는다.

이 연구의 대상인 영국과 독일이 우리와 다른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경쟁하는 속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혼란이나 분열로 이어지지 않고 체제 내에서 효과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이 바로 ‘이념적 갈등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갈등 해소와 통합을 이끄는 정치적·제도적 특성을 찾고자 했다. 이 연구는 비교정치적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 사례 선정의 기준은 이념적 차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극심했지만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간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갈등 관리가 이루어졌는가이다.

이 연구에서는 좌-우로 대표되는 이념 갈등이 핵심적인 관심의 대상이지만, 성 갈등과 인종 및 외국인 문제뿐 아니라 통독 이후의 새로운 갈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념 갈등의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각 사회의 정치적 대응력에 대해서도 관심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2. 영국의 이념 갈등과 사회 통합

영국 정치에서 이념 갈등의 전개 및 해결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보수당과 노동

당 같은 주요 정당들이 영국 사회 내에서 표출되어 온 이념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표해 왔다. 그러나 정당의 적극적인 개입은 사회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거나 확대, 심화시키지 않고 제도권 정치 속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해소해’ 왔다.

정당의 이런 역할이 가능한 것은 영국의 정당이 이념 편향적이지 않고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이다. 영국 정당 정치에서 ‘이념적’이라는 것은 도그마와 비관용 혹은 분열적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보수당에게 이념적이라는 것은 전통과 상식 같이 보수당이 중시하는 가치보다 추상적인 원칙과 원리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당 역시 사회정의를 말하지만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정치적 급진주의나 정치적 폭력 없이 정치적 절차와 제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이 영국 정치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1960년대의 사민주의 합의정치 시기에 보수당은 이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해 온 복지국가의 기본 기초를 바꾸지 않았으며, 1990년대 이후 노동당도 그 이전 보수당이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그대로 수용해 왔다. 이처럼 영국의 정당들은 매우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버즈켈리즘으로 대표되는 좌파 중심의 합의적 모델이나 대처리즘으로 요약되는 우파 중심의 합의 모델 등 좌우파를 대표하면서도 배타적이거나 지나치게 이념에 경도되지 않은 형태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왔다. 갈등의 제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계급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이나 갈등은 상당한 정도로 제도화된 수준에서 해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보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념지향이 강했던 노동당의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에 따른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세계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좌우간의 이념적 대립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적어도 상당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에 의해 고안되고 블레어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제3의 길(the

Third Way)'이라는 새로운 이념적 타협으로 이끈 것이다. 곧, 시장과 국가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집단주의나 개인주의보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간의 파트너십을 중시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이 등장하는 새로운 이념 갈등에 대해서 얼마나 포용력을 갖는 정당 정치를 구현해 낼 수 있는가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 인종 문제, 성 이슈에 대해서는 계급 갈등만큼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정당이 이러한 이슈들을 반영하고 정치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 이슈나, 세계화 대 반세계화의 갈등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차원의 정치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최근 들어 시위와 같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기도 하다. 계급 갈등이 악화되고 이념이 대표하는 차원이 다양해지면서 그만큼 정당 정치가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 정치가 내포하는 좌-우의 이념적 대립은 여전히 영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갈등을 대표하고 있다. 이 갈등이 주요 정당을 통해 적절하게 정치권에 대표되고 있고, 이념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해 온 정당 정치를 통해 심화나 확산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 독일의 이념 갈등과 사회 통합

제2차 대전 종전 후 독일사회의 전통적인 이념 갈등은 더 이상 체제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독일사민주의가 라팔적 국가의존성을 강하게 띤 만큼 체제이데올로기로부터 멀어져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계기는 전후복구를 위한 케인즈주의적 동의구조였다.

사민주의적 합의 정치로 불리는 이러한 동의구조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복지국가를 구축함으로써, 사민당과 기민/기사연이라는

양대 정당을 통해 체제 이데올로기적 계급 갈등을 직업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사회계층적 의회정치 중심의 '새로운' 이념 갈등으로 완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경제 위기를 계기로 점차 벌어지기 시작한 양대 정당의 정책적 간극은 케인즈주의적 동의구조를 깨트렸고, 1980년대에 종전 이후 전통적 이념 갈등을 다시 심화시켰다. 물론 이 이념 갈등은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합의 정치에 의해 또다시 완화되는 과정을 밟는다. 그렇지만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합의 정치는 기존의 사민주의적 합의 정치의 성과물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회적 약자들은 양대 정당과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투표참여율의 증가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통일을 전후해서는 '외국인적대'라는 실질적인 사회갈등으로서 더욱 심각해졌다. 그러나 전후 독일의 외국인적대는 비유럽 지역의 외국인 비율이 대단히 낮은 상태에서 전형적인 인종 갈등이나 나치의 인종주의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1970년대의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러한 현상은 통일 이후 동독인들의 노동시장 내 경쟁에서 더욱 심각하게 부상하였다.

196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성 이슈는 70년대의 성장기를 지나 80년대에는 정치문제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후 여권신장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중에게 가까이 갈수록 성 이슈는 사회문제화나 의식화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정당 구조상 지도부나 적극적 활동가 차원에서는 성 이슈가 기존의 좌우 이념 갈등과 결합해 새로운 좌우 구도를 만들고 있지만, 대중의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좌우 이념 갈등보다도 완화된 상태에서 더욱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또한 정치적 이해대변과 사회경제적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나 정치적 이해대변과 사회경제적 이해대변의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독일은 통일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변화를 경험했고, 이를 통해 또 하

나의 새로운 갈등의 축을 형성했다. 무엇보다 흡수통일 방식이 동독지역의 이해대변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에 따라 구동독지역의 정당정치지형은 기민/기사연-사민당이라는 서독의 구도로 대부분 수렴해 가는 가운데 민사당에 대한 지지율의 상승과 투표참여율의 저조함으로 나타났다. 신탁청에 의한 서독 자본관계의 일방적 이식과 탈산업화를 초래한 자본의 투자로 인해 구동독 지역 경제는 구서독지역 경제에 대한 종속 및 대체경제의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실업률 증가의 해결과 임금수준 격차의 해소도 요원한 상태로 남아 있다. 구서독의 특징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순기능이 자본관계의 본질적 작동방식을 완화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갈등이 심화 되어 구동독지역의 새로운 지역주의로 전화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전통적 이념 갈등은 두 국가에서 모두 양당의 합의 정치에 의해 크게 완화되었다. 제2차 대전 이후 196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지는 사민주의적 합의가 그 첫 번째이고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합의가 그 두 번째이다. 이러한 합의 정치와 그에 따른 이념갈등의 완화는 두 국가에서 모두 양대 정당의 실용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영국과 1983년 이후 독일에서 사정은 달라졌다. 보수당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민영화와 탈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치가 가속화된 반면,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민당은 여전히 케인즈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 시기에 양국의 이념적 간격은 재차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간극이 다시 좁아진 것은 신자유주의적 합의 정치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적 합의 정치는 사민주의적 합의정치와는 사뭇 다른 사회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합의정치라는 형식에서는 동일하지만, 사민주의적 합의정치가 이룩한 사회안정망들을 축소함으로써 내용면에서는 충돌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통일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독일의 경우는 기존의 이념 갈등이 완화되는 대신 동서독 간 사회경제적 통합의 지연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새롭게 증착되는 현상을 보였다.

인종 혹은 외국인 문제와 성 이슈의 정치적 대변은 정당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계급 갈등이 악화되고 이념이 대표하는 차원이 다양해지면서 정당 정치가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독일의 외국인 문제는 주로 노동시장의 경쟁이라는 사회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유럽인들과의 마찰은 미미한 반면, 영국의 외국인 문제는 다양한 인종들의 유입에 따라 인종 갈등으로 비화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에서 모두 양대 정당들의 외국인 및 인종 문제 대응은 계급 문제와 달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 외국인들의 정치적 이해대변 기회는 매우 적은 상태이다.

성 이슈에서도 두 국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영국은 단순다수제라는 선거제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성의 정치무대 진출이 크게 제약되어 있었던 반면, 독일은 비례대표제에 의한 좌파 소수정당들의 의회진출로 여성의 정치적 대변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이해대변의 문제는 두 국가에서 모두 여전히 구조적 성격을 띤 채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계급갈등의 심화와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및 독일과 같은 합의 정치의 틀이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통합의 정치는 발전하지 못했다. 사회계급들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대변하는 정치적 틀을 형성하며 새로운 사회문제를 직시하고 그 대안적 해결을 수용하는 개방적 통합 정치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합의정치의 도입과 관련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민주의적 합의정치조차 경험한 적이 없다. 곧 사민주의적 합의정치를 통한 사회안정망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적 합의정치를 도입할 때 자칫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안정망의 효율화가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정을 극대화함으로써 영국과 독일이 경험한 정당·정치 혐오증만 가속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합의정치는 비효율적 측면을 제거하되 사회안전망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합적 합의정치여야 할 것이다.

IV. 청소년과 부모세대 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 방안

1. 연구 목적

최근 인터넷의 발전 등 새로운 사회양상의 변화는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적 다원화로 나아가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만한 다양한 문화적 이해와 노력이 부족하다.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무한한 능력과 가변성을 가진 유연한 존재이다.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들은 보다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통합주제 중 청소년의 문화적 갈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그 원인과 현상을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 문화갈등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을 건강한 시민세대로 통합해 내기 위한 세대 간 문화소통 증진방안을 탐구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세대 간 문화갈등과 그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갈등의 양상은 어떠한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연구에서 밝혀야 할 주요 내용이다.

둘째, 세대 간 문화갈등을 놓고 부모세대와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세대 간에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청소년의 모습이다. 청소년과 부모세대가 겪는 문화적 갈등의 주요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만큼 갈등 해결방안도 찾아내기 쉽다.

셋째, 오늘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영향으로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측면에서 전통적인 부모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현대 청소년들이 부모세대와 어떤 면에서 의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보고 부모 세대와의 가장 큰 의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힌다.

넷째, 국민통합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거시적 안목의 국가정책연구에서 청소년이 국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해 주어야 할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지 말고 국가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단계인 가정에서 부모 세대와의 문화적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 결과

가. 청소년과 성인세대의 문화 갈등

청소년 집단은 성인보다 진보지향적인 가족 역할행동을 기대하는 정도가 강하였고, 성인 집단은 청소년보다 전통지향적인 가족 역할행동을 기대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가족 역할행동에 대한 기대의 차이는 가족 구성원간의 세대 간 갈등을 일상생활에서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혼전 성관계나 결혼에 관한 의식에 있어 세대차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청소년 집단이 성인집단보다 더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적 결혼상대의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재미있는 사람이나 멋있는 외모에 대한 집착이 높고, 성인은 청소년보다 경제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성별 선호도는 성인집단이 전통적인 아들선호사상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은 오히려 아들보다 딸을 더욱 선호하는 반대 경향을 보였다.

생활목표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개인중심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반면, 성인들은 청소년에 비해 보다 집단 중심적이고 사회지향적인 사고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가정화목을 가장 소중한 생활목표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 청소년들이 사회변동에 따라 많은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지만 효도나 화목한 가정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덕목으로 수용하고 있다.

희망하는 직업의 차이를 보면,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안정된 전문직을 강하게 선호하였으나, 경제력이 있는 직업이나 인기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았다. 즉 성인집단은 희망하는 직업에서 보다 보수적인 반면 청소년은 보다 개방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견해는 전반적으로 '자유경제주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어야한다'는 반응이 반수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청소년은 어떤 체제이든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을 가장 적게 하는 반면, 성인은 통일하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을 가장 적게 하는 차이가 있었다. 즉 청소년 세대가 성인보다 훨씬 통일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적으며, 오히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더 나아가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경우가 더 많았다.

컴퓨터 사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성인보다 청소년이 컴퓨터 사용의 필요성

과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에서도 청소년 세대가 성인보다 의미 있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세대가 성인들보다 훨씬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감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세대집단별로 컴퓨터 활용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컴퓨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채팅, 및 자료 검색 등을 통해 성인들보다 컴퓨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기의 활용 면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은 핸드폰을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가,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하고, MP3 등 기기를 활용하는 등 훨씬 정보기기를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에서의 세대 차이를 보면,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쇼 오락 코미디 등의 프로그램을 훨씬 선호하였으며, 이에 비해 성인들은 청소년보다 시사토론이나 뉴스를 더욱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호하는 음악에서의 세대 차이를 분석한 결과도 청소년들은 랩 힙합 메탈 록과 같은 음악을 현저하게 좋아하였으나 성인들은 매우 기피하였고, 오히려 성인집단에서는 트로트나 국악 및 민요와 같은 음악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었으나 청소년은 매우 관심이 없었다.

취향에서 세대 차이를 보면 청소년은 성인보다도 머리를 염색한다든가, 남자가 귀걸이 한다든가, 연예인처럼 옷을 입는 것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성인은 청소년보다 단정한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외모를 가꾸는 것과 같이 취향과 관련된 측면에서 세대 간에 매우 큰 의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세대간 문화적 공통점

학업계속에 대한 기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반응율을 비교해 볼 때 성인 집단이 청소년 집단보다 박사 졸업이나 석사 졸

업에 대한 반응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내에서의 반응패턴은 동일하였다. 즉 대졸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박사 졸업이 4정도에 해당되며, 그 다음으로 석사 졸업이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박사학위 졸업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21%나 기대하고 있고, 부모들은 29.8%나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 부모들 10명 중 3명이 자기 자녀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모두 98% 이상이 최소한 대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그 이상의 학력을 바라고 있어 한국 사람들의 학업포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다.

세대차이 지각 면에서는 학업문제로 인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를 지각하는 경우가 생활이나 여가 및 기호로 인해 세대 차이를 지각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도시든 농어촌이든 관계없이 한국의 가정에서 학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부모나 자녀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이로 인해 때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업성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집중된 관심을 갖는 정도는 도시든 농어촌이든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 사회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갖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한 생활의 목표이고 가치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가정 화목에 대한 강한 집착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이 생활목표의식으로서 가정의 화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도시지역이든 농어촌 지역이든 관계없이 일치하였다.

가정의 화목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보면, 삶의 질 인식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즉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정의 화목과 관련하여 행복감을 더 많이 지각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정의 화목, 원만한 인간관계, 자기조절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인다.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에서 관계효능감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

기주장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사회성효능감의 순서였으며, 스트레스대처 효능감과 정치효능감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의 다른 하위영역보다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청소년 집단에서만 이 아니라 성인에서도 동일한 패턴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집단에서도 다른 어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보다 관계효능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또 하위변인 분석결과 한국인에게 원만한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 준다

자녀를 갖는 이유를 보면 심리적 가치의 평균이 가장 높고,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계적 가치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 아들을 갖고 싶다는 것, 자녀가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를 갖는 이유로 현재 한국 사람들은 심리적 가치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심리적 가치에 대한 집착은 성인보다는 청소년 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였을 때, 사회적 제약이나 외부적 제약보다는 개인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밝혀졌다.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인들은 자녀수를 3명으로 응답한 경우가 더 많고, 청소년들은 자녀수를 2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많았다. 젊은 세대들일수록 더 적은 자녀수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성인 집단 모두 이상적인 자녀의 수를 2명으로 인식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정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만족도는 낮았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 및 청소년과 성인 세대집단, 남자와 여자 성별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나타났다. 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정치·언론기관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과 성인, 남녀 모두에서 낮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한국 사람들은 사회의 공식적인 기관을 신뢰하지 않으며, 국회나 정당과 같이 정치와 관련된 기관이나 언론 관련 기관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매우 강하였다.

평소에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안정과 관련된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의 행복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과 성인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관계없이 한국 사회의 불안정이 개인 삶의 질을 위협한다고 세대 공통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사람들이 가정의 화목과 같은 가족중심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행복감을 느낌으로써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고 있으나, 한국 사회가 불안정하다고 지각함으로써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다. 세대 간 문화갈등 해소방안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별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여러 하위변인들 중에 관계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왔음은 이미 언급한 바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대처 효능감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도시지역 사람이든 농어촌지역 사람이든 일관성 있게 나타나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효능감이 매우 낮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세대별로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의 차이를 보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스트레스대처 효능감도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극복 효능감도 낮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대처 효능감만이 아니라 어려움 극복도 성인들보다 잘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인이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대처효능감이 나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차이로 인해 야기된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으로는 자기조절 대처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적극적 해결, 사회적 지원 추구의 순서였으며, 회피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결국 세대 간 갈등도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를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있는가의 맥락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조절 대처만이 아니라 적극적 해결 대처 및 사회적 지원 추구의 대처도 많이 활용하는 반면 회피 대처방식은 가장 적게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건강한 대처방식을 많이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세대차로 인해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심리적 갈등보다도 관계적 갈등을 적게 느낀다는 것은 한국문화가 관계문화이기 때문에, 세대 간에 갈등적 상황이 야기되어서 심리적으로는 갈등이 심화되어도 관계는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관계문화가 때로는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한국의 관계문화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면 갈등을 조정하고 성취를 확대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의 문화적 토양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시키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산시키느냐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역량에 달려 있는 문제라 하겠다.

4. 정책제언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세대와의 사이에서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에 관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더해 세대 상호간 문화소통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에 더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갈등해결 대처방식 확산 및 갈등해결 교육시설 확충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 차이를 포함한 갈등 및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대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는 한계에 주목하고 보다 새로운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보면, 자기조절 대처만이 아니라 적극적 해결 대처 및 사회적 지원 추구의 대처도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회피 대처방식은 가장 적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건강한 대처방식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자기조절 방식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대처방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피하는 대처방식은 보다 축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세대갈등의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우선 가정에서의 청소년 자녀와 부모 세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가족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갈등상황에 처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 내 갈등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청소년 문화갈등 해결 프로그램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러한 기관에서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 대처방식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문화갈등 해결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대책 수립

청소년들의 문화갈등 해결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건강한 청소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과교육 일변도의 현 학교교육 정책을 조화로운 인간발달을 꾀하는 전인교육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교육 당국과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다양한 형태의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자연권 수련시설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되도록 가까운 거리의 생활권 수련시설에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교육과의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 지역별·성별에 따른 차이 극복 노력의 요구

지역별 정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치만족도가 매우 낮았지만, 특별히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더욱 낮은 정치만족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 희망하는 직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도시지역 사람들이 농어촌지역 사람들보다 경제력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의 주변 상황이 경제활동 면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자극적인 환경에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주민들이 경제력에 대한 전망을 더 강렬하게 나타내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직업에 대한 열망도 더욱 높은 것으로 반응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별로도 다양한 차이가 밝혀졌는데 먼저 성별로 희망하는 직업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들은 보다 안정된 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남자보다 훨씬 높았으며, 경제력이 있는 직업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여자들이 공무원이나 교사 교수 등의 직업선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다 안정을 지향하고,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사업가나 성공한 벤처창업자와 같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하여 선호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해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역 또는 성에 따라 경제적 빈부격차가 더 이상 대물림되거나 악화·고착되는 악순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라. 관련 후속연구의 지속적 추진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인이자 현재의 주요 자원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꾸어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때 미래사회의 발전이 보장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치관이나 세대 간 의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실증적 연구가 요청된다. 청소년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사회문제의 근본적 예방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 격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효과의 실효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제반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도 이미 늦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청소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도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청소년을 바르게 이해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청소년 관련 후속연구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우선순위에서도 조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변화 가능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크다.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효율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청소년 연구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 인식전환과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V.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1.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요소와 갈등의 처리 과정을 새터민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한 사람들이 새터민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새터민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통합과 남한 주민의 북한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들어와서 남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적응한다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갈등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새터민으로 대표되는 북한 문화와 남한의 주류문화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통합’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갈등을 새터

민에 의한 '갈등의 해소'라는 관점이 아니라 새터민과 남한 사람들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변환'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갈등의 요소를 남한 주민과의 주요 접촉면 및 생활의 주요한 장을 분석 단위로 하여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직장, 지역사회를 문화갈등과 문화적 적응 행위가 일어나는 세 가지 중요한 장으로 보고, 이러한 영역에서 여성, 남성, 청소년 등의 새터민 집단과 남한 주민이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지, 새터민들은 남북한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특히 자신에게 가해지는 사회문화적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남한 사람들은 새터민과 새터민이 느끼는 차별과 소외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새터민들이 자신이 부딪히는 갈등을 해결하고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자원을 동원하고 어떠한 갈등 해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터민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새터민의 문화적 통합과 남한 주민들의 북한문화 이해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를 추출하고, 문화통합의 촉진을 위한 통합의 관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20세 이상 새터민 성인 남녀 28여명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표집하여 미리 작성한 질문문항에 따라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2. 새터민 정착 현황 및 지원체계

가. 새터민 정착 현황 및 주요 동향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탈북, 입국동기와 유형, 그리고 입국자들의 인적특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첫째, 탈북 및 입국 동기가 달라지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여성들의 입국이 급증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가족단위의 입국 사례가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급증하면서 연령별, 직업별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나. 지원체계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은 탈북동기, 입국경위 등을 묻는 합동조사를 마친 후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옮겨져 일정 기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적인 소양교육과 함께 취직 및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새터민들은 거주지를 배정 받아 사회로 나가게 되며 이때부터 남한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 또한 남한 사회로 편입된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일정 기간 취업알선, 의료 및 생활보호, 지역안내 등 정착 지원이 이루어진다.

3. 새터민 문화갈등의 요소

가. 가정과 가족관계 갈등

남한사회에의 정착 및 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새터민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가족이다. 그러나 새터민 입국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이들의 가정이 결혼유형 및 가족형태에 있어 다양화 현상을 나타냄에 따라 새터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 요인 및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자녀간 의식격차, 자녀양육 부담, 자녀교육문제, 부부 간 갈등 등으로 집약된다.

새터민 가족의 부모·자녀 간 의식격차로 인한 갈등 요인은 대부분이 남한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세대 간 문화적 괴리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갈등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새터민 가족은 북한에서 아버지 중

심의 가부장적 가족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새터민 부모세대들이 남한의 이질적인 청소년·신세대 문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세대갈등 양상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북한에서 무상의무교육제, 무상의료제 등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이 덜했던 새터민 부모들은 북한에서와는 다른 남한사회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 및 자녀양육 방식과 관련해 당혹해하며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낀다. 자녀양육의 부담감은 새터민 부모들의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로 인해 심화된다. 새터민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남한 가정의 부모들과 다를 바 없으며, 새터민 부모들 역시 남한 가정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에 위해서는 희생적인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터민 부모들은 북한과는 다른 교육제도, 교육환경 및 조건 등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교육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기 쉽다. 새터민 가정의 자녀교육문제로 인한 갈등은 주로 자녀교육 관련 정보·지식 부족,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사교육비 부담 등에서 비롯된다.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새터민 부부 간 갈등이 심각한 정도인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남한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새터민 부부들도 주로 자녀나 시댁 관련 문제, 남편의 과음과 돈 지출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다. 새터민과 남한 배우자 사이에서는 남북한 간 문화적 이질화로 인한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나. 지역사회 갈등

새터민들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남한 주민의 냉대와 편견이다. 새터민들은 자신들에 대해 남한 주민들이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며 남한주민의 냉대와 편견 때문에 남한 사회에의 적응이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남한 주민들의 냉대와 편견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북한에서 왔으며 사고방식이 다르고 말씨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 주변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며, 새터민들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관심 및 태도가 자신들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남한주민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새터민들은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며,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생각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과의 교제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또한 새터민들 가운데 다수는 남한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어려우며 남한주민들의 의식적인 과도한 동정, 지나친 관심, 호기심 등으로 인해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한다.

다. 취업 및 직장생활 갈등

새터민들은 직장생활을 통해 남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전면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남북한 사회와 남북한 사람들 간의 차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취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려는 이들의 꿈은 그 시작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새터민들에게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좁은 문’이다. 구직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새터민들은 진학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에 필요한 직업 기술을 갖추는 것, 즉 ‘미래를 위한 유보’를 선택하거나, 정부의 지원금과 비정규직 수입에 의존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직업경력의 단절을 경험한다.

취업한 후에도 새터민들은 직장 내에서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 컴퓨터와 영어 등 직무능력으로 인한 문제, 남북한의 노동 강도와 노동 규율 차이로 인한 갈등, 무관심과 경쟁주의가 만연한 남한의 직장 문화로 인한 갈등, 남북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부정적 태도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는다.

4. 남북한 사회와 새터민 차별에 대한 시선들

가. 남북한 사회의 특성에 대한 새터민의 인식

새터민들은 남북한 양쪽을 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남북한 사회의 특성을 비교하여 인식하고 있다. 새터민들이 남북한을 비교하는 하나의 축은 가난, 공포, 통제로 상징되는 북한과 풍요, 자유로 상징되는 남한이다. 여기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명백하다. 비교의 또 하나의 축은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첨예한 자본주의 사회로서의 남한과 국가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고 따듯한 정이 있는 사회로서의 북한이다. 새터민들은 남한에 왔으니까 여기의 문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이에 대하여 복잡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나. 남한 사람이 본 새터민

새터민들을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신변보호담당관과 새터민 지원단체 간사, 자원봉사자들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남한 사람들은 새터민들이 공권력을 두려워하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순종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한 사람들은 새터민들이 자존심이 강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만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타협을 모색하며, 성격이 급하여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다. 차별을 보는 두 개의 시각

새터민들은 직장을 비롯한 남한 사회에서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다. 새터민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나 고객들로부터 불신과 의심, 이유 없는 거부감, 적대감, 무시와 경멸, 따돌림과

소외,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경험한다.

그러나 형사들이나 교사들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새터민들은 ‘자기들이 차별을 만든다’고 한다. 업주나 동료들의 입장에서 새터민을 보면 일숨씨는 없고, 쉬운 일만 찾으며, 게으르고, 일일이 시켜야만 일을 하고, 성질 있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니 그런 근로자를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각 사이에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남한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성찰에 기초한 새터민의 인식 변화와, 남한 사회의 자본화 중심주의와 새터민에 대한 사회구조적, 문화적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반성에 기초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양자를 필요로 한다.

5. 문화통합의 자원 및 전략과 새터민의 정체성

가. 문화통합의 자원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성적 특성, 가족 요인, 학력과 직업경력과 상징적 자본, 사회적 연결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성적 특성 중 자기효능감, 긍정적 사고, 이해와 공감능력, 목표의식 등과 같은 특성들이 갈등 해결과 문화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존재와 가족 간의 유대와 응집성은 남한 사회에서 새터민들이 겪는 심리적, 문화적 갈등의 완화와 적응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북한에서의 학력과 직업경력, 특히 남한에서 교환 가능한 기술 분야의 학력과 직업경력, 북한 사회를 경험한 새터민이라는 상징적 자본 또한 사회문화적 적응과 통합에 영향을 준다. 새터민들의 남한사회 통합 유형과 속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 변수는 이들이 탈북과정과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구축하는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다. 새터민의 사회적 연결망의 기본적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은 탈북과정에서 만난 종교단체 및 NGO 관계자, 남한 내 가족, 하나원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하나원 강사, 신변

보호담당관 등이다. 반면 새터민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은 취약하다.

나. 갈등 해결과 문화통합의 전략

새터민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직장 영역에서 부딪히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본인이 지니고 있는 자원과 갈등 해결의 전략을 활용하여 해결해나간다. 정체성 노출 여부와 갈등 조정 양상을 두 축으로 하고, 정체성 노출은 감추기와 드러내기로, 갈등조정양상은 대립, 인정과 조정, 회피로 나누어 새터민의 갈등 해결 전략을 구분한 결과 네 가지 유형의 갈등 해결 및 문화통합 전략이 도출되었다.

I유형인 드러내기/대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맞서기’, ‘공권력 의존’ 유형이 있으며, II유형인 드러내기/인정·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주장하기’, ‘극복하고 힘 기르기’,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유형을 볼 수 있다. III유형인 드러내기/회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보하기’, ‘순종하기’를 볼 수 있고, IV유형인 감추기/회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숨기’를 볼 수 있다.

다. 문화통합과 새터민의 정체성

남한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새터민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터민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남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북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등 다중적인 정체성을 형성해나간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를 맞아 급격하게 변화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변화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새터민의 정체성 형성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남한에서 살면서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밝히고 지낼 것인가, 숨기고 지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새터민들의 정체성이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한 사람들의 지지, 신뢰와 수용이다.

VI.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1. 서론

가. 연구 목적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이동이 상시적,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결혼을 통한 여성 이주의 증가 추세가 현저하다. 2006년 4월 현재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55,408명으로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6).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결혼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국민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각종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지 못한 채 고립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감내와 적응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주여성이 직면해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도 출신지에서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 소외 등은 국경을 넘어온 이주여성의 특수한 경험이자 인권 침해나 빈곤 등 제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 해결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더욱이 생활 전반에서 그녀를 둘러싼 ‘한국인’들이 문화적 배경과 차이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 그녀가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이해하고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주여성이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자 이웃, 친구, 사회성원으로써 어울려 살아가기는 어렵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과 일차적 생활세계의 구심점인 가족성원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심과 가치평가, 의사소통 현실을 점검하고 이를 둘러싼 이주여성들의 갈등 경험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심과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여성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초국가적 이동에 따라 겪는 문화적 차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과 일차적 생활세계의 중심점인 가족원들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관심과 가치평가의 역동성, 소통의 욕구와 해소방식, 이 과정에서 전개되는 갈등 양상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사례를 통해 정책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1) 심층인터뷰 : 여성 결혼이민자 38사례, 가족 30사례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 개도국 출신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계 중국인 출신 여성과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각국 출신 여성, 소위 ‘교포’로서 한국계 중국인들과 유사한 특징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던 서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니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여성, 그리고 가족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2) 정책·사업현황 조사: 822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대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전국 8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과 2006년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였다.

3) 해외 주요정책 분석: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대표적 이민국가로서 이민자 관련 정책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 기초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분류되는 독일과 일본의 주요 정책동향을 분석하였다.

2.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차이 인식과 갈등 경험

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문화의 광범위한 측면 가운데에서도 결혼이주 여성들이 흔히 느끼는 차이는 일상생활의 가시적 행동과 음식문화, 언어와 이에 동반된 문화적 전제, 젠더구조와 가족구성, 가족 내 역할기대 등의 차이이다.

1) 언어의 차이

이주여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언어의 차이이다. 한국계 중국인이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한 언어의 차이에 직면해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를 경험하는 이들은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여성들로 이들은 결혼과 함께 문자와 어휘는 물론 음성과 음량, 어순과 시제, 접속사 등의 문법 등 언어의 모든 측면에서 전혀 다른 세계에 직면하면서 상당한 문화 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

2) 일상생활양식의 차이

언어와 함께 여성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음식의 차이로 재료와 맛, 향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다가오면서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음을 실감한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출신 여성들에게는 한 끼 식사에 오르는 음식의 가짓수와 양, 특히 명절

과 제사의 음식가짓수와 준비량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아 ‘한국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먹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다양한 음식을 집에서 손수 준비하는 것 역시 많은 여성들에게는 낯선 모습이며, 그것이 한국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은 막상 닥치지 전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바이다. 게다가 여유를 갖고 음식과 대화를 즐기는 동남아인들에 비해, 가족들은 말없이 ‘빨리빨리’ 식사에 열중하면서 여성 자신에게도 속도를 내 식사하고 음식 준비도 ‘빨리빨리’, 식사 후 뒤처리도 재빠르게 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당황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한 끼 식사 후 남은 음식을 다음에 다시 먹는 한국인들의 식습관 역시 동남아 여성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3) 가족구조의 차이: 양변적 체계 vs. 부계가족

가족 구성, 친정 및 시댁(남성에게는 본가와 처가)과의 관계, 가족 내에서 여성의 권한과 역할 영역, 시부모를 비롯한 시댁식구의 며느리에 대한 태도 등 가족생활의 제반 사항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출신문화와 커다란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한국계 중국인 및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모든 국가출신 여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통적으로 공계(cognatic) 또는 양변적(bilateral) 가족구조를 지닌 동남아-베트남(특히 남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출신 여성들은 여러 면에서 가족관계에 혼란을 느낄 정도로 큰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공계 또는 양변적 체계를 ‘자연적인’ 질서로 내면화한 이주여성들에게 부부 간에 벌어지는 사안이나 가사,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일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소관이며 부부의 의견 조율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규정된다. 이에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식구가 관여하거나 심지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핵가족

을 넘어서 시댁식구에 대한 가사서비스를 며느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가족구조에 있어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차이는 결혼한 딸과 친정과의 관계로 양변적 체계에서는 딸이나 아들 모두 부모에 대한 상속권과 부양 의무를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보다 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Potter, 1977; 김민정, 1997).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지니는 권한과 역할은 결혼에 의해 중단되거나 변화하지도 않아 결혼을 통해 부부 중 특정인이 다른 쪽 가족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가 자신의 출신가족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기대를 충족시킴으로써만 사회적 위상을 확립해갈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재산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결혼기간 중에도 부부는 각자의 재산권을 유지하며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운영해나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질서를 체화한 여성들에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며, 그 일을 통해 얻은 수입의 일부를 친정에 송금하는 것은 가족들의 기대에 충실한 딸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더 이상 친정 사람이 아니라 시댁식구’라고 강조하고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집안일은 소홀히 하고’ ‘돈만 안다’고 비난하는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4) 젠더구조의 차이: 유연한 성역할구조 vs. 경직된 성별분리체계

모든 국가 출신의 이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출신지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는 부부간 역할규정과 가사 분담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출신지에서는 집안일에 몰두하기 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벌이는 여성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 등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기대를 하기 힘들다는 점을 발견하면

서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부부간 가사 분담을 당연시했던 여성들은 일대 혼란에 휩싸인다. 상당수의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여성은 집에만 있는 것’으로 당연시할 뿐 아니라 ‘집안에서 음식준비와 육아 등 가사는 여성이 전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들에게 가사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크게 다가올 뿐 아니라, 아무리 많은 양의 가사를 감당해야 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치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

음식과 주거양식, 목욕문화, 언어와 문화수행방식, 생활예절, 가족양육방식, 가족관계와 젠더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이 당연시해온 질서와 전혀 다른 한국문화의 면모 속에서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은 시작된다.

1) 일상생활의 혼란

이주와 함께 이제까지 자신이 익숙해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에 처하게 된 여성들은 예외 없이 생활의 방향타를 잃을 채 먹고 자는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이에 더해 낯선 생활 환경에 놓인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을 안내하면서 상당부분 생활세계를 조성하는 권한을 가진 가족과 그 외의 한국인들이 여성들이 익숙해있는 음식과 목욕문화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하하거나 한국식을 강요할 경우에는 심리적 갈등과 위축 겪기도 한다. 또한 출신문화에서 오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는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인들과 심리적 벽을 쌓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과 이로 인한 갈등은 이주 초기에 여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이지만, 가족들의 관심과 이해가 있는 한 낯설음은 차츰 완화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은 오래지 않아 극복되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이 최근에 이

주해온 여성들은 현지에서 이미 한국드라마나 한국인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인의 관습과 생활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상의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2)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의 한계

여성들이 출신지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가장 공통적이고도 커다란 어려움은 ‘한국사회’에서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그 수행방법에 익숙해지고 상대방의 행동에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어와 예절, 역할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 다양한 면이 포함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의 문제로서 한국어 구사 수준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은 언어소통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베트남, 태국 여성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ㄹ’ 받침이나 일부 이중모음 등 특정 발음을 정확히 하기 힘들고 ‘ㅈ’, ‘ㅊ’, ‘ㅉ’ 발음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들에게 정확한 어순에 따라 말하고 시제와 접속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진다. 특히, 출신국가나 일상 언어 수준에 관계없이 이주여성들이 무엇보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존댓말이다.

생활적응에 비해 언어와 문화소통능력의 한계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면서 여성들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자녀의 문화소통능력과 이를 기초로 성취에 있어 자신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 부족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며 때로는 자녀들로부터도 어머니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3) 수용의 경직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소외

재문화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이주 여성들은 언어소통과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인들과 대면하고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들은 자신이 익숙한 틀과 한국문화의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는 나름대로의 적용 전략, 예를 들어 한국어 단어를 모국어 구조에 따라 배열하면서 접속사와 시제 변화는 무시하는 등의 전략을 일반적으로 구사한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해서 체득한 바의 특이한 혼합형 어법이나 발음 등은 흔히 놀림과 훈육의 대상이 되기 쉽다. 생활 곳곳에서 부딪히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놀림과 훈육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인과의 관계, 특히 자신들의 특이한 발음과 어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틀리다’고 지적하며 ‘올바르게’ 고치려는 사람들과의 대면을 꺼리고 있다. 특히, 출신사회에서 학력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여성들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뚜렷하다.

혈연, 지연, 학연 등 한국사회의 주요한 관계 형성통로를 결여한 채로 가족 외부에서 관계를 맺을 기회가 거의 없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무능력과 잘못의 지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가족 이외 한국인과의 접촉을 꺼리기도 한다. 결국 여성들은 철저하게 가족 내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며 가족 외부의 한국인과의 관계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남편이 곁에 없을 경우에는 주위에 도움을 청할 데도 없을 정도이다.

4) 가족에 대한 이해의 한계

언어소통과 외부 관계의 제약 속에서 이주여성들에게 가족은 한국 생활세계의 전부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주여성들이 언어소통과 함께 지적하는 한국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들 가족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갈등이 야기된다는 데 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며 당황스러운 행동을 서슴치 않고 심지어 이유를 알 수 없

는 화를 내기도 하는 가족들을 일상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이다.

3.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여성과 가족들의 상호 대응양상

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과 수용성

결혼이주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족들은 국제결혼을 선택할 당시부터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적 기대보다는 한국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국내결혼에 대한 낮은 기대에서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아온 여성을 부인이나 며느리로서 마주 대하면서도 출신국가와 문화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 관심을 두기 보다는 문화적·혈연적 동질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결혼중개업체의 부정확하고 왜곡된 홍보성 정보를 기초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도 여성의 출신국가와 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과 이해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부인이나 며느리 또는 주위의 유사한 여성들이 내보이는 몇몇 특징을 중심으로 출신국가에 대한 견해가 분명해지기는 하지만 ‘고집세다’, ‘게으르다’, ‘가난하다’는 식의 피상적이고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출신국가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 관심을 결여한 채 지극히 제한되고 심지어 왜곡된 정보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주여성과 한국인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고 또 관심을 둘 필요조차 느끼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어의 차이는 가족들이 결혼 전부터 상당히 고민하는 바이기도 하

다. 이와 함께 가족생활을 통해 음식의 차이나 예절의 차이 등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생활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언어와 음식, 예절은 물론이고 가족관계와 역할기대, 젠더구조 등에 있어서 자신이 당연시해온 질서와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겪고 가족과 갈등상황에 놓이는 여성들과는 달리 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의 존재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오직 언어, 음식, 예절 등 제한된 분야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족들에게 이러한 ‘차이’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아이 언어교육에 있어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크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나. ‘한국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동화 요구

가족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갖가지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여성들의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문화’ 수행능력의 한계에서 찾고 있으며, 여성들이 한국문화를 익혀감에 따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가족들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을 ‘버리고’ ‘한국문화’에 동화해 ‘한국사람이 될 것’을 직접 요구한다.

동화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는 한국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차이로 인식하는 부분, 즉 언어와 요리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 특히 웃어른에 대한 예의와 며느리로서의 의무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동일한 요구가 다각적으로 반복된다. 이외에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 경험에 대해 가족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하며, 차이를 둘러싸고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요구, 특히 한국의 가족구조와 젠더관계의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강력한 동화요구와 동시에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너무 잘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순적 태도가 나타나

기도 한다는 점이다. 즉, 집안에서 부인으로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고 한국인 아이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며느리로서 시댁에 충실한 존재를 원할 뿐이며 그 여성이 가족을 벗어난 ‘한국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결국 여성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요리, 예절 등으로 강조되는 ‘한국문화’란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집안에 충실한 여성의 모습일 뿐이다.

다. 여성들의 적응 노력과 변화 요구

가족들의 강력한 동화 요구와 자신의 출신문화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에 대해 여성들은 해당되는 문화적 요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한편으로 한국어와 음식에 대한 동화 요구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큰 무리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한국어 습득은 일상생활 영위 뿐 아니라 자녀양육을 위한 어머니 역할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위한 노력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러나, 언어와 음식습씨 습득 요구에 대한 여성들의 부응 노력이 자신의 출신문화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언어와 음식 등 자신의 출신문화가 가족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한국의 경직된 젠더구조, 특히 여성들의 과중한 가사와 자녀양육 부담, 자녀양육 및 교육방식, 시댁과 친정에 대한 비대칭적 관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한국식’과는 전혀 다른 출신문화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그것을 가족관계의 하나의 축으로 삼으면서 부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권한을 확보하고자 한다.

라. 가족 내 문화적 차이의 충돌

결혼을 통해 가족 내에서 마주하게 된 이주여성과 남편 또는 시어머니는 서로의 출신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에 있어 격차가 크고 이를 둘러싼 요구의 방향도 서로 다르다. 결국 ‘한국여성’에 대한 가족

들의 동화요구와 출신문화에 대한 이주여성의 인정-적용 요구는 일정한 지점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상대가 대부분 시어머니라는 점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의 표면적 요인은 며느리의 한국음식습씨나 음식취향, 가사 관리, 접대예절과 태도 등 다양한 듯 보이나, 그 기저에는 서로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적 전제가 깔려 있다.

핵가족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는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남편과 자녀에 대한 의무’와 동일시하지만, 시댁 식구의 식사 준비 등 며느리 역할 역시 여성에게 주어진 가내 의무의 일부로 전제하는 시어머니는 ‘그것만으로는 가족 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 쉽다. 결국 한국 가족에서 시어머니의 몫으로 규정되는 ‘며느리 집안사람 만들기’ 시도와 다른 한편으로 핵가족 중심성과 그 안에서 자신의 독자적 권한을 의심치 않는 이주여성들의 전제가 정면으로 대치되면서 며느리 의무를 둘러싼 이주여성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빈발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시도가 완곡한 권유가 아니라 며느리의 출신문화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강압적인 명령으로 표출될 경우에는 갈등의 심각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자녀양육 권한 역시 갈등거리로 확대가족의 일원으로 손자, 손녀를 대하는 시어머니에게는 자녀 양육에 대해 일정부분 자신의 발언권이 있는 것으로 전제되지만, 며느리는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이며 그에 대해서는 자신만이 배타적인 권한을 지니는 것으로 당연시하면서 시어머니의 관여를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갈등의 날을 세운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사안을 둘러싸고도 남편 대신 시어머니와 갈등하는 경우가 흔하다. 가사와 양육 분담을 요구하며 남편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시어머니의 편견과 간섭이다. 시어머니는 가사와 자녀 양육 역시 집안일의 일부로 시댁에 대한 며느리 역할과 함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르쳐야 할 부분으로 여기지만, 핵가족 지향적인 며느리에게 부부간에 해결해야 할 일에 시어머니가 관여하는 것은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직접 일을 해서 자녀양육비와 가정생활비에 보태고 일부를 친정에 보

내 자신에게 부여되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여성의 소망에 대해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나서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려고 집안일은 소홀히 한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시댁의 재산을 가난한 친정에 빼돌리려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월권행위로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기도 한다.

서로의 권한과 역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둘러싼 엇박자는 양면적 틀에 따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과 부계가족의 원리를 이어받아 집안 며느리를 들인 시어머니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고 심화되어 가는 갈등을 중재할 사회적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한 집’에 살면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듯이 보이는 이들은 서로 다른 집단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할 뿐,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계를 증진시킬 가능성을 찾기는 힘들다.

4.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정책 · 사업 현황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전개해가고 있으며,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 사업시행기관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농업기술센터 등 총 822개 기관 중 2005년에는 총 10.5%인 86개 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던 데 비해 2006년에는 29.4%에 달하는 242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시행기관 수가 2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지역에서는 전체 기관의 40% 이상의 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요사업

각각의 사업을 시행한 기관의 비율을 보면 사업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 교육을 시행한 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요리강습을 시행한 기관이 많았다. 이밖에 문화유적탐방, 전통문화체험, 생활예절교육 등을 시행하는 기관이 비교적 많았고 가족관계 교육을 시행한 기관도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외에 컴퓨터 교육이나 교양취미교육, 위안행사 등을 시행하는 기관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이주여성의 사회적 연망 형성이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각종 상담,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이주여성의 출신문화교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이들 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들어 시행기관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심스럽게나마 향후 확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산후도우미·가사도우미 파견, 친정보내주기사업, 풍물전시교류, 요리교류 등에 대한 관심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출신문화를 한국사회에 내보이고 한국인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풍물전시교류나 요리교류 등의 사업 시행기관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 제한점

현재 추진되는 여성이민자 관련 정책은 한국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적응을 돕고 결과적으로 동화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인들이 이주여성의 출신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는 크게 한정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요리와 수공예품을 소개하는 정도로 출신문화의 풍부한 모습을 경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출신문화에 대한 소개를 넘어 문화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인정,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기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한국문화의 다양한 부문 중에서도 언어적응, 요리, 전통문화와 예절

등 한국인 가족들이 이주여성에게 요구하는 바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데 비해,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제기와 요구에는 무관심한 점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주여성들은 언어와 일상생활의 적응을 힘들어하는 만큼, ‘요리하고 아이 키우고 예절바른 여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경직된 젠더구조와 여성에게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가족문화, 차이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일반적 태도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와 출신문화에 대해 남편들이 보다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요구하고 자녀가 한국어와 함께 자신의 모국어와 출신문화를 어느 정도 습득하기를 원하고 있다. 자녀양육방식과 부부간 역할, 명절과 음식문화 등에 있어 ‘한국식’의 수용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주여성들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가족관계와 젠더구조를 재구성하는 계기로 삼기 보다는 이주여성들의 ‘한국식’ 수용을 증진하는데 일방적인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5. 정책 제언

가. 정책 방향의 다각화를 통한 총체적 접근 강화

호주와 캐나다 등 대표적 이민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민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던 일본과 독일에서도 최근 들어 이주민의 초기 생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사회문화적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총체적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지원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과 태도를 환기시키고 이주민과 일반시민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이주민의 문화적 자원에 적극적 가치를 부여하는 등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본격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 체계화

초급 수준의 한국어교육이나 전통문화교육, 지역생활안내 등을 수료한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지니면서 보다 발전된 내용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여성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인 만큼,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이주여성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예: 독일에서 사회통합코스를 시행하면서 교육참여 성과를 체류연장 허가와 연계, 호주에서 AMEP 수료자에게 시민권 취득 인터뷰 면제)

다양한 언어를 통한 통·번역 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행정이나 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통·번역 서비스가 우선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생활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주여성들이 본격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한 과제이다(예: 캐나다 PIRS의 다리 놓기 프로그램(Building Bridge Program)).

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 증진 및 쌍방향 소통 기반 조성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 및 변도 사업에서 탈피해 여성의 출신문화와 한국문화간의 쌍방향 소통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아시아 개도국 출신으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라는 점 이외에 그들의 출신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가 팽배해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은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의 주요 출신국가인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생산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발적 토대 위에서 비교 문화적 이해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예: 일본, 호주에서는 국제교류센터, 공민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각국의 요리나 놀이, 음악, 춤 등은 물론이고 젠더구조,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 보다 심도 있는 주제에 관한 시민워크숍 개최)

특히, 가족들이 각국의 문화, 특히 가족문화와 성별역할구조, 여성들의 활동상 등을 이해하고 이를 다문화 가족 내에 수용하여 발전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의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실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증진의 가치, 실무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원인과 해법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교육의 일환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 부여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주여성과 여성들의 출신문화에 대해 우리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데, 기존의 정책에서는 이주여성을 재문화화의 과제를 안고 있는, 즉 새롭게 배워야 하는 존재로만 상정했을 뿐 여성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자원, 인적 자원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면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 결혼이민자 상당수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인적 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이주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민감하게 경험하고 이에 적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자원을 획득한 만큼, 여성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번역 업무 등의 분야를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출신문화, 특히 모국어에 대한 가치 부여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식교육에서 인정하는 제2외국어의 범위를 베트남어, 태국어 등 아시아 각국 언어로 확대하고 학력이나 국적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 제2외국어 특별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마.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한국사회와 호혜적 관계 증진

이주여성의 관계망 확충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활상의 관심이 유사한 한국인 동년배들과 함께 만나 친구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각자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호혜적으로 교환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한국인 친구는 한국어나 한국음식을, 이주여성은 자신의 모국어나 음식을 가르치면서 자녀교육이나 여성의 사회활동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은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여성과 한국인 여성이 공동으로 단체를 조직, 운영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나 관련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일방적인 관계 진행을 교정하는데 중요하다. 이미 일본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독일 등에서는 이주민들의 요구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특화된 기제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전면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조직하여 한국생활에서 직면하는 각종 문제나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1

국민통합 및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2006년 12월 28일 인쇄
2006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서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89-8491-158-5 93330



한국여성개발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22-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Tel:02)3156-7000(代) Fax:02)3156-7007



9 788984 911581

ISBN 89-8491-158-5